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24 통권 제25호

권두언

코로나19 이후,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민 자녀 등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 확장 이면에서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의 혁신 방안도 필요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이어져 학교 통폐합과 인구 소멸 지역의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체계 재정립에 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방향 수립도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움직임 역시 새로운 방향의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 도시 여건과 미래 트렌드를 고려한 교육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의 기획논문 주제를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로 정하고, 네 편의 기획논문을 최종 게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획논문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 요인과 진로 결정 효능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전공 선택 요인이 전공 만족, 전공 몰입, 그리고 진로 결정 효

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 과정을 대학 졸업 이후 진로 선택 단계까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논문은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주민 자녀를 위한 운영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우리나라에 비해 빠른 해외 ESL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한국어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 안팎의 운영 및 지원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ESL 교육에 대하여 먼저 분석과 고찰을 진행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학습자를 언어 강화, 학습 강화 학습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논문은 두 번째 기획논문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이 주는 효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고,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획논문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온라인 정보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ICT 리터러시(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가 필수적인 발달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대상의 ICT 리터러시의 영향 요인을 가정환경과 학교의 수준 차이를 통하여 살펴보고, ICT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은 총 6편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위험요인 비교분석」,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 만족과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시공간적 특성 탐색 방법론」, Bike-Sharing as Entertainment: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n the U.S.가 실렸습니다.

2007년 창간한 학술지 『도시연구』의 발간 목적은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기획논단의 학술적 논의가 관련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인천연구원은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연구』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해 주시는 연구자와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 6. 30.

편집위원장 이 왕 기

목 차

기획논단

- 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김규미 11
- 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강신희 41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주·김혜미 6
- 청소년 ICT 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 김지민 111

일반논문

-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협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윤상훈·윤희원 155
-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만족과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 박승화·정철 183
-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225
-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손창우 273
-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시공간적 특성 탐색 방법론: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을 사례로 박소현·윤정원·김민수·구양미 309

- Bike-Sharing as Entertainment: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 Kihyun Kwon 343

서 평

-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 민규량 375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2016, 북스톤

『도시연구』 휘보

- 『도시연구』 발간연혁 385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389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390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395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406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409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416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428

기획논단

| 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김규미

| 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강신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주·김혜미

| 청소년 ICT 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김지민

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김규미***

한
진
석
·
김
규
미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전공선택요인과 관광 관련 전공학과
2. 전공만족
3. 전공몰입
4. 진로결정효능감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3. 자료수집 및 분석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V. 결론

* 본 논문은 2023년도 한국관광진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연구교수, 교신저자(E-mail: kyumee0705@daum.net)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11>

투고(접수)일 2024.4.1. 심사(수정)일 2024.5.20. 게재확정일 2024.6.17.

I. 서론

진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에서 관광 분야는 중대한 변화의 교차로에 서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례 없는 도전의 시작은 관광 부문의 교육 수요와 관련 직업에 대한 열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자는 47만 924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전자신문 2023/4/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부문을 위협에 빠뜨렸지만, 특히 관광 산업에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규미 2021; Nicola et al. 2020; Zenker and Kock 2020).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여행 제한 등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원초적 방법과 전염병 억제제를 위한 조치 과정에서 관광 수요는 큰 타격을 받았다(Kumar and Managi 2020; Worsnop 2019). 그러나 코로나19가 풍토병(Endemic: 엔데믹)으로 자리 잡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관광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규미 2022).

관광 수요의 증가와 함께 관광 산업 종사자의 고용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관광 산업은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탁월한 시장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유발 일자리가 11.9만 개 증발했으나(한국경제연구원 2020) 포스트 코로나로 관광 회복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제주의 소리 2021/12/13).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 회복에 따라 관광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인력 채용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Hotel & Restaurant 2023/2/25).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의 성장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 취업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즉, 세계화된 시장의 복잡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광 전문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관광 산업의 경우 관광에 대한 지식과 능력 및 성품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 관련 전공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 관련 전공 특성상 친숙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전공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여행, 호텔, 이벤트, 항공, 문화유산, 레저 등 익숙한 분야의 직무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관광 관련 전공이 안정적이고 흥미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게 여긴다.

하지만 기존의 전공선택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입시제도와 전공선택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대학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 취업의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송지현·정은영 2020; 주영주·김동심 2014). 또한, 전공선택요인에 따라 불만족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전공에 몰입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토로한다. 따라서 관광 관련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잠재 인력들(관광 관련 전공)을 대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 실무진 및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교육 변화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전공선택요인과 관광 관련 전공학과

전공선택요인은 전공선택 또는 학과선택이라는 개념으로 하여 학생들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10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내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관심, 태도, 친구 및 가족 등을 포함하여 선호, 적성, 미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친다(Fouad et al. 2016). 전공선택 과정이 개인의 일생에 걸친 다각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삶과 추후 진로결정효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Amir and Gati 2006). 좋은 전공선택이라함은 자기평가,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능력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Betz 2007).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인 Maguire사는 신입생 유치(enrollment)와 유지(retention)를 위한 7년간 고등학교 학생 17,983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교육요인, 환경요인, 유의미한 타자요인, 특성요인, 이념요인, 성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손준종 2002). 임미라·김윤민(2013)은 관광관련 전공선택요인이 학생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선택 동기는 대학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대학시설, 대학명성, 성적, 주변권유를

관광관련 전공선택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2019년 4년제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다음으로 관광전공학과의 가장 많았으며(연합뉴스 2019/9/14) 이러한 현상은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관광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그것으로 보인다(한지숙 2021). 1964년 경기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 관련 학과가 개설된 이후, 2021년 기준 159개 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대학이 관광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전문 교육과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학과의 특성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높은 취업 문턱과 대학 졸업 후 실수로 대비 타 전공자와의 취업 경쟁 심화로 관광 관련 전공자의 취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홍미영·김정매 2021). 학생들 대부분이 전공에 대한 탐색이나 이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과 전공과의 연계성, 개인적 특성이나 관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친숙성이 높은 전공, 대학의 간판, 주변의 권유,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홍충선 2019).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편입이나 전과 등 중도 포기를 한다는 연구 결과(김보균 외 2019)가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관광 관련 전공 학과를 관광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관광 및 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관광관련 전문지식 및 능력을 발휘하여 관광자의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학과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로 가장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Westermann et al, 1996). 그러나 단순히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 학문 분야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 분야에서 깊은 학습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공만족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그리고 관련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공만족은 학문 분야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전공만족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 전공 및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며, 학생으로서 느끼는 자신의 역할이나 경험에 대한 즐거움 및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Lent et al, 2007).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기분 좋은 감정 상태, 신념, 가치, 욕구 및 태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한예정·이종호 2013), 학업 성취도나 직업 적응력 등 다양한 요인에 만족감을 주며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사순철 2004; Sevet and Metz 2014).

이러한 전공만족은 대개 학과만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Veenhoven(1996)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적 측면은 개인이 진로나 직업을 위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학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기대가 달성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고, 정서적 측면은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감정, 태도, 즐거움의 정도이다(정희영·박옥련 2009). 즉, 전공만족은 전공 선택 후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며(김태희·장경로 2007), 전공만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전공을 선택한 후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평가된다(윤정현 2013).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 하는 일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미래에 갖게 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공만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ilsom과 Coughlin (2017)은 기회, 자기 인식, 직업 인식이 전공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제시하며 의사결정 지향성(Leach and Patalall 2013), 학문적 자기효능감(Garriott et al. 2015), 학습 자기효능감(Chukwuedo and Ogbuanya 2020) 등이 전공만족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전공만족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전공몰입(홍세명 2022; Kim and Kim 2017; Womack et al. 2018), 진로결정(류인평 외 2019; Kim and Kim 2017)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삶의 질에 만족으로도 이어진다(Lent and Brown 2019). 즉,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직업의 장래성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Barber et al. 2009). 또한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의지적 자율성은 전공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Schenkenfelder et al. 2020) Pesch 외(2016) 연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전공요인이 전공만족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실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dison 외(2018)는 매스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전공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정원(2022)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호텔관광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중 적성, 외국어, 취업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최영민·이성근(2001)은 관광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식습득욕구, 진로선택욕구, 인격형성욕구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박무규·이은영(2023), 박영기·김민준(2022), 성은희(2019) 등의 연구자가 관광 분야 전공선택이 학업만족이나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공선택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크게는 내부적 요인인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인 사회적 요인임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전공몰입

전공몰입은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분야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며 몰두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Emos 2008). 대학 수업에서의 몰입 경험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즐거움, 자존감, 능력개발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Csikszentmihalyi et al. 2012). 이러한 몰입이 기술적으로만 숙련될 경우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며 목표가 달성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숙련도에 따라 적절한 목표가 주어지면 최적의 경험 상태, 즉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김보경·김재동 2005). 몰입은 학생들이 직업 선택과 관련된 자기 인식,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andura 1993). 이에 반해 전공몰입은 학생 신분의 유지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며 전공에 몰입하지 못할 경우 대학 중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Hagenauer et al. 2017).

한편, 전공몰입은 대학생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만족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의 역할과도 일치하는데, 적합성이 학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공몰입과 직업 선택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음이 밝혀졌다 (Porter and Umbach 2006).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해당 전공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으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래 직업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공에 만족하고 몰입하게 된다(Liao and Ji 2015).

또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더라도 학습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wach et al. 2016). Künsting and Lipowsky(2011)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때 배움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를 표현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전공만족도가 더 높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전공만족은 학업성취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낙제하거나 낮은 성적을 받거나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Wilkins et al. 2015).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전공만족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Taylor and Betz 1983).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계획 및 탐색, 진로선택의지, 직업정체성 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Rogers et al. 2008; Choi et al. 2012). 실제로 Lim and Loo(2003)는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미래 직업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Hambourger(2004)도 그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직업 관련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인지된 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이 향상되었을 때 다양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진로결정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직업 관련 업무를 유능하게 완료하는 개인의 자신감에 반영되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는 향후 직업 탐색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Betz and Vuyten 1997).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로계획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대한 인지된 지식,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 직업 정체성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Thomas and McDaniel 2004).

전공선택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Garfinkel et al. 2005; Obschonka et al. 2012) 최동주(2021)는 외식 및 조리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전공선택요인과 외재적 전공선택동기가 진로결정과 진로탐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마찬가지로 민소라·홍성훈(2019)도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iao and Ji(2015)도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개인 및 직업 선호도에 따라 전공

을 선택할 때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신감 부족은 학업성취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cansey 2000). 류인평 외(2019)는 외식서비스 및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고 몰입하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중요함을 밝혀내었고, Liao and Ji(2015)는 만족스러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이나 전공몰입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공몰입도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자기 인식,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andura 1993). 이러한 기대는 Hambourger(2004)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얻기 위해 직업 관련 기술 및 지식에 대해 인지된 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를 결정함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전공선택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전공선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전공선택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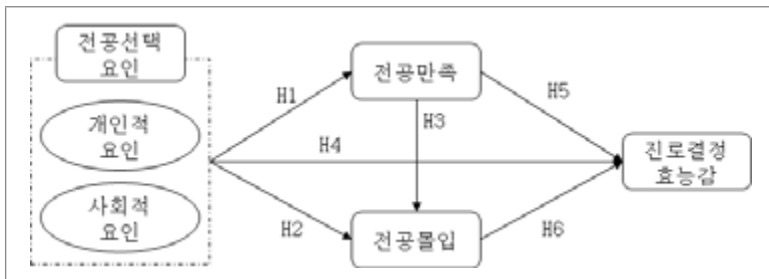
[가설5] 전공만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상술한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 내용을 차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먼저 이정원(2002)은 적성, 외국어, 취업을 제시하였으며, Lent and Brown(2019)은 성별이나 문화와 같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특정 경험의 사회적 측면을, Pesch 외(2016)은 부모의 자율성지지, 진로 복지를 전공선택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8개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최동주(2021)는 일반적 관심에 대한 전공만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공만족으로 만족도 요인을 설정하였고, Porter and Umbach(2019)는 수업 내

용, 난이도, 교수자의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전공관련활동,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으로 보았으며, Wach 외(2016) 연구자는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 학업 조건에 대한 만족 등으로 설정하였다. 류인평 외(2019)는 전공 몰입 요인을 가치 실현, 전공분야에 대한 몰두, 흥미, 장래희망, 타인 전파 등으로 보았으며, Csikszentmihalyi et al.(2014)는 활동에 대한 집중, 시간의 응집능력, 목표의 명확성 인지, 완전한 몰두와 흥미를 느끼는 상태 등으로 몰입을 측정하였다. 민소라·홍성훈(2019)은 전공몰입에 대하여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수립, 목표설정, 문제해결의 요인으로 보았고, Taylor and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¹⁾의 단축형을 근간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요인으로 보고 이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구성개념에 따른 측정도구 및 출처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출처
전공 선택 요인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개인적요인 4문항 사회적요인 4문항	이정원 2002; Lent and Brown 2019; Pesch et al. 2016
전공 만족	선택한 전공에 후회하지 않는 긍정적인 감정	5문항	최동주 2021; Porter and Umbach 2006; Wach et al. 2016
전공 몰입	전공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전공관련 활동에 자발적 행동을 취하는 상태	5문항	류인평 외 2019; Csikszentmihalyi et al. 2014
진로 결정 효능감	결정한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인 확신과 평가	5문항	민소라·홍성훈 2019; Taylor and Betz 1983
인구 통계	성별, 학제, 학년	3문항	연구자작성

1) CDM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3. 자료수집 및 분석

관광관련학과는 대부분 학부 내에서 호텔, 외식, 조리, 개발, 컨벤션, 통역, 항공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에서도 점차 다양화·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따라 모집단의 전형(typicality)으로써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박원우 외 2010; Thompson 2006)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4곳과 2년제 대학 3곳의 관광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2023년 5월 중순 약 1주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확정된 설문 문항으로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사이에 비확률표본추출의 편의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교강사에게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안내하고 각 대학의 수업 후 강의실 내에 응답자들을 모집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집단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총 347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고 무성의한 대답이나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제외한 유효한 설문지 328부(94.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 22.0과 AMOS v.22.0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한 결과 남학생 114명(34.8%), 여학생 214명(65.2%)으로 나타났고, 학제는 2-3년제

159명(48.5%), 4년제 169명(51.5%)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6명(32.3%), 2학년 98명(29.2%), 3학년 65명(19.8%), 4학년 59명(18.0%) 응답자의 순이며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대별	소별	명	%	대별	소별	명	%
성별	남학생	114	34.8	학년	1학년	106	32.3
	여학생	214	65.2		2학년	98	29.9
학제	2-3년제	159	48.5		3학년	65	19.8
	4년제	169	51.5		4학년	59	18.0
합계		328	100	합계		328	100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MOS v. 22.0을 활용하였다. 먼저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내적 일치성에 관한 문항 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CR= .852), 사회적 요인(CR= .887), 전공만족(CR= .852), 전공몰입(CR= .917), 진로결정효능감(CR= .915)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적합도 지수의 제한 기준($\chi^2=454.226$, DF= 209, CMIN/DF= 2.173, $p=.000$, RMR= .035, CFI= .956, TLI= .947, IFI= .956, GFI= .896, AGFI= .863)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표 3]과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CFA)결과

요인		측정항목	β	S.E	CR	AVE
전공 선택 요인	개인적 요인	흥미 및 관심분야	.738	-	.852	.589
		개인의 적성	.787	.066		
		재능과 소질	.784	.080		
		수능 성적	.761	.086		
	사회적 요인	전공 직업의 장래성	.893	-	.887	.665
		대학의 사회적 인지도	.886	.043		
		취업 전망이 좋은 전공	.775	.047		
		졸업 후 생애 소득과 수입	.690	.052		
	전공만족	공부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교수의 조언	.667	-	.852	.535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	.749	.090		
		교과 내용의 흥미	.729	.094		
		전공과목의 취업 기회	.782	.106		
		졸업 후 회사생활에 도움	.726	.096		
전공몰입		전공 수업의 관심 및 흥미	.841	-	.917	.689
		전공 수업 자체에 대한 호기심	.813	.041		
		전공 수업의 의욕	.834	.060		
		전공 수업 참여 시 시간 흐름 인식	.843	.064		
		전공 과제에 대한 열의	.819	.065		
진로결정 효능감		전공분야 직무수행 시 자신감	.795	-	.915	.684
		계획 실행에 대한 믿음	.862	.065		
		전공이나 진로를 위한 노력	.808	.064		
		향후 5년간의 계획 수립 여부	.830	.062		
		관련기관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839	.062		

$\chi^2= 454.226$, $DF= 209$, $CMIN/DF= 2.173$, $p=.000$,
 $RMR= .035$, $CFI= .956$, $TLI= .947$, $IFI= .956$, $GFI= .896$, $AGFI= .863$

주) β : 표준화요인부하량, S.E: 오차, CR: 개념신뢰도, AVE: 분산추출지수

본 연구의 요인별 개념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기준 값인 .7을 상회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값은 .5 이상의 값을 만족하여 내적 일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00). 이와 함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판별 타당성도 확보되었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분산추출지수 비교

구분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 효능감	M±S.D
개인적요인	.589	.361	.401	.334	.466	3.320±.745
사회적요인	.601**	.665	.491	.377	.393	3.268±.802
전공만족	.633**	.701**	.535	.456	.389	3.296±.687
전공몰입	.578**	.614**	.675**	.689	.500	3.427±.758
진로결정 효능감	.683**	.627**	.624**	.707**	.684	3.285±.760

주) **p<.01

주) 대각선: 분산추출지수(AVE),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 대각선 위: 상관계수 제곱값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시도하기 전 적합도 분석 결과 $\chi^2= 668.605$, $DF= 220$, $CMIN/DF= 30398$, $p= .000$, $RMR= .048$, $CFI= .919$, $TLI= .907$, $IFI= .920$, $GFI= .852$, $AGFI= .814$ 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의 권장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1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만족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1-1: $\beta= .054$, $t= 4.575$), 사회적 요인(가설 1-2: $\beta= .047$, $t= .6.431$)으로 나타났고, 가설 2의 전공선택요인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2-1: $\beta= .075$, $t= 2.625$), 사회적 요인(가설 2-2: $\beta= .065$, $t= 3.075$)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전공만족은 전공몰입(가설 3: $\beta= .125$, $t= 5.043$)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설 4의 전공선택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가설 4-1: $\beta= .068$, $t= 6.136$), 사회적 요인(가설 4-2: $\beta= .055$, $t= 6.731$)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가설 5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효능감(가설 5: $\beta= .053$, $t= 6.731$), 가설 6의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가설 6: $\beta= .063$, $t= 6.269$)로 나타나 모든 세부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β	C.R.(t)	p	지지여부
가설 1	1-1	개인적 요인 → 전공만족	.054	4.575***	.000	지지
	1-2	사회적 요인 → 전공만족	.047	6.431***	.000	
가설 2	2-1	개인적 요인 → 전공몰입	.075	2.625**	.009	지지
	2-2	사회적 요인 → 전공몰입	.065	3.075**	.002	
가설 3		전공만족 → 전공몰입	.125	5.043***	.000	지지
가설 4	4-1	개인적 요인 → 진로결정효능감	.068	6.136***	.000	지지
	4-2	사회적 요인 → 진로결정효능감	.055	6.731*	.021	
가설 5		전공만족 → 진로결정효능감	.053	6.731***	.000	지지
가설 6		전공몰입 → 진로결정효능감	.063	6.269***	.000	지지

주) ***p<.001, **p<.01, *p<.05

V.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대부분을 변화시켰고 교육 분야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KBS뉴스 2023/6/13). 본 연구는 급속한 변화와 끊임없이 진화하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 학문적, 직업적 경로를 탐색할 때 작용하는 다면적인 역학에 조명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Endemic) 시대에는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 또한 이에 맞추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산업의 요구에 맞춰 전공선택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만족과 몰입, 그리고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가설 1]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이정원(2022), Madison et

al.(2018), Schenkenfelder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가설2]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김민준 외(2023), Porter and Umbach(2006), Liao and Ji(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데 학생들의 전공선택 과정을 지원하고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전공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3] 전공만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홍세명(2022), Wilkins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이 수업 내용이나 교수진의 지도 등에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 전공에 대한 호기심과 참여도를 높여 몰입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설4] 전공선택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민소라·홍성훈(2019), 최동주(2021), Garfinkel et al.(2005), Obschonka et al.(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전공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들이 그 후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심사나 능력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선택 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설5] 전공만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류인평 외(2019), Liao and Ji(2015), Ocansey(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함으로써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6] 전공몰입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연국·양진희(2022), Hambourger(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몰입이 높은 학생일수록 해당 분야에서의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몰입을 촉진하고 지원해야만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전공선택요인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이는 다시 전공에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엔 진로결정에 있어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검증을 토대로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적 맥락에서 의사결정 및 행동 등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틀에 기여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러한 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과 관련된 사회 심리학 이론 및 교육 사회학 이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등의 선행요인들을 편협적이고 지역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공선택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향후 전공만족과 전공몰입을 통해 진로결정효능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향후 다차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교육기관에서는 전공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전공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조정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에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체험 및 실습 학습 기회를 통합하는 공동프로젝트 등을 만든다면 전공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동료나 선배의 멘토링 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의 기회 등과 같은 워크숍 등은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입시 지도 시 전공을 선택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사

회적 요인 모두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개입을 시도한다. 즉, 전공선택요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 개인의 강점, 관점, 가치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 후 개인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열망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증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실무 역량에 부합하는 다재다능한 기술을 보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관광 사업이 직면한 실전 과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의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효과 크기와 결과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경우 2·3년제와 4년제를 통합한 표본으로 학제 간의 차이가 있으며 비확률 표본추출의 편의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한다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지며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교육 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가면서 관광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는 여정에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진화하는 관광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보에 입각한 진로결정을 내리고 역동적인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갖추도록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분야가 나아갈 미래의 흥미로운 기회에 대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준비시키는 교육 경험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미. 2022. 「'목적지 없는 비행'체험은 실제 관광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코로나시대 관광체험의 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10(3): 143-166.
- _____. 2021. 「팬데믹 (Pandemic) 시대 관광 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춘천 캠핑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19): 101-148.
- 김민준·윤지환·박영기. 2023.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이 전공몰입과 직업가치관 그리고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경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2(3): 149-167.
- 김보균·이효성·김홍범. 2019. 「호텔관광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1(2): 61-74.
- 김재동·김보경. 2005. 「컴퓨터 게임을 통한 학습의 몰입 관련변인이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3): 89-114.
- 김태희·장경로. 2007.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만족, 그리고 대학 및 직업위상에 대한 인식이 전공 관련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69-78.
- 류인평·강동원·이재곤. 2019. 「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4(3): 81-106.
- 민소라·홍성훈. 2019. 「항공서비스학과와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141-161.
- 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 (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Seou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1: 51-85.
- 손준중. 2002. 「지방사립대학 신입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3(2): 49-73.
- 송지현·정은영. 2020.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73-183.
- 유연국·양진희. 2022. 「대학생의 전공몰입도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목표안정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2471-2486.
- 윤정현. 2013. 「관광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 및 학습태도와 성취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5(4): 239-257.
- 이정원.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호텔관광학과 대학생의 전공선

- 택동기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듀테인먼트연구* 4(4): 59-69.
- 임미라·김윤민. 2013. 「관광관련전공 대학선택동기 가 학생만족 및 학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7(2): 361-379.
- 정희영·박옥련. 2009.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관계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1): 35-49.
- 주영주·김동심. 2014. 특성화고교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학교소속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의 관계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73-95.
- 최동주. 2021.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몰입,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24(3): 205-22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2020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 _____ . 2021.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 한예정·이종호. 2013.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외식, 조리 전공』.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9(2): 76-92.
- 한지숙. 2021. 「관광 관련 전공자들의 메타인지가 전공학습몰입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25(2): 663-684.
- 홍미영·김정매. 2021. 「관광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적합성의 매개효과. *관광진흥연구* 9(3): 255-274.
- 홍세명. 2022. 「항공서비스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진흥연구* 10(2): 187-205.
- 홍충선. 2019.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3(5): 655-675.

-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4): 483-503.
- An, B. D, & Cho, K. D. 2017. "Influence of Self-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Psychosocial Quality of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1,"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Tokyo). Information* 20(3B): 1971-1984.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rber, L. K., Munz, D. C., Bagsby, P. G., & Grawitch, M. J. 2009. "When

- does time perspective matter? Self-control as a moderator between time perspective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50-253.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Choi, B. Y., Park, H., Yang, E., Lee, S. K., Lee, Y., & Lee, S. M. 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 Csikszentmihalyi, M.,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14. “The concept of flow.”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collected works of Mihaly Csikszentmihalyi* 239-263.
- Eom, D. W. 2008. “The status and causes of early separation of college graduate newcomers: Focusing on the HRM perspectiv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2): 237-260.
- Fouad, N. A., Ghosh, A., Chang, W. H., Figueiredo, C., & Bachhuber, T. 2016. “Career explor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4): 460-464.
- Garfinkel, P. E., Bagby, R. M., Schuller, D. R., Dickens, S. E., & Schulte, F. S. 2005. “Predictors of professional and personal satisfaction with a career in psychiatr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6): 333-341.
- Hair, J. F., W. C. Black, B. J. Babin & R. E. Anderson, 2010. *Multivariate date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ambourger, L. H. 2004. *Decision-making, gender, and field of academic major choic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Kim, K. M., & Kim, N. J. 2017. “Tourism college major and the relationships among choosing tourism as a major, majo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017(Dec): 706-717.

- Kumar, S., & Managi, S. 2020. "Does stringency of lockdown affect air quality? Evidence from Indian cities," *Economics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4(3): 481-502.
- Lent, R. W., & Brown, S. D. 2019.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t 25: Empirical status of the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de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5, 103316.
- Lent, R. W., Singley, D., Sheu, H. B., Schmidt, J. A., & Schmidt, L. C. 2007.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87-97.
- Liao, C. N., & Ji, C. H. 2015. "The origin of major choice, academic commitment, and career-decision readiness among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2): 156-170.
- Nicola, M., Alsafi, Z., Sohrabi, C., Kerwan, A., Al-Jabir, A., Iosifidis, C., ... & Agha, R. 2020.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78: 185-193.
- Obschonka, M., Silbereisen, R. K., & Schmitt-Rodermund, E. 2012. "Explaining entrepreneurial behavior: Dispositional personality traits, growth of personal entrepreneurial resources, and business idea gener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2): 178-190.
- Ocansey, F. 2000. "Career compromise and adjustment among non-professional graduate teachers," *IFE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8(2): 84-95.
- Pesch, K. M., Larson, L. M., & Surapaneni, S. 2016.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volitional autonom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497-512.
- Porter, S. R., & Umbach, P. D. 2006. "College major choice: An analysis of person-environment fi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 429-449.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Schenkenfelder, M., Frickey, E. A., & Larson, L. M. 2020. "College

- environmen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Predicting academic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6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homas, J. H., & McDaniel, C. R. 2004. “Effectiveness of a required course in career planning for psychology majors,” *Teaching of Psychology* 31(1): 22-27.
- Thompson, B. 2006. *Foundations of behavioral statistics: An insight-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1-46.
- Wach, F. S., Karbach, J., Ruffing, S., Brunken, R., & Spinath, F. M. 2016.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studies: Personality and motivation matter,” *Frontiers in psychology* 7, 55.
- Westermann, R., Elke, H., Spies, K., & Trautwein, U. 1996. “Identifikation und Erfassung von Komponenten der Studienzufriedenheit,”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3: 1-22.
- Womack, A., Leuty, M. E., Bullock-Yowell, E., & Mandracchia, J. T. 2018. “Understanding commitment: Relations between major commitment, satisfaction, involvement, fit, university commitment, and intention to qui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2): 166-182.
- Worsnop, C. Z. 2019. “Concealing disease: trade and travel barriers and the timeliness of outbreak reporting,”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20(4): 344-372.
- Zenker, S., & Kock, F.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A critical discussion of a tourism research agenda,” *Tourism management* 81: 104164.
- “면세업계도 ‘리오프닝’ 누릴까...여행 성수기 ‘기대감.’”전자신문. 2023.4.19.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92547?cde=news_my(검색일: 2023년 3월 15일)
- “우리나라 대학에 가장 많은 학과는...경영학 계열 809개.”연합뉴스. 2019.9.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24400004>(검색일: 2023년 3월 15일)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 11.9만 개 증발 우려.”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0.9.15, <https://www.keri.org/post/%EC%99%B8%EA%B5%AD%EC%9D%B8%EA%B4%80%EA%B4%91%EA%B0%9D-%EA%B8%89%EA%B0%90%EC%9C%BC%EB%A1%9C-%EC%9D%BC%EC%9E%90%EB%A6%AC-11-9%EB%A7%8C-%EA%B0%9C-%EC%A6%9D%EB%B0%9C-%EC%9A%B0%EB%A0%A4>(검색일: 2023년 3월 15일)

“코로나로 사라진 직원들...제주관광 회복세 ‘인력난 여전’”제주의 소리. 2021.12.1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463>(검색일: 2023년 3월 22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 수요 급증...‘일할 사람 없어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7637>(검색일: 2024년 1월 29일)

“2022년 싱가포르 호텔산업 현황 및 취업 동향.” Hotel & Restaurant. 2023.2.25. <http://www.hotelrestaurant.co.kr/mobile/article.html?no=11659>

국 문 초 록

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한진석(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김규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연구교수)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잠재 인력들(관광 관련 전공자)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관광 관련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고, 유효한 설문지 32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v.22와 AMOS v.22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전공만족은 전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전공 실무진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 및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공선택요인,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효능감

Abstract

Exploring New Horizons in Education:

Insights into Major Sele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in the Field
of Tourism in an Era of Transformation

Han, Jinseok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Tourism and Restaurant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Kim, Kyumee (Research Professor,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such as will and characteristics that are reflected when selecting a tourism major for tourism-related students, who will become the basis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domestic tourism industry, and to understand how major selection factors affect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at two- and four-year universities from October 10, 2023, to October 20, 2023, and 328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22 and AMOS v.22.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calculation,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Consequently, major selection factors were found to be antecedent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Additionally,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jor immers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while major immers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decision 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we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ourism-related

majors and discuss the expansion of related research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Key words: major selection factor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career decision efficacy

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강신희*

강
신
희

-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II. 선행 연구
- III.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
 - 1. 언어 강화 학습자 교육 지원
 - 2. 학습 언어 강화 학습자 교육 지원
- IV. 결론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구¹⁾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주민의 등장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주민 자녀의 유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E-mail: shinheezoa@naver.com)

1) 다문화 가구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거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먼저 “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나”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41>

투고(접수)일 2024.4.29. 심사(수정)일 2024.5.23. 게재확정일 2024.6.17.

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출생보다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²⁾

한편 이러한 추세 가운데 인천광역시시는 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 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³⁾ 다문화 가구 내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처음 고시된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이하 KSL) 지난 2017년 개정·고시되었다.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개정, 고시되는 과정에서 모어가 아닌 한국어(KSL)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그 대상자의 개념을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바꾸었다.⁴⁾ 이러한 변화는 국내 출생을 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어가 모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중도입국 학생 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 대상은 보다 다양하게 포함되었지만, 이에 따라 대다수인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교육과정의 주 대상자가 된 중도입국 학생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인천과 같이 국내 출생보다 중도입국 가정이

2)

구분	2023	2022	2021
국내출생	129,910	126,029	122,095
귀화·외국국적	51,268	42,616	37,963

3) 인구 대비로 확인하면 2022년 기준 지역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비중이 인천은 6%로 서울 4.9%, 경기 5.2%보다 많이 높으며, 전국 평균 5%보다도 높다. 2021년과 비교하여서도 서울은 5.1%→4.9%로, 경기도는 5.6%→5.2%로 떨어진 데 반해 인천은 6%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이는 42개 지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ESL 교육 기준을 제공하는 2020 WIDA에서 영어 학습자에서 다중언어 학습자로 그 개념을 확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WIDA 대상 학습자를 영어 학습자(ELLs)에서 이중언어 학습자(DLLs), 이민자, 교포 등 모든 다중 언어에 노출되는 모든 유아·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나 외국인 가정이 많은 경우⁵⁾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고시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의 명확화, 학습 한국어의 체계화, 문화 교육 내용 보강 등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은 수정·보완되었으나 새로이 마련된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에 적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에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보다 먼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던⁶⁾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대학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등 교육부 외에서 주관하는 기관이나 교육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실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적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 내용은 ‘방과후 보충형 프로그램 형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과 ‘개별 학습 유형’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박형민 외 2014, 203-204). 더불어 세부 운영 지원 방안으로는 크게 한국어(KSL) 교육과정 교육자료 지원, 학습자 관리 및 지원, 학습자 평가, 한국어(KSL) 담당교원 선발·배치·연수

5) 2023년 기준 인천의 다문화 학생 12,258명 중 국내출생은 6,985명(56.9%),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은 5,273(43%)명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 학생 181,178명 중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51,268명(28.3%)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서울 20,388명 중 8,427명(41.3%), 경기 48,966명 중 20,865명(42.6%)보다도 높다.

6)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한국어 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등을 포함하여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 제도는 2005년 시행되었다.

등으로 나누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부분에서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 이중언어교육을 적용할 시에 전환-유지 프로그램⁷⁾과 전환 프로그램 중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주류 언어로 학습이 가능한 단계까지 과도기적 언어교육의 일환으로써의 전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KSL) 교육과정 대상자들의 숙달도가 다르고, 각 숙달도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여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부재하다. 또 주류 언어의 수준은 높으나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실제 학습자들의 특성과 연계된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미 한국어(KSL) 교육이 도입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교육 체계와 상호작용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청라·영종·송도 국제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내 다문화 관련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운영 지원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방안으로 외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부진 지원⁸⁾을 예시로 들며, 지금까지 다문화 구성원과 관련한 교육 및 사업(한국어교육, 생활교육, 이중언어교육 등) 실행이 학교 밖 지역사회 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문화 구성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학교 밖 지역사회 기관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 하지만 자유학기제 등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

7) 두 언어의 균형적이고 지속적 발달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박형민 외 2014, 216).

8) 진로 지원, 예비학교·공립형 대안학교 교육을 통한 교육 지원,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지원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9) 오상철 외(2013)를 인용하여 학교와 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간에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책들이 시행 전후로 학교 밖 관련 기관(청소년수련시설,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은 이러한 외부 지원체계 구축 등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 김윤주(2021)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의 주요 문식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공 문식성, 지역적 문식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진입이 우리나라에 비해 빠른 해외 ESL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개정·고시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학교 내외의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른 나라의 ESL 교육을 분석,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학습자를 언어 강화, 학습 강화 학습자로 분류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한국어(KSL) 교육과정 관련 연구는 한국어(KSL)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활발하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원진숙·김희동(2015)에서 밝힌 학령기 다문화 학생 대상의 한국어(KSL) 교육의 2007~2015년 연구는 184건이다. 연구 주제별 성과 중 정책 및 현황이 39건으로 21.2% 정도이다. 가장 부족한 연구 분야가 정책 및 현황 연구인데, 본 연구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

므로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세부 주제를 현황과 과제, 교육정책, 메타 연구 방식의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정책’은 내용적으로 정책 현황과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합쳐서 살펴보면 전체 39건 중 32건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공교육 내 한국어(KSL)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KSL) 교육정책의 방향성 제안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 한국어(KSL)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모경환 외(2015)만이 다문화 언어교육 강화 방안을 다문화 언어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운영 체제, 교강사 운영, 학교·가정·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전반에 걸쳐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나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에 연구는 주로 처음으로 고시되었을 때 주로 이루어졌고(홍종명 2015; 원진숙 2015; 심혜령 2016 등), 개정 고시된 이후에는 김윤주(2021)가 개정 전후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와 박정아(2020)가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것 외에는¹¹⁾ 평가 개선, 학습 한국어, 말하기 성취기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선중·황성은 2018; 심상민 2020 등) 등

10) 원진숙·김희동(2015)은 이 연구들이 기존의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이 아니므로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 분야의 연구들이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교육 능력 및 교과 연계를 위한 교육 능력 함양, 국어교육·한국어 교육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 학습자 요구 및 한국어(KSL) 교육 관련 기반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11) 김윤주(2021)에서 역시 교육과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보다는 교육과정과 교수 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에 맞는 교수 학습 모형 개발, 내용교과와의 연계 등을 논의하였고, 박정아(2020) 역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아닌 교육과정 자체는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부적 기술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의 연구 주제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나라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 역시 거시적인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프랑스의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 최희재(2011)는 중앙정부-시·도 교육청-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 학생 유형별 ‘학습 한국어’ 교육, 학교급별 교육과정 마련, 출신국 언어·문화교육 체계 마련, 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한다. 또 스웨덴어(SSL)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고찰한 김영은(2016) 역시 체계, 정책, 운영, 평가, 교사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김윤주(2021)는 이전 연구(2015)에서 실제 다문화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대안 모색에 내용 중심 교수법 도입 모형 개발 및 보급, 학부모 교육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연계와 같이 실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려한 것을 발전시켰다. 더불어 WIDA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원진숙(2014) 역시 실제 KSL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많은 강원도 사내 초등학교의 경우, 사내 초등학교의 경우는 KSL 교육보다 국제 이해 교육 등을 통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 이중언어 교육, 학습 한국어를 강화한 교과별 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각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생략되어 있어 특정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안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에서 진단평가 결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 평가 총점이 160점 미만일 경우 초급 판정, 한국어 교육과정 1단계 수업으로 편성, 160점~280점 미만일 경우 중급 판정, 2단계 수업으로 편성된다. 280점 이상일 경우 고급 판정을 받아 일반 학급에 편성된다. 단, 280점 이상이어도 30점 미만 영역이 있으면 초급에 배정된다고 한다(이인혜 2018). 현재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관련된 진단도구 문항이 실제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이 충분하지 않아 고급 판정을 받아도 일반 학급 배정 시 교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권문경 2017). 또 호주 ESL 프로그램 학습 대상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언어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어 표준 영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영어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더라도 언어 사용이 괜찮다면 ESL 학습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서혁·권순희 2014). 미국 뉴욕에서 역시 학습 대상자 판별 도구로 테스트 후 영어가 유창하면 일반 학급에, 이외의 제한된 영어 학습자(LEP)나 영어 학습자(EEL)만 제2언어 학습 대상으로 포함한다(박형민 외 2014).

이를 고려하면 한국어(KSL) 교육과정 대상자 역시 언어 강화형, 학습 언어 강화형 한국어 학습자로 구체화하여 각각에 적절한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진단도구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 내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초·중급 학습자는 언어 강화형, 고급 학습자는 학습 강화형 학습자로 보고 각각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언어) 결손형 학습자는 현 진단평가 기준으로는 초, 중급 학습자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급 학습자들은 학습 한국어보다는 생활

한국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중급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한국어를 심화하면서 학습 한국어 중 ‘학습 도구 한국어’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¹²⁾

[표 1]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용체계(교육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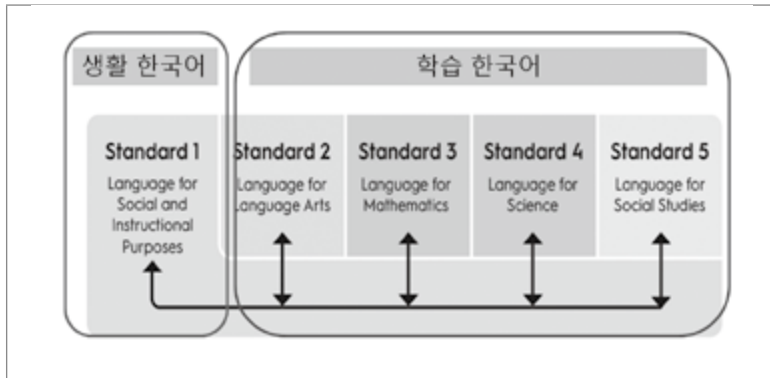
구분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통 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중급 학습자의 수준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학습 도구 한국어’는 학습 한국어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교과 적응 한국어보다는 의사소통 한국어에 가깝다. ‘교실 어휘’는 학교생활 어휘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고 도구 어휘나 범용 지식 어휘는 교과 전반에 걸친 어휘라는 뜻

12) 이인혜(2018)에서도 진단평가 문항 난도 조절을 위한 ‘주제 폴더’에 대하여 논하면서 생활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를 숙달도별로 적용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1~3급이 생활 한국어, 2~5급이 학습 도구 한국어, 4~6급이 교과 적응 한국어로, 2~3급은 생활 한국어와 학습 도구 한국어가, 4~5급은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어에 분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므로 1~2급을 초급, 3~4급을 중급, 5~6급을 고급으로 본다면 초급이 생활 한국어, 중급이 학습 도구 한국어까지 습득하여야 한다.

이므로 결국 해당 학령기 학습자라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나 문법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언어재료들은 학습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급 수준의 학습자라면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수준의 어휘, 문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병렬의 관계로 두지만 두 영역은 공존이 아닌 언어 능력의 유창성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는 생활 한국어가, 높은 단계에서는 학습 한국어가 강조되는 위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등 42개 지역에서 활용되는 WIDA 교육과정의 경우 발달 기준으로 이 두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그림 1] WIDA 영어발달 기준(WIDA Consortium 2020)과 한국어(KSL) 교육과정 비교

Standard 1은 다른 2~5 등급과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1단계가 한국어 (KSL) 교육과정의 생활 한국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학습 한국어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언어 습득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목표 언어들을 습득하고 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강화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과목 내 수업 보충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언어 강화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들과는 달리 언어 능력이 일반 학

습자들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언어가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한국어 외의 부모의 언어, 즉 제2 모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에 익숙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인 경우 쌍방향 발전적 이중언어교육,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 발전에 초점을 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as a second language)¹³⁾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에게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학습자를 세분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모경환 외 2015). 이를 바탕으로 특정 학습자들에게 이중언어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외의 학습자들에게는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등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다음 단계를 통해 학습자를 세분화하고 각각에 맞는 교육 지원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표 2] KSL 학습 대상자 선정 절차 제시

한국어 수준이 고급 이상인가?	네 →	학습에 결손이 있는가?	네 →	학습 강화형 학습자
			아니오 →	한국어(KSL) 교육 비대상
	아니오 →	부모의 언어 (제2 모어)에 익숙한가?	네 →	언어 강화형 학습자 (이중언어교육 대상)
			아니오 →	언어 강화형 학습자 (일방향 발전적 이중언어교육)

[표 2]의 KSL 학습 대상자 선정 절차는 한국어 결손형 학습자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초점은 한국어

13)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만 사용하며, 학습자들의 부모 언어 등 소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Herrera & Murry 2015).

결손형 학습자에게 맞추어져야 한다.¹⁴⁾ 학습 한국어의 경우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특정 과목이 부진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과 그 교육 내용이 언어보다는 언어를 ‘도구’로 하는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어(KSL) 교육과정 외의 사회, 과학 등 개별 과목의 성취기준 등 다른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사범대학의 경우 예비 교사는 ESL 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하는데(Herrera & Murry 2005), 언어 교육 전공자만이 아닌 내용 교과 교육 전공자들도 교수·학습을 위한 방법과 실제 연마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이는 사범대가 중·고등학교의 교사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학습 한국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어(KSL) 외의 수학, 사회, 과학 등 개별 교과에 KSL을 추가로 배우는 것은 개별 교과에서 학습 한국어를 책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언어 강화형 학습자 지원

언어 강화형 학습자 중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익숙한 경우, 즉 중도 입국자나 외국에서 유아기를 보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 등에 대해서는 이중언어적 관점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외의 언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수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최동주 2015 등).¹⁵⁾ 더불어 실제로 다문화가족 청

14) 주재환·윤보은(2015)은 KSL 학습자의 주요 대상은 ‘중도 입국자’라고 하였으며, 이들의 36% 이상이 입국 후 가장 힘든 점으로 ‘한국어를 못 하는 것’을 들고 있다는 연구(전경숙·이의정 2012)를 인용하기도 한다.

15) Cummins(2000)는 단일언어 사용의 경우보다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이 인지적 측면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본다. 또 Wong Fillmore(1991)의 경우 단일언어적 관점에서 언어 교육이 진행될 경우, L1 소실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발달의 지체,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소년들도 한국어보다 부모님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김지영·이윤석 2021) 이중언어 교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출생 한국어(KSL)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중도 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의 한국어(KSL) 학습자일 경우 부모의 언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2014)에서는 주류 언어로의 편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쌍방향 발전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다(Herrera & Murry 2005, 96~99).¹⁶⁾ 언어 강화형 학습자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핀란드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핀란드는 언어 자체가 핀란드어, 스웨덴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자국어 교육체계에 이중언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자국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과목 보충 학습을 지원하되 이때에는 모어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전이적 이중언어교육보다는 쌍방향 발전적 이중언어교육인 이중복합언어(Dual Language) 프로그램에 가깝다.¹⁷⁾

16) 김윤주(2015)는 ESL 교육 방식을 여섯 가지로 제안한다. 일방향 발전적 이중언어 교육(One-way development BE)으로 교과 내용 포함 ESL 교육, 쌍방향 발전적 이중언어 교육(Two-way development bilingual education), 전이적 이중언어 교육(Transitional BE) 중 교과 내용을 통한 ESL 교육 포함 방법, 교과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전이적 이중언어교육(Transitional BE), 교과 내용을 통해 언어 교수하는 ESL 교육, 별도 운영하는 ESL 학급(ESL pull-out) 등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가장 효과적 프로그램은 쌍방향 발전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가장 효과가 낮은 모형은 ESL pull-out 형태로 본다(Collier & Thomas 1997; 2002; Herrera & Murry 2005, 96~99).

17) 전이적 이중언어교육은 일정 기간 일부 수업에 한하여 학습자의 모어로 수업을 제공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목표어 전용 수업으로 학습자를 이행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반면 이중복합언어 프로그램은 제2 언어로서 목표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들과 동일한 수업을 받으며 언어적 유창성과 문식성 모두를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 중간 단계로 보존적 이중언어교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모어로 수업을 받으며 두 언어 모두로 학문적 유창성 개발을 목표로 하여 언어보다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문식성

[표 3] 핀란드 자국어 교육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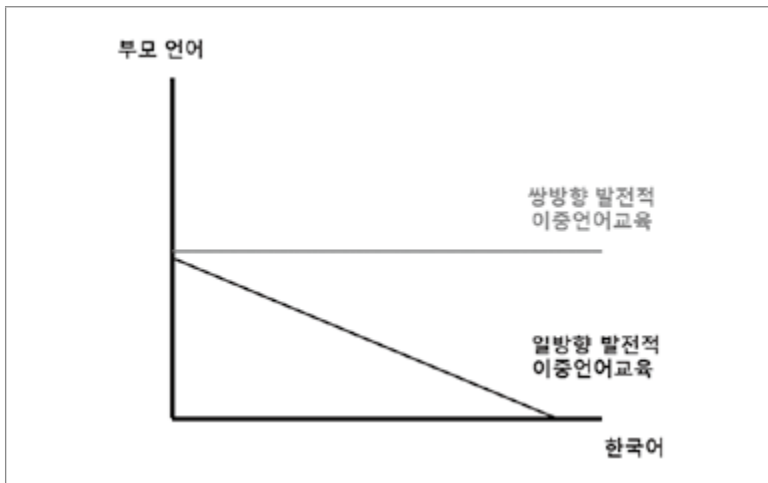
Pre-school education - 6세부터, 700시간/1년 [준비수업 제공] 핀란드 사회 적응/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능력 함양	
▼	
Instruction preparing for basic education - 6~10세 학생(최소 900시간 이상) / 그 이상의 학생(최소 1,000시간 이상)	
▼	
Basic education - 의무교육기간(10년) - 핀란드/스웨덴어 특수 교육 제공 - 보충학습 제공(필요 과목) ⇨ 모어로 교육 - [준비수업 제공] 핀란드 사회 적응/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능력 함양	
▼	
Voluntary additional basic education Preparatory education for young people - 기본 교육의 추가적 형태의 교육이나 다른 준비 그룹에서의 추가 교육 - 일반적으로 1년	
▼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 2~4년, 종로 시 대학입학허가시험 응시 - 이주 학생은 대학입학허가시험에서 모어 사용자와 구분, “Finnish or Swedish as a second language”시험 - 보충학습 제공(필요 과목) ⇨ 모어로 교육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or moving into working life) - 3년 이내(6개월 이상 현장실습), 120학점(credit) - 6개월~1년 간 20~40학점(credit) 참여 ⇨ 언어능력, 대처기술 등 습득 (핀란드·스웨덴어/수학/사회 과목 등)

미국의 뉴욕 주 ESL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국처럼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이나 독립적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목표 언어와 모어 양쪽 언어 유창성, 문식성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여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박형민 외 2014). 이러한 유연한 운영은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스톡홀름에서는

.....
에 관심을 갖는다(Herrera & Murry 2015).

학습자들이 12세까지 이중언어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고, 상급 학교에서는 모어는 개인적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거나 다른 언어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김영은 2016).

따라서 본고의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 역시 같은 언어 강화형 학습자일지라도 부모의 언어에 익숙한지 여부, 즉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익숙한지 여부에 따라 언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Two-Track 언어 강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2] 언어 강화형 학습자 대상 Two-Track 언어교육

전자의 경우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언어 모두의 사용 비율을 같게 유지하여 미국의 양방향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이중 언어 문식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한국어 결손이 있는 한편 부모의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모의 언어를 감안해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2014)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5:5로 모어와 한

국어 사용 비율을 유지하여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동안 교과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점차 한국어만 사용하는 환경(Korean-only)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언어 강화와 학습 강화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습 언어 강화형 학습자 지원

본고에서 말하는 학습 언어 강화형 학습자는 생활 한국어의 경우는 고급 수준 이상이지만 학습 언어가 부족한 학습자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은 익숙하지만 해당 연령에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생활 한국어나 학습 도구 한국어는 능숙할 수 있으나 학습 한국어 중 ‘교과 적용 한국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자이다. 이러한 학습자는 다시 두 경우로 나누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SL 학습자 중 국내 출생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모어 교육의 차원에서 접하고 교육받는 경우가 많다.¹⁸⁾ 이러한 학습자 중 교과 적용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보다는 일반 학습 부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주재환·윤보은 2015). 따라서 생활 한국어 능력이 일반 학생과 같으므로 교과 수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해당 교과목 내용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KSL)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마다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습

18) 최희재(2011)는 중도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성장하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구분한다. 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모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학습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계획표를 추가로 제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실제로 교과 적용 한국어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언어보다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 학습과의 관련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고자 할 때에는 내용 중심 교수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교과 연계를 통해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어 어휘, 문법 수준이 심화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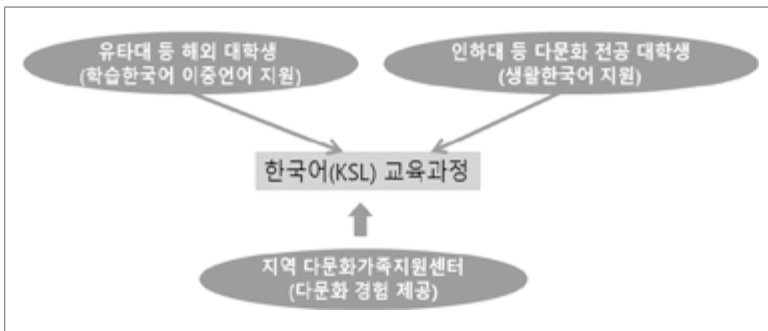
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천과 같이 국내출생보다 중도입국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이 많은 경우는 부모님의 언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언어교육 대상자라는 점에서 학습 한국어도 모어 지원이 필요한데, 방과후 수업을 통하여 교과에 대하여 모어로 보충형 수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교육을 지원이 다문화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모경환 외 2015 등),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2015, 220-223)에서 세부 운영 지원 방안 중 학습자 관리 및 지원의 교외 지원체계의 하나로써 지역 네트워크 지원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침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WIDA 교육과정의 2020 최신 개정 내용 중에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이중언어 이상의 다언어적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교실 수업과 가정을 연계한 다중언어와 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학교 내 공교육에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와 다문화 가정을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상황으로 자유학기제 도입 시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18조의 2(진로체험 지원)에 따라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한국어(KSL) 교육과정 역시 지원

을 위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외국인력센터), 글로벌센터 등 다문화 관련 기관과 이주여성단체 다문화 관련 단체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수나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한국어(KSL) 교육과정 지원체계 예시

또한 ESL 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호주에서는 학교 밖 ESL 지원 기관은 크게 영어집중센터(Intensive English Centers), 영어센터(English Language Centers)¹⁹⁾, 루니아 영어 집중 센터(Lurnea Intensive English Center)²⁰⁾, 기술직업교육센터(TAFE)²¹⁾ 등이 있다고 한다(서혁·권순희 2014). 영어 집중 센터(IECs)는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닌 학습자들을 대상

19) 학교와 연계 운영되는데, 교내 영어 프로그램이나 교외 연계된 영어 학교(English Language School)를 선택할 수 있다. 빅토리아 공립학교와 연계된 ELC의 경우 2명~15명 사이의 규모로 다문화교육 지원이 수업별, 개인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20) 과제 지원 센터의 성격을 가지며,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SL을 병행하며, 팀티칭이 이루어진다.

21) 직업 교육 시스템의 하나로 국가 전문 관리·인증 기관이다. 목적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초·중등 진학/대학 진학/취업) 학령기 과정과 성인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으로 단기간에 집중적 ESL 교육을 제공하여 적절한 학교급 과정에 배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관으로, 학교 내 교육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언어 학습은 살아있는 맥락과 실제 장면에서 필요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되고 학습되므로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현장체험(견학), 수영, 독서, 스포츠, 학예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더불어 JSL 교육과정 역시 학교 밖 운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에현 이가시에는 자원봉사단의 사업으로 프리스쿨이 있어 외국인 학부모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취학 예정 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공생사업에서 만든 입학 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과정(KSL) 교육과정 역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 밖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하여 학령기에 맞는 한국 문화 및 한국 학교생활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업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이 '청소년' 정책과 맞물리면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과 자유학기제 연계가 활발하다. 여성가족부 역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이주배경청소년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있는데, 크게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지원 사업, 통합 지원 사업, 인식 개선 및 연수개발 사업을 자체적 진행, 대외적으로는 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장학금, 라이프 코칭, 상담·심리, 체력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초기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 사회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심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규교육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을 통해 원활한 한국사회 초기적응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어(KSL) 교

육과정이라는 공교육에 편입하기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통합지원 사업은 공교육 편입 후에 병행하면 내용체계 중 ‘문화’ 영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 지원 사업 중 레인보우 체험학교에서는 기초 생활 및 경제생활 체험, 대중교통 이용, 교육기관 탐방,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데,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실생활 위주의 체험활동 진행으로 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실무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시 활용하거나 교원 연수 시기에 협업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센터가 지원하는 주된 사업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자녀생활),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통번역 서비스, 상담, 결혼 이민자 대상 사회 적응 및 취업 교육, 가족교육 등이다.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이미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 내 ‘문화’ 부분은 현재 중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과 같이 공교육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업하는 형태로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교육내용 중 한국 문화 부분은 다문화 관련 센터의 다문화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램을 활용하고 병행 연계할 수 있고²²⁾, 다문화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구성원 전반의 문화 적응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도 방문교육이나 가족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생활문화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학설명회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설명회나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고, 이를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본인의 언어로 이해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도움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IV. 결론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수정, 고시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배경이 아닌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여부임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향에 발맞추어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 이미 고시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실제 학교에서 운영할 때에는 지역적 특수성,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대상자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한국어가 강화되었다

22)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마다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의 경우 명절맞이 행사, FC서울과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명절행사와 더불어 체육행사, 송년회 및 각종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대상 학습자를 생활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자인지 학습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와 학습 중 어떤 요구가 있는 학습자인지를 명확화하여 각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의 거시적인 목표, 즉 한국어(KSL) 학습자들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언어 초점 프로그램, 내용 교과에 대한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내, 학교 밖 운영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교 내 운영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주 대상자인 언어 강화가 필요한 학습자들에게는 핀란드의 한국어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한국어 외의 언어 역시 발달시키는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을 제안한다. 이중언어 교육 환경이 조성되면 한국어로 인하여 내용 교과 학습도 부진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출생으로 인하여 언어에는 결손이 거의 없고 언어로 인한 학습력 부진이 아닐 경우 학습 강화 학습자로 분류한다. 이 학습자들에게는 현재 대다수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방과후 수업 보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언어 특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보충 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학교 밖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때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업 체계를 모색하였다. 실제로 교육부 정책이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대상자인 ‘청소년’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자유학기제를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로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을 선행으로 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단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수정하여 ‘고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내용학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이나 개선 방안 제시보다는 실제로 고시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였다. 학교 내 운영 체계로는 교육 대상자를 언어 강화형, 학습 강화형으로 나누어 한국어(KSL)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교 밖 지원체계로는 정부 부처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각 분야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2·2017. 「한국어(KSL) 교육과정」.
- 권문경. 2017. 「중등과정 KSL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진단 평가 연구-국어교과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 2016. 「스웨덴어(SSL)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외국어교육 23(4): 287-309.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김윤주. 2015. 「다문화 배경 학생 대상 KSL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언어문학 93: 359-386.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21. 「다문화 배경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주요 문식성 유형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3): 173-197.
- _____. 2021. 「미국 ESL 교육과정 WIDA 와 KSL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어학 91: 171-202.
- _____. 2021. 「[2012 한국어 교육과정]과 [2017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인문사회21 12(2): 2469-2484.
- 김지영·이윤석.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수요에 관한 분석: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1): 141-177.
- 모경환 외. 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한국다문화교육학회.
- 박정아. 2020. 「교육과정 실행 요인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7(3): 121-141.
- 박형민 외. 2014. 「2014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서혁·권순희. 2014. 「호주의 ESL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시사점」. 국어교육 146: 437-473. 한국어교육학회.
- 심상민. 2011.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8: 115-140.
- _____. 2020.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KSL) 에 대한 비판적 고찰-호주 EAL/D 교육과정의 듣기와 말하기 성취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47: 169-204.
- 심혜령. 2016. 「한국어 (KSL) 교육과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77-79.

- 원진숙. 201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44: 1-36. 한국어교육학회.
- 원진숙·김희동. 2015. 「한국어교육학: 학령기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KSL 교육 연구 동향 분석-주요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5: 349-372. 한국국어교육학회.
- 원진숙. 2015. 「2012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KSL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국어교육 149: 207-240.
- 이선중·황성은. 2018. 「일본어 (JSL)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의 '학습 한국어' 개선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8: 84-109.
- 이인혜. 2018. 「WIDA 평가 고찰을 통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 진단평가 개선 방안 탐색」. 한국어 교육 29(1): 163-19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주재환·윤보은. 2015. 「KSL 학습자 다문화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8: 5-34.
- 최동주. 2015.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다문화와 인간 4(2): 35-52.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 최희재.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방안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75: 45-64. 한국프랑스학회.
- 홍종명. 2015.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의 비판적 고찰」. 국제어문 64: 273-295.

Cummins, J. 2000. Immersion education for the millennium: What we have learned from 30 years of research on second language immersion.

Cummins, J. 2009. "Bilingual and immersion programs." In *The handbook of language teaching*, edited by Michael H. Long, Catherine J. Doughty, 159-181. (DOI:<https://doi.org/10.1002/9781444315783>)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4·2009.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Instruction Preparing for Basic Education*.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mmigrant Education in Finland*.

Herrera·Murry. 2015. *Mastering ESL/EFL methods: Differentiated instruction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CLD) students*, Pearson.

- WIDA Consortium, 2020. WIDA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tandards, Framework, 2020 Edition.
- Fillmore, L. W. 1991.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3): 323-346.

국 문 초 록

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강신희(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인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병렬이 아닌 위계적 개념으로 보고 한국어(KSL) 교육이 필요한 이주민 자녀를 생활 한국어가 부족한 언어 강화형 학습자와 학습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 언어 강화형 학습자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수준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학교 내 운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교 외 지역사회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가적 교육과정을 거시적으로 논의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여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특정 도시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미시적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이어지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이주민 자녀, 이주민 교육, 한국어 교육

Abstract

A Study of the KSL Curriculum's Operating Method for Immigrant Children

Kang, Shin-hee (Ph.D. candidat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how the revised Korean (KSL) curriculum, which is the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implemented and supported. The revised curriculum clarifies the definition of learners who require Korean (KSL) education and has systematized academic Korean. However, a school-bas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as well as a concrete method to achieve this are still lacking. This study proposes categorizing expanded learners into Korean-shortage and academic Korean-shortage learners. Based on this, an effective program was developed for each type of learner. In addition to an in-school support system, this study proposes an out-of-school support system. This will contribute to Korean (KSL)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from foreign families in specific region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Korean as a second language curriculum, immigrant children, immigrant education, Korean education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주**·김혜미***

김희주 · 김혜미

I. 서론

II. 선행연구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정의 및 현황
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I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2. 분석 방법
3. 연구윤리 고려

IV. 연구 결과

1. 공교육 진입: 정책과 현실의 괴리
2. 편향된 교육정책의 사각지대: 적응과 낙오 사이

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21년에 발간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 전문영향평가'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및 재정리한 것임.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hkim@inu.ac.kr, Tel: 032-835-8309)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69>

투고(접수)일 2024.4.29. 심사(수정)일 2024.5.23. 게재확정일 2024.6.17.

I. 서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제 이주민의 수는 2억 8,1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3,600만 명으로 전체 국제이주 아동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IOM 2024).¹⁾ 이러한 국제 이주민의 수는 1990년 1억 5,300만 명에서 83% 증가한 수치이고, 2020년 전체 인구 중 3.6%를 차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90년 2,400만 명에서 2020년 3,600만 명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UNICEF 2021).

한국 또한 전 세계적인 국제이주 증가의 영향을 받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²⁾는 2004년 468,875명에서 2022년 1,688,855명으로 이는 약 세 배 증가한 수치이다(법무부 2022). 특히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주주 외국인과 유학생 등 장기정착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만 18세 이하 체류 외국인 아동은 178,83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8.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만 18세 이하 전체 아동의 2.2%를 차지한다(법무부 2022). 외국인 아동의 구체적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체류 외국인 아동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민자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자녀의 상황에 정책적 관

1) 국제이주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15~24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기준으로 비율을 제시하였다. 15~24세 이하 청소년의 비율은 11%를 차지한다.

2) 법무부에서 2022년 발표한 체류 외국인은 2,245,912명인데, 이는 단기체류외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여서, 본 연구에서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의 현황만을 포함하였다.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자 자녀의 경우, 비(非)이민자 자녀에 비해 교육적 성취, 취업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이선 외 2012, 34-41), 이는 추후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를 따라 학령기에 이주해 온 이민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질적인 교육 환경과 차별 문제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민자 부모를 둔 자국 태생 이민 2세대의 경우, 언어 및 적응 문제는 겪지 않지만, 이민자 부모의 특성(저임금·저숙련 취업,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해, 종종 차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학업성취도,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다(김지영 2019; 김이선 외 2016, 4).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부재로도 알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들을 다문화 학생, 외국인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출생국가와 무관하게 부모 혹은 자신이 이주배경을 가진 모든 아동·청소년을 통틀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나(양계민 외 2021) 여전히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교육은 개인의 주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김지영 2019; 이중희·구은미 2016).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UN 아동권리 협약 제28조³⁾와 세계인권선언 제26조⁴⁾에 명시되어 있으며 UN 아동

3) 「UN아동권리협약」 제 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 해야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UN인권선언문」 제 26조 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권리 협약 비준 국가인 한국에서 역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다. 이보연(2021)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인가에 대해 침묵한 논의가 진행됨을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p.138)로써 교육권을 설명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일부 증가하면서 이들의 기본권, 특히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교육 현실과 교육환경, 공교육 진입 및 학업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박민정 외 2023; 이보연 2021; 문병기 외 2018; 신윤정 외 2018) 각 지자체 별로도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행정적, 정책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박민정 외 2023; 우복남 2020).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 역시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신윤정 외(2018)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장벽과 관련해서 입학에 요구되는 서류 구비 문제와 진입 후에 경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되어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 후 한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최종 견해를 제출하며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권고했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열려 있어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이 주는 효과와 한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내며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및 현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만 24세 이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되며, 양계민 외(2020, 21)는 이에 북한이탈주민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즉, 체류자격, 국적, 출생지와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부(모) 혹은 자신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된다. 양계민 외(2020, 22-23)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와 유형

구분	국내 또한 남한 출생	국외 또는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족 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족 자녀 (중도입국)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족자녀 (외국국적, 무국적, 미등록, 난민, 유학생 자녀 모두 포함)	국외출생 외국인가족 자녀 (외국국적, 미등록, 난민, 유학생 자녀 포함)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북한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 가족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자료(출처): 양계민 외 (2020, 22-23)

하지만 여전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국내 관련 법률이나 정부 부처마다 차이가 있고, 정책대상도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다문화가 반영된 이주배경의 개념은 한국 국적이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아동·청소년 또는 자녀들로 정의되었다(양계민 외 2020; 이혁승·하민현 2018). 이와 달리 행정안전부(2023)는 국내 체류 이주민을 ‘외국인 주민’이라 부르며 이들의 자녀를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다시 국내 출생 자녀와 귀화·외국인 자녀로 구분된다. 교육부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족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023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소개하며 기존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 대신 2024년부터 이주배경 학생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법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일반적인 다문화가족 자녀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아동·청소년은 한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아동 모두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소지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이들은 이주배

경 아동·청소년에 해당되지만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원법에 근거한 정책,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법률에 이주배경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제18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자녀와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명시하여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주하지 않은 국내 태생 외국인 주민 자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명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한외국인기본법」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2조 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국내법과 정책에서 명시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상이하고 합의된 정의가 부재함은 곧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박민정 외 2023).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구 혹은 외국 출신 인구를 집계 및 보고하는 자료는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이다. 이 외에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 자료도 있으나 이 모두가 각기 다르거나 중복되는 대상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외국인 등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대상의 범주와 정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로 최근 교육부

를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이주배경 학생’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 출생, 외국인, 중도 입국 학생은 약 18.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된다(관계부처합동 2023). 행정안전부의 자료인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규모는 299,440명에 해당되며 이 중 약 19만 명이 초·중·고 재학 연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취학 연령에 속한 아동의 수는 약 10만 9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하지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만 0~19세에 해당하는 체류 외국인은 약 178,000명으로 집계되어 부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 학생’ 역시 168,645명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파악되어 전체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및 통계는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관계부처합동자료(2023)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이주배경 학생의 다수는 경기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근소한 차이로 중국(동포 포함) 출신이 많으며 필리핀, 일본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주배경 학생 전체 중 가장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집단은 외국인 학생으로 이들은 중도 입국 혹은 국내 출생 학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제반의 정책 마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들의 언어 학습, 문화 적응, 학교적응 등이 시급한 과업임을 알려주기도 한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법제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규정을 담은 대표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이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부분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과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교육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국민의 취학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 및 2010년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96조 마련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예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는 취학연령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거주지 관할의 중학교로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되 교육감의 재량으로 다문화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를 통해 국내 대안학교 졸업, 검정고시, 출신국의 학력에 대해 인정받아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77호, 2019)에 근거하여 ‘다문화 학생 학적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뿐 아니라 외국 국적, 중도 입국, 난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및 학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법제의 정비에는 기존에 보장되지 못했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비판받는 부분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은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과 전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신윤정 외 2018, 9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권은 아직 법령상의 권리가 아닌 시혜적 차원의 선택사항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에 명문화된 권리는 국민의 자녀인 다문화가족 자녀 혹은 다문화가족 내 중도입국자녀로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그 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다루는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6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호·교육), 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를 통해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이 생활 정보 및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 정보와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 밖 청소년법)」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는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체험 및 훈련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여성가족부령으로 대상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 3(부설학교)은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특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교육 관련 정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200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대책’ 수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입학 증빙서류를 개선(2008년, 2010년)하고,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 운영 및 학력 인정 근거를 마련(2013년)하였다. 또한 중학교 진입 절차를 개선(2019년)하는 등 다문화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명료화하였으며 특히 다문화 학생이라는 정책용어를 도입하였다.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학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결혼(다문화가족) 내 국내 출생 자녀 및 중도 입국 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 외국인 가족 자녀 역시 포함한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과 미등록 외국인 자녀 역시 다문화 학생의 범주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공표해왔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은 ‘다문화 학생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해당 계획은 4개의 추진과제와 1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과제가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도달하는지 명료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특성별로 추진과제를 구분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주요 내용

추진과제	세부 과제	내용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1.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 외국인 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지침 마련 •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2. 학교 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 유치원 단계부터 지원체계 마련 •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1.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	•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강화 •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적응 및 인재 양성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학교생활 및 정서 지원 • 진로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1.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문화 교육 실시 • 다문화 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 학교의 다문화 교육활동 지원 강화
	2.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제고	• 현직 교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강화 • 예비 교원에 대한 다문화 역량 함양
	3.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학부모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지원 • 지역사회 연계 및 대국민 홍보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1. 다문화 교육제도 개선 및 실태 파악 2. 타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3.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다문화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선도학교를 통한 어려움 해소방안 발굴 • 다문화 교육센터를 통한 긴밀한 추진체계 구축

자료(출처): 교육부(2023)

2023년 계획 내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 아동의 조기입학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점이며 이는 기존에 편입학 제도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된 점이라 볼 수 있다. 즉, 외국인 가족 내 아동이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지역 내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학교 장에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외 외국인 자녀의 편입학 지원의 용이성 향상을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 중도 입국하여 편입학이 필요할 경우 학생은 거주지 인근 초등·중학교에 배정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중학생은 중학교에 직접 편입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국내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이들의 국내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을 위한 서류로 구분된다. 이는 ①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②출입국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혹은 체류 확인을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③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졸업·재학증명서 ④성적증명서 ⑤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⑥예방법중증명서 ⑦기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서류 ⑧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혹은 영사관 공증 절차를 통해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소화 절차를 통해 2014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 목록⁵⁾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목록에 포함된 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학교장 발급서류로만 인정된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부모가 직접 본국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졸업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⁶⁾ 해당 절차는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간소화되었고 실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력 인정학교 목록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에 새롭게 신설된 또 하나의 사업은 중도 입국 혹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마련된 학교급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5) 목록은 아래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892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해서 내거나 관련 서류 발급 및 제출

정이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두드림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 역시 2023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 외 기존부터 운영되었던 외국인 주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레인보우 스쿨과 다문화 정책·연구학교가 있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는 기존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등과정까지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 이중언어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학급은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 학급에 참여 가능한 아동의 연령대는 만7-17세로 만약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 스쿨로 흡수된다. 레인보우 스쿨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 9-24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며 수업은 한국어 특화, 진학 준비형, 진로 특화형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한국어 능력 습득, 공교육편입학 준비, 검정고시,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26개의 레인보우 스쿨이 전국에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9월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기존 다문화 교육지원계획과 별도로 이주배경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을 발표하며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 대신 이들을 이주배경 학생으로 지칭하며 학업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며 학교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들은 비차별적인 교육 환경 내 이주배경 학생을 우수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비록 여전히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과제 역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박민정 외 2023).

이상으로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법제와 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이 마주한 현실에 어느 정도 닿아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었으나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는 공교육 진입, 공교육 체계 내 적응, 학습 부진, 학교폭력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강남 2022; 양경은 2021; 최윤정 외 2019; 오경석·이경숙 2018; 문병기 외 2018; 이혜숙 2016), 구체적으로 현 교육정책 및 법제도와 이들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로 양경은(2021)은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폭력 경험, 학습 부진 정도가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 진행된 문병기 외(2018)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대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단율을 역시 높아진다는 점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정책 및 법제도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교육정책 및 법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및 실천적 개

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했다. FGI를 활용한 질적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혹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탐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 질적연구방법이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역동을 관찰하며 면접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힌다(Morgan and Krueger 1998).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와 독특한 교육 경험을 가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들 각자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 각 참여자로 하여금 이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참여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 관련 지원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모집했다. 인터뷰는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1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는 총 5명이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총 3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은 모두 외국인 학생으로 일반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을 시도했으나 진학 후 학교적응의 어려움,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 부재, 교사의 대안학교 전학 권유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재학하게 된 학생들이다. 이들을 통해 중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의 현실과 공교육권에 머무르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현장 실무자 정보

구분	소속기관 제공 서비스	지역
참여자 1	예비학교 및 한국어 교실, 진로 교육 제공 기관	경기도
참여자 2	이주배경 아동 기관, 진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
참여자 3	위탁대안학교, 예비학교 등	경기도
참여자 4	한국어 교육, 진로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
참여자 5	위탁대안학교	인천

[표 4]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

구분	연령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재학 학교
참여자 6	17	중국	2년	위탁형 대안학교
참여자 7	19	러시아	2년 5개월	
참여자 8	17	카자흐스탄	2년	

2. 분석 방법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귀납적 주제분석 연구 방법은 특정 이론 혹은 가설이 아닌 자료 전체를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자료에서 드러나는 의미단어를 탐색하고 이를 범주화 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된 주제를 도출해내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GI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으며 의미 단위의 공통점을 토대로 하위 범주를 생성했다.

3. 연구윤리 고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연구목적, 참여 절차, 자발적 참여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연구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가 연구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연구 과정 중 언제든지 중단 가능함 역시 안내했다. 특히 한국어 사용이 제한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는 통번역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번역해서 전달했으며 FGI 참여가 확정된 후 구두로 다시 해당 절차와 연구 과정을 청소년의 모국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의 FGI는 한국어와 참여자의 모국어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진행했다. 통번역사는 연구참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구 과정에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연구 참여 과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수집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해석의 일관성 담보를 위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존의 문헌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참여자들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질적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1. 공교육 진입: 정책과 현실의 괴리

1) 공교육 진입 장벽이 낮아짐

교육부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 태생 아동·청소년들은 국내 학적이 없더라도 출입국사실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의 거주 관련 서류 등을 선택하여 제출 시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근거한 조치이다. 즉, 법률상 아동의 교육권은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이는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며 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부의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지원은 실제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중학교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 역시 과거에 비해 공교육 진입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차별 없이 학교에 들어가요(참여자 1).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의무교육 때문에 서류 여부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참여자 4).

또한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외국인 가족 및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의 학부모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유관 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노력은 실제 공교육 진입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무는 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양계민 2019). 즉,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점진적 노력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재량에 따라 결정됨

기준에 비하면 공교육 진입이 다소 수월해진 것은 분명한데 이들의 교육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의무화’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즉, 법령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 출생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의 장벽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입학에 필요한 서류 구비는 많은 이주배경 가족에게 어려운 과업으로 여겨지며 종종 지역 사회 내 지원 기관의 도움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전입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고등학교 진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의무교육이니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넘어가도 될 서류들을 더 챙겨오라고 강제하는 식으로 할 때는 우리 같은 지원 단체들이 개입해서 풀어 주고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참여자 1).

법 자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해석은 학교장 마음이고,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 들지 안 들지는 교장 재량이에요(참여자 3).

교육지원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 중, 고 입학 문턱이 아직은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책은 모든 학생이 자격과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봐요(참여자 3).

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다룬 이보연(2021)의 연구에서도 보고되는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하고, 따라서 부모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여전히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진입 장벽은 특히 상급학교인 고등학교로의 전·입학 과정에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입학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허용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취학연령의 나이에 한국으로 온 아이들 중에 취학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참여자 1).

그래서 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요. 학교장 재량이라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더 말도 안 되게. (중간생략) 그냥 아예 대놓고 (단기체류 아동에 대해) ‘저희는 이런 애들 안 받아요’ 그러는 학교들도 있고… (참여자 3).

이는 2018년에 실시된 ‘경기도 이주 아동 인권실태조사’(오경석·이경숙 2018)에서 보고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단기체류비자’ 소지 아동의 경우 입학울 거부하는 학교가 있고, 아이의 학교 부적응 가능성을 사유로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 조사를 통해 여전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장벽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까다로운 서류 요건과 절차로 학습 공백이 생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하나의 원인은 복잡한 입학 구비 서류들이다. 또한 해외 발급 서류의 경우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나 영사관 공증 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에 입학하는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면서, 이들의 공교육 진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여전히 많고, 필요 서류에 대해 이주배경 부모들이 잘 숙지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서류 준비 기간 및 절차는 비용 발생 및 기간 소요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입국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입국 후 입학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간소화돼서 책 한 권입니다(참여자 5).

학력 같은 해외 서류의 경우는 공증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공증은 일반 부모님들이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비용이나 시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번역공증으로 대체하면 좋겠어요. 교육부 지침은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으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단 교육부에 영사 확인을 받지 않고 번역공증만으로도 가능한 학교 리스트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학교들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참여자 3).

또한 출신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서류 발급 등의 절차가 상이하여 이주 배경 부모 및 자녀가 국내 학교 편입학을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와 같이 통일된 서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그 서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처럼 행정실에서 졸업 증명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담임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담임 선생님이 없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참여자 3).

입학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곧 이들의 학습 공백과 연결된다. 중국 출신 청소년 실태를 연구한 배성렬 외(2018)의 연구에서 한국 입국 후 정규학교 입학까지 소요된 시간을 살펴본 결과 약 55%의 학생들이 입국 후 6개월 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청소년도 약 17%로 보고되었다. 이런 학습 공백은 단순히 교육의 지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위한 골든 타임(window of opportunity)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언어 학습뿐 아니라 청소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를 적정 시기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중학교 입학까지 4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는 서류 준비와 학교 배정 등 행정절차가 오래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에 와서 4개월 정도 쉬었어요. (중간생략) 왜냐하면 한국 와서 바로 학교 갈 수 없어요... (중간생략) 서류 준비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어

면 학교 갈 수 있는지 선택해야 하고...(참여자 6).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습 공백이거든요.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공교육에 들어가고 싶은데 서류가 한두 가지 미비하면 이 서류들이 올 때까지 다섯 달이건 일 년이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돈(시간) 낭비잖아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일 년 안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십 년이 지나도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 습니다. (중간생략)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온 아이들도 처음에 들어 오자마자 빨리 교육에 진입을 하던가 저희 같은 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은 그나마 한국어 적응 속도가 빠르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은 한국어를 아예 못 배운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참여자 5).

난민 아동·청소년과 같이 여러 경유지를 거쳐 입국하거나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이는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김현미 외 2020). 교육부에서는 2013년부터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근거하여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위 한 제도로 학력심의회위원회를 만들고,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김현미 외 (2020)는 이런 절차 마련이 난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촉진했다 고 평가한다. 또한 학력 증명이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학력심의회가 학교장 승인 하에 입학이 허가된 후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며 학교의 협조를 전제 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다. 즉, 여전히 입학은 학교와 학교장 재 량이 크며 일부 학교에서는 서류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입학을 허락하고 학력 인증 및 학년 배정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가는 한편, 그렇

지 않은 경우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고등학교 진입 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학교 현장 간 정책의 괴리감이 있음

국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 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진입에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동 권리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기관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발달권 보장의 일부로 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시도해왔으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괴리감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지자체 내 교육청과 학교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역량과 관심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장학사와 학교장 및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이주 아동·청소년이 마주하는 교육의 현실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특히나 관련 장학사분들이나 담당관들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서 잦아요. 교체되신 상황이나, 그분들의 개인적 관심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주 배경, 다문화, 중도 입국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시고, 문의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

자들은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참여자 4).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담당자분은 (이주배경 아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어떤 해에는 000 학교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담당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쉽죠. 그분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정책이나 예산이 결정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맞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참여자 5).

양계민(2019)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도나 방법은 지역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자의 재량에 따라 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 발생 시에도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및 교육권 보장이 상이할 수 있다. 즉, 정책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에 대한 현장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추진력이 없을 시 현재와 같이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2. 편향된 교육정책의 사각지대: 적응과 낙오 사이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의 공교육 진입과 한국어 교육에 그치지 않으며,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존중되는지, 비차별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는지,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 정보가 전달되는지 등을 모두 내포한다.

다문화 정책학교의 경우 가족 통신문 및 정보 전달에 있어 모국어로 전달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배려하는 절차가 많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많은 중도 입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한국어 학급, 레인보우 스쿨 등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할 뿐 아니라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국어 멘토링도 있고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진로 수업도 했었어요. 대학생이랑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고...(참여자 8).

작년 같은 경우에 열 명 이상 일반 학교를 다 진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고요(참여자 5).

교육부에서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배포하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

2) 한국 사회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분리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다문화 정책학교, 레인보우 스쿨과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계는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한국 사회를 분리하는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실제

FGI에 참여했던 청소년도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부터) 너는 어차피 (위탁형 대안학교)에 갈 학생이다. 굳이 책이나 교과서도 구입 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있어라(참여자 7).

저희 지역에는 거점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장점은 거점학교에는 이주배경 애들이 이미 있으니가 가기가 쉬워요. 또 학교도 준비가 다른 학교보다 잘 되어 있어서 진입이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다문화 거점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이주 아동을) 받아야 할 이유가 더욱 없어지는 거죠(참여자 4).

저희 지역 내 밀집 학교가 00 초등학교잖아요. 지금 거기 전교생이 540명 정도 되는데 250명 이상이 고려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인 학교인 거죠. 거기에 한국 아이들이 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엄마들이 이 학교를 싫어해요. 그 학교를 떠나가고 싶어 해요 (참여자 5).

3) 일반 학교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지원에서 소외됨

레인보우 스쿨과 같은 다문화 정책학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는 달리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은 학생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수업 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도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의 개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도 입국 아이가) 학교에 갔지만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처럼 놓여진 거죠.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혼자 제출 못 하면 선생님이 한 번씩 확인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본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니까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문자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 사항을 안내하는데 (이주배경)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선생님은 전화도 안 주시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참여자 4).

일반 학교에 가서 한국어 과외 프로그램 같은 거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전혀 없다고, 다른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해 주셨어요(참여자 7, 8).

(한국어가 어려워서 공부가 어렵다고) 선생님한테 알려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공부하래요(참여자 6).

교육지원으로부터의 배제는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학급(예비학교), 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연결되고 제공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많은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는 높은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통계,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부처 및 정책이 모두 다른 현실 속에서,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각기 다른 대

상을 지칭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도 여성 가족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非)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교육 현장 내에서, 동등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비차별 원칙에도 위배되며, 학교생활 적응, 학습 지원 등 교육과 관련한 욕구(need)가 훨씬 더 큰 아동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인권과 발달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권 보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 대상으로 하는 법령과 정책들을 검토하였고, FGI를 통해 정책이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 검토와 질적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법령상 국민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 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학 의무 규정은 국민에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장벽을 일부 완화했고, 이러한 결과로 상당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수월하게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여 재학을 제고에 기여하였다(교육부 2023). 실제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부-법무부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도 입국 아동·청소년의 학부모에게 학교 입학에 관한 안내 문

자를 발송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차별 없는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중단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지원으로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고, 상당 부분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학생들도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는 한국 및 이주배경 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어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의무교육을 보장받을 권리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체류자격이나 한국어 능력, 학생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교육 진입은 물론이고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들이 다를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심지어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미흡하여 학교 공부와 생활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안학교로 전학 갈 것을 노골적으로 권유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비차별적 권리를 위배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넘어 이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들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전문가 FGI 결과, 법령의 확대 적용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입학에 허용하라는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장기체류 비자가 없는 경우 입

학을 거절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전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입학을 허락하고, 학력 인증 및 학년 배정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가는 한편, 그 외의 학교들은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포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상급학교 입학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셋째, 시행령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허용했지만, 이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교육 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필요 서류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낮아 지원 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또한 서류 준비 기간 및 절차가 큰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국 후 입학까지 상당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출신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서류 발급 등 절차가 상이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입학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공백을 초래했다.

넷째, 학력 증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로 학력심의회를 설치했는데, 이는 난민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과정이 학교장 승인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후에 진행되는 절차라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즉, 아동이 자신의 학력 수준에 맞는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력심의회 활동이 의미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입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통해 상급학교(특히, 고등학교)로 진입 시 학교장 재량에 의해 입학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력심의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 감소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한국어 학급 운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지지체계와 연계해 생활 안정 및 적응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유발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파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학습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은 공교육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은 첫 번째 추진과제로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수립하여 공교육 진입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자료 배포,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입학 및 편입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와 이주배경 학생 간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공교육 진입 지원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이들의 공평한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문화 정책학교와 레인보우 스쿨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멘토링 등의 다양한 교육들이 지원되어 이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은 학교적응 및 학업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학교로 진입할 경우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을 받지 못해 오히려 공교육에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 학생의 부모들은 다문화 정책학교, 레인보우 스쿨 등의 대안학교나 이주민 밀집 지역의 학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과 한국 사회를 더욱 분리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취학 의무 조항 대상을 ‘모든 국민’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또는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이보연 2021).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다문화가족 자녀나 다문화가족 내 중도 입국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교육기본법」 모두 국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만 명시하고, 외국인 주민 자녀는 제외하고 있어 법률상 이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의 처우 규정을 담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한정하여 교육에 대한 비차별적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제12조). 따라서 아동 권리협약 내 비차별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미등록 외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학습 공백 없이 교육권 보장받을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기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아동이 6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공백으로 인한 교육 지연, 적응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 제27조에서 ‘회원국은 국제적 보호 지위를 받은 아동이 국민과 마찬가지로 교육제도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EU 수용지침(Directive 2013/33/EU)’ 제14조 제2항에서 ‘교육제도의 접근은 난민 신청 후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보연 2021). 해

당 조항은 난민과 그 자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주배경 아동의 공교육 진입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기간을 법률에서 명시해 교육권,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입학 거부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동안 공교육 진입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공교육 진입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진입 시 더 많은 장애물과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 현재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본인 혹은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학교 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 및 지원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이미 과부하, 과밀집된 다문화 정책학교로 ‘떠밀리듯이’ 입학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전달하고, 공교육 보장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장벽과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와 무관하게 이주배경 학생들의 언어 및 학습을 지원하는 담당 교사와 통번역사들을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공교육 체계에 진입한 모든 아동에 대한 제반 교육 지원의 동일처우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학

적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국내 출생 아동뿐 아니라 외국 국적, 중도 입국, 난민 아동과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학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긍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학교나 레인보우 스쿨과 같은 대안학교와 달리 일반 학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주배경 학생들이 밀집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수업 및 모국어 수업 운영, 학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수업, 모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한국어 수업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와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를 분리하여,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과 관련된 한국어 수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발달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다섯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아동 권리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 교육 급여 지원, 아동 급식 지원 등의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고 중퇴율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화성시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민·관·학 협의체를 마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자원 마련에 앞서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이들을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안내서’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의 관심과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보

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법령에 따라 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 일원화와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두 부처 간 그 대상이 상이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데,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한국인-귀화인(결혼이민자), 귀화인-귀화인 등이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 내 자녀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도우미 파견 사업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일 뿐, 실제 한국어 및 학습격차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그 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비차별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즉, 한국태생 자녀와 이주배경 자녀 간의 차별뿐 아니라 이주배경 가족 자녀들 안에서도 선별적이며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 사업 대상 일원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러 한계 역시 존재하는데 첫째, FGI가 주로 수도권 거주 실무자와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 이외 지역 내 교육권 접근과 실태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참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수의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실과 경험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가 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교육 체계 내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과 참여 청

소년 역시 현재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이라는 점은 큰 한계로 작용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의 부모, 가족 및 교사 등과의 심층적 면접을 통해 이들이 지각하는 현 국내 교육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2023-2027」.
교육부. 20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_____. 2023.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김강남. 2022.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배경 초등학생의 학업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탐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이선·정해숙·김영옥·마경희·김효선·이순미. 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 평가 보고서: 다문화가정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김이선·최윤정·동계연·신현옥. 2016.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영. 2019. 「프랑스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도시연구, 15: 179-228.
김현미·강슬기·김사강·박임호·박정형·이상국·백지원. 2020.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의 교육권 실태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김희주·김영미·김혜미·김수경. 2021.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문병기·장임숙·정동재·송현주·박미정. 2018.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박민정·김명희·박동찬·박에스더·우효진·이민호·이화용·이희영. 2023.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민정책연구원.
배성렬·이경상·임지연·이민정.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KIEP 대외 경제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2022.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_____. 2023.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신윤정·이창원·이규용·Li Hua·Nguyen Thi Tham·Maruja MB, Asis·Sachi Takahata·Hong-Zen Wang·장은숙·양미선·최혜리·최서리·김철효·이탁건·권영실·박미화·이상지·강동우·김이선·최윤정·주수인. 2018.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계민. 201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양계민·김지연·장윤선·김사강·김동진·이탁건·김주영. 2020.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경은. 2021. 「경기북부 이주배경 아동 돌봄환경 실태조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오경석·이경숙. 2018.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 우복남. 2020. 「충남 이주배경 아동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보연. 202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젠더법학 13(1): 135-158.
- 이중희·구은미. 2016.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 교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6(4): 297-323.
- 이혁승·하민현. 2018. 「한국과 타이완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25(6): 81-107.
- 이혜숙. 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 보고서.
- 정기선·이상지. 2016. 「국내 외국인·이민 관련 행정통계 이해를 위한 소고」. IOM Issue Brief, 04.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 2019. 「2018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2023. 「202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Morgan, D. L. and Krueger, R. A. 1998. *The Focus Group Ki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International Office of Migration. 2024. 전 세계 동향. <https://republicofkorea.iom.int/> (검색일: 2024. 3. 2)
- UNICEF. 2021. "Child Migration." <https://data.unicef.org/topic/child-migration-and-displacement/migration>(accessed August 30, 2021)

국 문 초 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주(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 법과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교육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관련 법률은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둘째,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수월해졌으나, 복잡한 서류절차와 학교 재량에 따른 잔업 학 허용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습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업의 양적·질적 충분성과 체계성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법과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해 소수의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법과 정책의 영향을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 학교적응, 다문화 정책

Abstract

Educatio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Kim, HeeJoo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Kim, Hyem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Specifically, we seek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ir education rights are protected by laws, policies, and education services and identify barriers that children experience in accessing and utilizing public school systems. These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econd,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ocial workers and immigrant children. The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some progress has been made in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their educational rights, a discrepancy continues to exist between the law and its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Entry in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remains a difficult task for many adolescents. For those who have successfully entered the system, hostile, discriminatory, uncaring, and culturally insensitive school environments often function as barriers to adjustment. Overall, the findings call for more culturally sensitive, cognizant, and respectful educational systems.

Key words: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educational rights,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policies

청소년 ICT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 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김지민*

김
지
민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1. ICT리터러시와 디지털리터러시
2. ICT리터러시 영향요인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3. 측정도구
4. 주요 변수 기술통계
5.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무조건모형
2. 가정환경 영향요인 검증
3. 학교수준 영향요인 검증

V. 논의 및 결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E-mail: jiminkim@kihasa.re.kr, Tel: 044-287-8176)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111>

투고(접수)일 2024.5.2. 심사(수정)일 2024.5.23. 게재확정일 2024.6.17.

I. 서론

4차 산업혁명에는 개인들로 하여금 방대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공했다. 과거 교육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많은 정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한편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을 초래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산업화가 기존의 신분제적 기성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새로운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양상을 만들어 낸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또한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질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홍찬숙 2021).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화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ICT 리터러시 수준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나 전생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민들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강력한 자원으로 기능하므로(Shopova 2014) 청소년에게 있어 ICT리터러시는 학력과 성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주요 인적자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주기 상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ICT 리터러시는 필수적인 성취 요인이다. 그러므로 공교육 차원에서는 ICT리터러시에 있어 가정환경이나 소속 학교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관련 교육격차가 방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환경

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가정 환경 중 어떤 요인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척도 개발이나 측정에 초점을 왔다(남창우·안성훈 2016; 안성훈·채경화 2016; 이문수 외 2019). 그리고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생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연구모형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박효진·박성희 2023; 안성훈 2017). 아동 청소년기 발달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시도해 봄직하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한편 교육격차는 가정 환경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학교의 ICT교육 수준, 도시/농어촌, 학교 규모 등 학교 간 격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학교 특성이 청소년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규모나 학교의 ICT기반 등이 학생 IC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atlevik et al. 2018; Huang et al. 2010; Wang and Chen 2021).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수준의 ICT교육이 학생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바 있으나(안성훈 2017; 이운지 외 2019; 전지연·김진모 2023)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 가정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인적 자본인 ICT리터

러시의 영향요인을 가구 및 학교 수준에서 살펴보고 ICT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 및 가정 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과 분석절차를 반영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고찰

1. ICT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약자로, ICT리터러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활용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개념의 범위와 초점이 다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 초기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기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 ICT리터러시나 디지털 정보를 평가하는 정보 리터러시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점차 디지털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 공유,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박하나 외 2021). 이에 현재 확장된 개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미디어 표현을 창조할 수 있

는 개인의 인식, 태도 등의 전반적 역량을 의미한다(Munzenmaier and Rubin 2013). 반면, ICT 리터러시는 특히 검색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는 능력,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Reddy et al. 2020; Solmaz et al. 2023).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기 활용 능력과 정보 탐색 능력 뿐 아니라 창의성, 윤리성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반면, ICT 리터러시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위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ICT 리터러시는 정보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의 하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Solmaz et al. 2023).

ICT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된다. 교육, 업무, 커뮤니케이션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 시대에서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Reddy et al. 2020; Siahaan and Gunawan 2021). Vlieghe(2017)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요인 중에서 ICT리터러시가 언어에 있어서 기본 문해 능력과 유사하다고 비유했다. ICT리터러시의 부족은 알파벳을 읽지 못하는 문해력 부족과 같으며 디지털 시대에서 이는 곧 개인에게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디지털 중심의 세상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ICT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기능을 상징한다. 읽고 쓰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사고력, 판단력 등 다른 발달도 지연되는 것처럼, ICT리터러시 자체가 부족하지 못하면 디지털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발

달이 지연되고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능력이나 협력 네트워크 형성도 어려워질 것이다.

Hübner et al.(2023)의 연구에 따르면 ICT 리터러시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는 세상에서 미래 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Reddy et al.(2020)는 ICT 도구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계, 직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기술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이 학습,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Suwarto et al. 2022; Fajriyah and Fauziyah 2018).

특히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생애주기 상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ICT 리터러시는 필수적인 성취 요인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노동 환경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ICT 리터러시 증진이 필요하다. 이는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기술을 습득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Senkbeil 2021). Hatlevik 외 (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ICT 자기 효능감, ICT 능력, 컴퓨터 사용 경험 및 기술 접근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리터러시가 높은 학생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주요 기술인 ICT 역량을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ICT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9년까

지의 국내 미디어 디지털 정보 ICT 리터러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도현 (2020)에 따르면 10년간 ICT 리터러시를 주제로 게재된 학술지는 23편으로, 미디어 리터러시(91편)와 디지털 리터러시(67편)에 비해 매우 적다. 특히 2015년 이전에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진단 검사가 활발해진 2015년 이후에 조금씩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부 수행된 연구들 또한 척도 개발이나 측정 등 ICT리터러시 수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성 외 2011; 남창우·안성훈 2016; 백순근 외 2009; 안성훈·채경화 2016; 이문수 외 2019). ICT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 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ICT 리터러시 영향요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에 능숙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개인 간의 ICT 리터러시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를 제공하는 이 연구는 2007년에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018년에 CT(Computational Thinking) 영역으로 측정 영역을 확장하였다. ICT영역의 하위영역이 정보의 탐색, 분석 및 평가, 조직 및 창출, 활용 및 관리, 소통이고 CT 영역의 하위영역은 추상화, 자동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문항이 디지털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ICT리터러시 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 대도시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가 중소·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연도별로 커지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이는 디지털 발달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상은 환경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환경 수준 영향요인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먼저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장 밀접한 소속 단위인 가정의 환경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조사(ICILS: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과 칠레의 청소년 6,0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Aydin(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환경은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 인터넷 연결 수준, 컴퓨터 이용 경험은 양국의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 내 물리적 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 내 인프라 지원, 보호자 교육 등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van Deursen and van Dijk(2014)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의 디지털 역량 약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거나 관련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적극적 중재'를 하기 어

럽다는 점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Scherer and Siddiq(2019)의 연구에서도 ICT리터러시 분산의 17%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ICT활용 수준(안성훈 2017), 보호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박효진·박성희 20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문수 외 2018) 등이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학업성취와 같은 다른 청소년기 주요 발달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과 달리 ICT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외(2018)가 국제조사인 ICILS 자료를 활용해 학교 ICT 자원 수준이 중학생의 컴퓨터 정보 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직업, 보유 도서량의 합성지표를 변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 관련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가정 내 ICT활용 수준(안성훈 2017), 보호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박효진·박성희 2023) 등은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며 디지털 활용능력도 발달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가정환경 중에서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ICT리터러시가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보장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중요하다. 또한 언어 등 다른 인지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도와 같은 적극적 중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리적 인프라나 부모의 태도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수준 영향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ICT효능감과 CIL(컴퓨터 정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Hatlevik et al, 2018). Huang et al.(2010)에 따르면 학교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습 보조 도구의 활용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ICT리터러시를 높이고 학습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 and Chen(2021)의 연구에서는 가구 수준과 학교 수준의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수준의 영향요인으로 ICT기기 지원보다는 학교 규모가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수준에서 ICT교육 경험, 학교에서의 ICT활용 수준, 학교규모,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여부 등 디지털 활용에 관련된 여건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안성훈 2017; 이운지 외 2019; 전지연·김진모 2023). 또한 학생 1인당 PC보유 대수 등 학교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또한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Kil, Shin 2014). 교사 특성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경우 교사가 ICT교육 관련 전공일 경우 학생의 ICT리터러시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종민 외 2017; 김종민 외 201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2차 자료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ICT 리터러시 관련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자료이자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자료는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차 자료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도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ICT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진단 검사가 활발해진 2015년 이후에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대표적인 ICT리터러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초중등 학생, 담임교사, 관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로 그 활용가치가 높지만 부모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수준 영향요인을 밝힘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를 디지털리터러시로 확장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거나 다른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먼저 전지연과 김진모(2023)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경험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요인을 탐색한 이경숙(2023)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창의적

교육 활동이 주관적 학생 응답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의 효과를 측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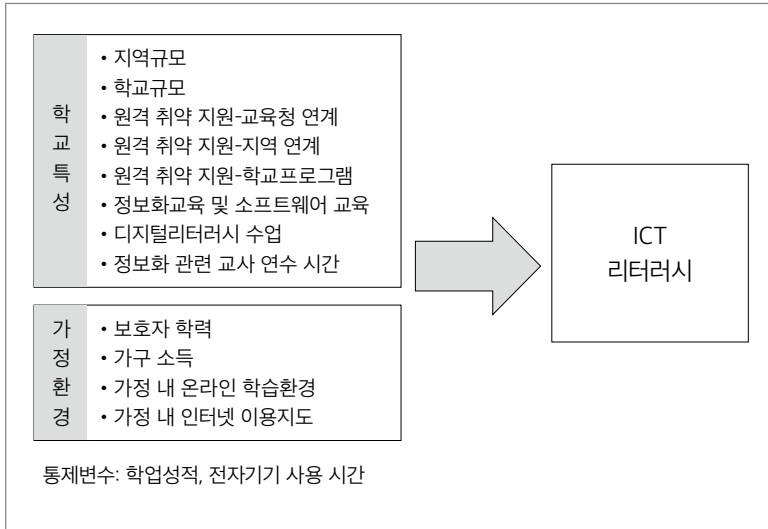
학교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교에서의 ICT교육 등 ICT관련 경험은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ICT리터러시 관련 국내 선행연구 다수는 2차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정환경 관련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부모와 가정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 관련 영향요인을 가정환경 관련 요인과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은 학생 조사, 가정 환경은 학부모 조사, 학교 특성은 학교 조사 및 학교 DB에서 추출하였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에 위계적으로 내재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영역별 개인 및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구 자료는 개인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 위계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층모형에서는 두 요인을 각 수준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개인과 가구 자료가 학생응답-학부모응답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통제변수를 1수준에 함께 투입하여 1수준(개인 통제변수 및 가정 환경 영향요인), 2수준(학교 영향요인)의 2수준 다층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과 이에 대한 가정환경 및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1년 수행한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를 선택하였다.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니라는 한계

가 있지만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하고 지역 특성으로 도시, 도농복합시,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 활용도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 학교교육실태조사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전반적인 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발달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교육정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횡·종단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조사에는 181개 학교에서 8,884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5,948명의 학부모, 5,189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학생 응답자가 30명 미만인 학교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에서 최소한의 표본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Rule of Thumb)으로 연구 주제와 모형에 따라 고정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30개 집단에 각 30명의 표본(30/30rule), 수준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50개 집단에 각 20개 표본(50/20rule), 무선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100개 집단에 10개 표본(100/10rule) 등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Hox 1998). 본 연구는 각 영향요인이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절편)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의 표본 기준에 따라 1수준 응답이 30개 미만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가 학교DB 데이터, 학교 응답 데이터, 교사 데이터, 학부모 데이터, 학생 데이터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부모 학력 변수의 활용을 위해 보호자가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조손가구나 가정외보호 등)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에는 경기학교교육실태 조사 2차년도 자료 중 91개 학교의 중학교 3학년 3,665명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ICT리터러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에 디지털 리터러시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 문항은 주관적 인식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정보 탐색 능력, 인터넷 활동 자기조절 수준, 인터넷 윤리 준수 정도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각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디지털 기기 활용 영역과 인터넷 정보 탐색 영역 6개 문항의 평균을 ICT리터러시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전체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이 6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포함된 문항의 내용이 문서 작성 능력, 파일 공유 능력, 검색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ICT리터러시 평가의 능력 요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종속변수 문항 구성

문항	측정
한글이나 PPT를 활용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능숙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Cronbach α =.913)
내가 만든 자료나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잘 공유한다	
인터넷 학습 공간에 올려둔 자료를 잘 내려 받아 활용한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 통제변수²⁾

(1) 학업성적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이다(김혜숙 외 2008; 박효진·박성희 2023). 따라서 가정환경 및 학교 요인이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은 응답자가 인식한 현재 성적을 자기보고하였고 ① 아주 낮은 편~⑤ 아주 높은편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전자기기 사용시간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경험에 대한 인프라로서 가정환경 수준에서는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여부,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과 수업 운영 여부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이들 요인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험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의 하루 평균 전자기기 사용 시간 평균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가정환경 영향요인

(1) 부모 학력

부모 학력 수준은 학부모 조사에서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에서는 성별 코드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발달에 있어 성별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추후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졸업 ③2·3년제 대학 졸업 ④4년제 대학 졸업 ⑤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수료 포함) ⑥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 명인 부 또는 모의 학력을 적용하였다.

(2)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학부모 조사에서 응답된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으로 측정하였다. 표준편차가 큰 소득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로그전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온라인 학습 교구 구비 여부, 온라인 수업 지도 여부 등의 5개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의 이분형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5개 문항의 합산(범위: 0~5)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종속변수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내 자녀가 학습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	0 아니오 1 예 (합산값 범위 0~5) (Cronbach α =.613)
태블릿, PC, 노트북 등 온라인 학습 교구가 잘 준비되어 있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 과제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나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문항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이 더욱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도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자녀에게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해 조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도 등 4개 문항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나는 바람직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해 자녀에게 조언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다 (Cronbach α =.797)
나는 사이버 학교 폭력과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한다	
나는 공부 및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녀의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나는 자녀가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본다	

3) 학교수준 영향요인

(1) 지역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규모는 학교 DB 데이터의 지역규모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 기준 학교알리미 DB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대상 학교의 78.02%(71개교)는 중소도시, 21.98%(20개교)는 읍면지역에 속해있다.

(2) 학교규모

학교 규모는 재학 학생수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 학교의 학생수 평균은 679.41명, 표준편차는 284.46이다.

(3)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교육청 연계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학교 조사에서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환경, 특수교육 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측정한 문항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교육청 차원의 학습 컨설팅 등을 통해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는 30개교(32.97%)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172명(33.39%)이다.

(4)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는 7개교(7.69%)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274명(7.57%)이다.

(5)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학교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는 54개교(59.34%)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2,125명(58.73%)이다.

(6)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학교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학교 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사업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운영에 대해 운영/

미운영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는 53개교(58.24%)이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520명(42.01%)이다.

(7)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학교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 조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 응답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에 대해 예/아니오의 이분형 문항 3개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3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문항 구성

문항	측정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읽고 선택하는 활동을 한다	0 아니오 1 예 (합산값 범위 0~3) (Cronbach α =.708)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PC< 휴대폰 등)를 활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8)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연수 시간

학교 수준의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 연수시간은 교사 조사의 ‘연간 연수 이수시간’항목에서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항목을 활용하였으며 교사응답의 학교별 평균값을 2수준(학교수준) 변수로 분석하였다. 교육시수는 ①없음(0시간), ②1-15시간, ③16-30시간, ④31-45시간, ⑤46-60시간, ⑥61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교사 연수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측면에서 연수 시간만을 측정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주요 변수 기초통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다중공선성,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연구방법의 각 측정도구 항목에 기술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CT리터러시의 왜도는 -.304, 첨도는 3.236로 종속변수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중 가구소득은 왜도 12.07, 첨도 271.09로 정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그전환하였으며 로그전환 후 왜도는 1.33, 첨도는 9.78로 개선되었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 (VIF) 최대값이 1.20으로 양호하였다.

[표 5] 주요 변수 기초 통계

영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변수	ICT리터러시	1.00	5.00	3.52	.88	-.29	3.18
통제변수	학업성적	1.00	7.00	3.02	.79	1.00	4.58
	전자기기 사용시간	1.00	5.00	3.26	1.06	-.10	2.45
가정환경 영향요인	부모학력	1.00	6.00	2.25	.94	.17	2.14
	가구소득(만원)	1.00	60,000	879.50	1930.34	12.07	271.09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00	5.00	4.59	.85	-2.16	7.12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	1.00	4.00	3.00	.53	-.23	4.18
학교수준 영향요인	학교규모	149	1,339	695.44	288.37	.31	2.42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 활동	1.10	2.87	2.33	.43	-1.12	3.80
	교육정보화 및 원격수업 관련 교사 연수 시간	1.25	3.96	2.24	.50	.55	4.11

5. 분석방법

위계적으로 구성된 자료를 일반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우 표본의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게 되며 추정된 표준오차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강상진 2016, 42).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청소년과 학교 수준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구조이며 따라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요인의 분산이 개인(청소년) 분산과 집단(학교) 분산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STATA18.0을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다층모형은 기울기 고정 여부에 따라 무선절편모형과 무선계수모형으로 구분된다. 무선절편모형은 절편만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기울기는 고정) 무선계수모형은 절편과 기울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종속변수에 대한 수준별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무선계수모형에서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남궁은하 2023; 장인수 김홍석 2016).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수준(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학교수준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므로, 종속변수의 기울기를 고정한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설명변수는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전체평균중심화하였다. 중심화 방법 중에서 전체평균중심화는 다층모형 연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며 1수준 설명변수의 통제효과를 반영하여 모든 고정효과 회귀계수가 각 변수의 고유 효과로 해석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상진 2016, 295).

다층모형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³⁾, 영향요인 없이 종속변수만 투입한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청소년과 학교 요인의 분산 비중을 살펴보고 ICC값을 통해 다층모형 검증의 필요

3) 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이 필요한 종속변수 정규성, 독립변수 다중공선성 등은 [표 5] 주요 변수 기초통계를 참고.

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ICT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1수준 변수인 통제변수와 가정환경 요인만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변수인 학교수준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모형은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별로 AIC, BIC, ICC, 설명된 분산 값을 제시하였다. 설명된 분산 값의 경우 그 산출 방법이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Snijders and Bosker(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1 - (\text{후속모형의 총분산} / \text{이전 모형의 총분산})\}$ 으로 계산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무조건모형

청소년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의 영향을 검증하기에 앞서, 다층모형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null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만 투입한 모형으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수준별로 분해하여 총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Maas and Hox 2005). 무조건 모형은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i 는 응답자 개인, j 는 학교를 나타내며 Y_{ij} 는 j 학교에 속한 응답자 i 의 ICT리터러시 수준을 의미한다. β_0 는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μ_j 는 각 집단의 무선절편, e_{ij} 는 잔차(개인의 오차)이다. 무조건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의 총 분산을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으로 분해한 후에는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값의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Y_{ij} = \beta_0 + \mu_j + e_{ij} \text{ <식 1>}$$

$$ICC = \sigma_r^2 / (\sigma_r^2 + \sigma_v^2) \text{ <식 2>}$$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는 [표 6]의 모형0과 같다. 집단간 분산은 .037, 집단내 분산은 .728로, 총 분산 .765 중 집단 간 분산 .037의 비중(ICC)이 .0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분산의 4.8%가 집단 간 차이, 즉 학교에 따른 차이인 것을 의미한다. ICC값 낮게 나타난 것은 총 분산 중 학교차이로 인한 분산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ICC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표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독립성 가정 위배로 인해 일반 회귀모형을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일반 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1종 오류의 위험이 있다(Huang 2018). 따라서 본 연구문제에서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환경 영향요인 검증

무조건모형과 ICC값을 통해 총 분산에 대한 학교 수준 영향의 비중을 확인한 후 먼저 통제변수와 가정환경 관련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무선절편모형에 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Y_{ij} = \beta_0 + \beta_1(\text{학업성적}) + \beta_2(\text{전자기기이용시간}) + \beta_3(\text{부모학력}) + \beta_4(\text{로그가구소득}) + \beta_5(\text{가정내온라인학습환경}) + \beta_6(\text{가정내인터넷이용지도}) + e_{ij} \text{ <식3>}$$

가정환경 영향요인 검증에 앞서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1과 같다. 먼저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ICT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건희 2021; 양지선 2022; 정수정 최고은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자기기 이용시간 또한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ICT리터러시 자체가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기기 이용 시간이 길 경우 ICT 활용능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환경 영향요인을 투입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2와 같다. 가정환경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로그변환한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부모 학력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Scherer and Siddiq 2019).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문수 외(2018)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된 적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학력, 직업, 보유 도서량의 합성지표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 아닌 교육수준만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외의 가정 내 환경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학습환경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터넷 이용 지도만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른 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ICT리터러시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과 증제가 자녀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Chen and

Chng 2016; Clark 2011; van Deursen and van Dijk 2014).

3. 학교수준 영향요인 검증

학교수준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변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추가하였다. β_{0j} 는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별 평균이자 1수준 변수만 투입한 모형2 수식의 절편항이다.

$$\beta_{0j} = \gamma_{00} + \gamma_1(\text{지역규모}) + \gamma_2(\text{학교규모}) + \gamma_3(\text{취약지원1}) + \gamma_4(\text{취약지원2}) + \gamma_5(\text{취약지원3}) + \gamma_6(\text{정보화및소프트웨어교육}) + \gamma_7(\text{디지털리터러시수업}) + \gamma_8(\text{교사연수시간}) + \gamma_9(\text{학습자중심수업}) + \mu_{0j} \text{ <식 4>}$$

학교수준 요인을 추가한 검증 결과는 [표 6]의 모형 3과 같다.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학력과 가정내 인터넷 이용지도의 영향력은 유지되었고, 추가된 학교수준 요인 중에서는 학교 규모($p < .01$)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학교 평균($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가 클수록 학생의 ICT리터러시가 높다는 결과는 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Wang and Chen(2021)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ICT리터러시 영향요인을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수준에서는 학교 규모만이 유의미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ICT기기 지원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가 이에 대해 큰 학교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자원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중소·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통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가 있었

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응답자가 30명 미만인 학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가 20%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30명 이상인 학교들 간에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주로 도서벽지 분교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분석에서 제외되면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종 오류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집단 수와 집단 내 표본 수를 모두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층모형 분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이러한 한계를 결과 해석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규모 외에 학교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학교 평균이 있다. 이 요인은 교사가 자신이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학교 단위로 평균 계산한 변수이다. 즉, 학교 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편성했는지 여부와 편성 수업 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수업에 적극적인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이 ICT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역기관 연계,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배정과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이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측정도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의 경우 이분변수로 측정되었고 교사 연수시간은 연수의 방식이나 내용, 질적 수준은 포함하지 않고 양적 측면에서 '시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들 모두 프로그램과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은 반영되지 못한 변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6] ICT 리터러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0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절편		3.52	.025	3.51	.024	3.51	.02	3.57	.04
가정 환경	학업성적	-	-	.045***	.018	.06***	.02	.06***	.02
	전자기기 이용시간	-	-	.263**	.013	.24**	.01	.24**	.01
	부모학력	-	-	-	-	.08***	.02	.07***	.02
	가구소득(log)	-	-	-	-	.01	.02	.01	.02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	-	-	-	-	.01	.02	.01	.02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	-	-	-	-	.11***	.03	.11***	.03
학교 특성	지역규모	-	-	-	-	-	-	.00	.05
	학교규모	-	-	-	-	-	-	.00**	.00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학교프로그램	-	-	-	-	-	-	-.01	.04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교육청 연계	-	-	-	-	-	-	.01	.08
	원격수업 취약학생 지원: 지역기관 연계	-	-	-	-	-	-	-.05	.04
	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	-	-	-	-	-	-.06	.05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	-	-	-	-	-	.11*	.05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	-	-	-	-	-	-	.00	.04
무선 효과	개인수준 분산(SE)	.728		.654		.649		.649	
	학교수준 분산(SE)	.037		.035		.027		.021	
설명된 분산		-		.099		.019		.009	
AIC		9226.367		8845.969		8808.541		8809.096	
BIC		9244.948		8876.937		8864.284		8914.389	
ICC		.048		.051		.040		.031	

주: *p<.05, **p<.01, ***p<.001

한편 기초모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교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무선절편모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1수준 요인의 효과가 2수준 집단(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적용하여 수준 간 상호작용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무선계수모형은 집단별로 절편 뿐 아니라 기울기도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무선계수모형이 무선절편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실행하지 않았다. 즉, 가정환경과 학교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은 각각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수준별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생애주기 상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ICT리터러시는 필수적인 발달요인이다. ICT리터러시는 학력과 성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주요 인적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여러 정책적 개입을 해온 것처럼, ICT리터러시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입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2수준 다층모형으로 살펴보고 가정환경 차원에서는 어떠한 청소년들이 취약한지,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개입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질문에 따라 연구 결과와 교육적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관련하여, 학교 간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조건모형에서 급내상관계수 ICC값을 계산한 결과 청소년의 ICT리터러시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부분이 4.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 수준 등 개인적인 요인은 고정되어 있고 가정 내 양육환경도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은 반면 학교 수준의 요인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집단 수준 요인의 영향은 그 크기가 작더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quez et al, 2023). 따라서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과 학교와 가정환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의 학력 평균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로 확인되었다. 가구 소득과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ICT리터러시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2차 자료인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ICT리터

리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합성지표로 투입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각 요인의 개별적 영향은 검증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이문수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도 가구소득이 아닌 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가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ICT활용 능력과 효능감이 낮고 이에 자녀에게 ICT사용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적극적 중재’를 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자녀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Chen and Chang 2016; Clark 2011).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ICT활용 교육을 확대하거나 부모 대상의 자녀 교육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상대적으로 가정 내 인터넷 이용지도가 부족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 소득에 따른 ICT리터러시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만큼 소득기준보다는 이러한 가구 특성별 기준에 따른 지원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학교 규모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정도로 확인되었다. 학교 차원의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학교 자체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역연계)이나 정보화·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 학습자 중심 수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가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Wang and Chen(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ICT리터러시가 높은 이유로 큰 학교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여 자원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중소·읍면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통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층모형 분석에서 1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명 미만 응답 학교의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응답자가 적은 학교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분교 등 특정 지역(주로 섬이나 읍면지역)에 분포한 학교가 제외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규모가 학생들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밝혀진 만큼 이러한 차이가 지역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도서벽지 지역의 자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반영하지 못했으나 학교 규모에 따른 ICT인프라 격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2024.5.)을 통해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 학교 간 격차에 대한 내용은 디바이스 보급 등에 있어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황 분석 영역의 언급 뿐, 격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학생의 PC구매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소규모 취약 학교에 대한 별도 지원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ICT 리터러시에 격차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은 학생 단위의 저소득층 지원 뿐 아니라 학교 단위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지원 계획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ICT리터러시에 대한 학교 교육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 차원의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학

교 자체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지역 연계)이나 정보화·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원격수업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화·소프트웨어 교육은 시행 여부만 이분변수로 측정되어 그 양과 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사 연수 시간은 시간량으로 측정되었지만 연수 종류(대면/비대면 등)나 연수 내용, 질적 수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교사 연수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학생의 ICT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진 만큼 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편성도 형식적 편성이 아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보편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 중 가구 소득은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부모 학력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ICT리터러시가 물리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기기 보급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혹은 ICT리터러시 취약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을 선별해야 할 경우에는 소득 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 등 보호자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

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주요 인적자본인 ICT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가정 및 학교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에서 학급 ID를 제공하지 않아 교사 수준 특성을 자세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모형 명세화에 있어 투입변수와 과정변수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준비하는 시점(교육부 2024.5.)에서 ICT인프라와 교육 지원의 초점이 개인 및 가구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에 따라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강남 8학군 등으로 대표되어 온 학교 간 교육격차가 ICT리터러시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의 ICT리터러시가 낮다는 점은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 디지털 인프라나 접근성의 격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환경 수준에서 가구 소득이 아닌 부모 학력이,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이 아닌 가정 내 인터넷 사용지도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ICT리터러시 지원 대상이 경제적 배경 뿐 아니라 부모 교육수준이나 가정 내 지도 환경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실천적 함의가 있으며, 정보화와 관련된 교사 연수 등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소양을 언어, 수리능력과 함께 3대 기초 소양으로 포함하고 정보 수업 시간을 2배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교육부 2022). ICT교육 확대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의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업성취 등 다른 발달 요인과 마찬가지로 ICT리터러시 또한 가정환경, 지역, 학교 등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특히 물리적 인프라를 전제로 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 그 접근 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교과목에 비해 교육격차가 더욱 클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교육과정과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등에서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소속 학교에 따른 ICT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소규모 학교(분교 등)를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가정 내 지도가 부족할 수 있는 맞벌이, 다문화, 조손 가구와 일반 가구의 비교 연구 등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교육부. 20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 김건희. 2021. 「COVID-19 에 따른 전면 원격강의 전후 미디어리터러시, 그릿의 차이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영향요인」. 조형미디어학 24(1): 272-279.
- 김경성·이수영·전우천·김혜숙·곽현석·김종훈·서정희. 2011. 「우리나라 초, 중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 한국초등교육 22(3): 195-211.
- 김도현. 2020. 「국내 미디어·디지털·정보·ICT 리터러시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6(3): 93-119.
- 김종민·김한성·임현정·안성훈. 2018. 「다층모형을 활용한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영향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2): 415-440.
- 김종민·안성훈·임현정·김한성. 2017.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3): 321-334.
- 남궁은하. 2023. 「지역사회자원 접근성이 노년기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른 차이」. 보건과 복지 25(2): 7-36.
- 남창우·안성훈. 2016. 「초·중학생의 컴퓨터 활용 및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이 ICT 리터러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8-32.
- 박하나·진명화·박지우·임규연. 2021.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 75-101.
- 박효진·박성희. 2023. 「가정 빈곤 군집에 따른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차이 분석」.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6): 629-641.
- 백순근·김동일·김미량·김혜숙·유예림·박소화·김세원·김미림. 2009.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평가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2): 383-406.
- 안성훈. 2017. 「ICT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학생의 배경 요인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4): 67-75.
- 안성훈·채경화. 2016.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과 성별 ICT 활용 습관 차이와의 상관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3): 303-312.
- 양지선. 20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업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 융합 44(6): 185-206.
- 이경숙. 2023.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요인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6(1): 103-131.
- 이문수·김종민·김진섭. 2019.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변화 비교: 검사 연계화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0(2): 179-202.
- 이운지·임선아·김한성·이현숙. 2019.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예측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교육* 46(2): 35-60.
- 장인수·김홍석. 2016. 「서울시민들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6(3) 85-118.
- 전지연·김진모. 202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요인」. *직업교육연구* 42(2): 53-72.
- 정수정·최고은. 2022. 「중학생의 ICT 활용유형과 ICT 리터러시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창의성,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8(4): 1099-112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 홍찬숙. 2021. 「독일에서 돌봄의 정치 의제화: 디지털 자본주의화, 고령화, 코로나 19 팬데믹 발발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53-278.

Aydin, M. 2021. "Does the digital divide matter? Factors and conditions that promote ICT literacy." *Telematics and Informatics* 58. (DOI: <https://doi.org/10.1016/j.tele.2020.101536>)

Chen, V. H. H. and Chng, G. S. 2016. "Active and restrictive parental mediation over time: Effects on youths' self-regulatory competencies and impulsivity." *Computers & Education* 98: 206-212.

Clark, C. 2011. *Setting the Baseline: The National Literacy Trust's First Annual Survey into Young People's Reading—2010*. National Literacy Trust.

Fajriyah, L. ·Fauziyah, P. 2018, November. "The role of ICT to develop early literacy of children in era digital. In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marang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Education Talks (SECRET 2018) (pp. 112-116. Atlantis Press.

- Gunawan, G.·Siahaan, A. 2021. "Sources Of Education Funds In Schoo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onesian Education Financial System," *Al'Adzkiya International of Education and Sosial (AIoES) Journal* 2(2): 246-262.
- Hatlevik, O. E., Throndsen, I., Loi, M.·Gudmundsdottir, G. B. 2018. "Students' ICT self-efficacy and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Determinants and relationships." *Computers & Education* 118: 107-119.
- Hox, J. 1998. Multilevel modeling: When and why. In Classification, data analysis, and data highways: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Conference of the Gesellschaft für Klassifikation eV, University of Potsdam, March 12-14, 1997 (pp. 147-154.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Huang, C. J., Liu, M. C., Chang, K. E., Sung, Y. T., Huang, T. H., Chen, C. H., ... & Chang, T. Y. 2010. "A learning assistance tool for enhancing ICT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3(3): 126-138.
- Huang, F. L. 2018. "Multilevel modeling myth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3(3): 492.
- Hübner, N., Fahrbach, T., Lachner, A.·Scherer, R. 2023. "What predicts students' future ICT literacy? Evidence from a large-scale study conducted in different stages of secondary school." *Computers & Education* 203: 104847.
- Kim, H. S., Kil, H. J.·Shin, A. 2014. "An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he ICT literacy level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uters & Education* 77: 29-38.
- Maas, C. J.·Hox, J. J. 2005. "Sufficient sample sizes for multilevel modeling." *Methodology* 1(3): 86-92.
- Marquez, J., Humphrey, N., Black, L.·Wozmirska, S. 2023. "This is the place: a multi-level analysis of neighbourhood correlates of adolescent wellbe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9: 929-946.
- Munzenmaier, C.·Rubin, N. 2013. "Bloom's taxonomy: What's old is new again." *The eLearning Guild*: 1-47.

- Reddy, P., Sharma, B.·Chaudhary, K. 2020. "Digital literacy: A review of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ethics(IJT)* 11(2): 65-94.
- Scherer, R.·Siddiq, F. 2019.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ICT literacy: Findings from a meta-analysis," *Computers & Education* 138: 13-32.
- Senkbeil, M. 2022. "ICT-related variables as predictors of ICT literacy beyond intelligence and prior achieve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7(3): 3595-3622.
- Shopova, T. 2014. "Digital literacy of students and its improvement at the university." *Journal on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in Education and Science* 7(2): 26-32.
- Snijders, T. A.·Bosker, R. 2011.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SAGE Publications Ltd.
- Solmaz, E., Özcan, S.·Coşkun, B. K. 2023. Digital and ICT Literacy in Distance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Definitions and Transformations. Information Literacy Skills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in Disseminating Scholarly In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DOI:https://doi.org/10.4018/978-1-6684-8805-8_ch001)
- Suwarto, D. H., Setiawan, B.·Machmiyah, S. 2022. "Developing digital literacy practices in Yogyakarta elementary schools." *Electronic Journal of E-Learning* 20(2): pp101-111.
- Van Deursen, A. J.·Van Dijk, J. A. 2014.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16(3): 507-526.
- Vlieghe, J. 2017. "ICT literacy: a technical or non-technical issue?." *Foundations of Science* 22(2): 401-404.
- Wang, Y.·Chen, I. H. 2021. "A multilevel study: Factors influencing taiwan primary school students' ICT lite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11(1): 16-23.
- “미래 창업가를 발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2024. 4. 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65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검색일:](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65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검색일:)

2024년 6월 4일)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5. 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검색일: 2024년 6월 4일)

국 문 초 록

청소년 ICT리터러시의 가정환경 및 학교수준 영향요인 다층분석

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2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의 91개 학교의 중학교 3학년 3,665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의 학력 평균과 가정 내 인터넷 이용 지도로 확인되었다. 가구 소득과 가정 내 온라인 학습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 ICT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요인은 학교 규모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정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ICT리터러시 관련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 확대 및 가정 환경에 따른 집중 지원확대의 필요성, 공교육 차원의 교사 연수 확대와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ICT리터러시, 디지털 교육격차, 다층모형분석

Abstract

Multilevel Analysis of the Home Environment and School Influences on Adolescent ICT Literacy

Kim, Ji-Min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ICT literacy at the home environment and school levels. Multilevel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using an analytical sample of 3,665 middle school students from 91 schools in the second year of the Gyeonggi School Education Survey.

This study highlights three key aspects. First,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a difference in youth ICT literacy among schools. Second, the home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ICT literacy were identified as average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guidance for Internet use. Household income and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t hom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ing adolescent ICT literacy were identified as school size and the amount of digital literacy instruction by teacher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xpand ICT education at the school level and provide intensive support for students based on their family backgrounds to prevent the ICT literacy gap.

Key words: adolescents, ICT literacy, digital education gap, multilevel modeling

일반논문

- |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윤상훈·윤희원
- |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만족과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박승화·정철
- |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 |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손창우
- |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시공간적 특성 탐색 방법론: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을 사례로
박소현·윤정원·김민수·구양미
- | Bike-Sharing as Entertainment: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n the U.S.
Kihyun Kwon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윤상훈*·윤희원**

연구상
한 · 연
의 원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내용
- II. 이론적 고찰
 - 1. 사회안전인식 및 도시안전 위험요인 정의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착안점 도출
- III.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 1. 분석방법
 - 2.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 3. t-test를 통한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평가 및 비교
- IV.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 1. 분석결과
 - 2. 분석결과 비교분석
- V. 결론
 - 1.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 향후 연구과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시설연구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교신저자(E-mail: heew0420@korea.kr, Tel: 052-928-8324)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155>

투고(접수)일 2023.9.21. 심사(수정)일 2023.10.10. 게재확정일 2024.6.17.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도시안전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도시는 물리적,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시는 인프라와 시설물, 사람들의 활동 등으로 인해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항상 노출되어 있다.

도시안전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많아질수록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며 자신의 도시에 대한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공공에 요구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시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안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도시에 따라 도시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개개인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위험요인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도시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인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군으로 구분한 후 실질적으로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인천광역시의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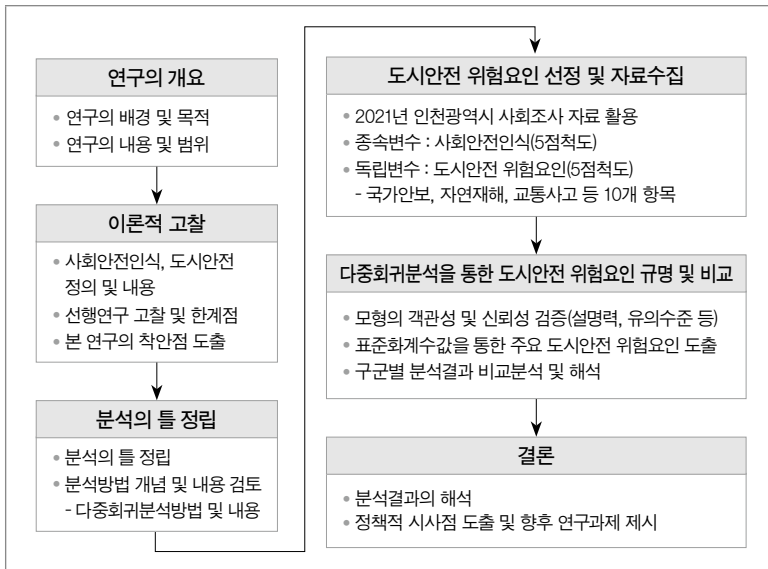
2.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분석하여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인식, 도시안전 위험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착안점을 도출한다.

둘째,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 중 사회안전인식 및 도시안전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과 관련된 설문조사 부분을 활용하여, 구와 군의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검증(t-test)를 실시한다.

셋째,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구 그룹과 군 그룹의 실질적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비교한다. 각 그룹별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안전인식 및 도시안전 위험요인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에는 사회안전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다. 사회안전인식에 대한 질문에 5점 척도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5점은 ‘매우 안전하다’, 1점은 ‘매우 불안하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사회안전인식을 13세 이상 인구 중 우리 사회가 자연재해, 범죄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안전인식의 정의는 인천광역시 도시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생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상에서 사회안전인식과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면, 박영희·민소영(2015)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낄 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함이 사회안전인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임동진(2016)의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와 안전의식이 결여된 안전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안전은 개인 차원의 안전이 집합적인 수준으로 확대된 개념이며, 사회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두산백과). 배대식(2009)은 안전을 사생활, 개인 안전, 자산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창현·문순영(2016), 안형근·전기범·김은성(2009)의 연구에서는 안전이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없애고 사고를 줄이는 것,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비의도적인 피해나 파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시안전은 도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을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착안점 도출

1) 사회안전인식 관련 선행연구

사회안전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동진(2016)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안전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고위험 인식집단에는 보다 적극적인 위기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정부가 사회안전을 위해 선진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영희·민소영(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공동체 의식이 여성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젠더 차원을 고려한 세심한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우석·강은영·강상준·구연숙·조성한(2013)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범죄, 교통안전, 도시재난에 대한 안전수준을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내 치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조성, CPTED 인증센터와 같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 도시안전 위험요인 관련 선행연구

김명수(2017)는 정책 리포트에서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위

해 '안전위험지도'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재난 상황별 거버넌스 구축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이용한 도시안전정책 개발과 연계가 필요하며 도시안전 정책의 수립 기간과 집행계획 개선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시민이 주체가 된 안전 공동체 실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재송·김유경·최열(2017)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도시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도시안전에 대한 인식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건축물 및 시설물, 범죄위험, 전반적인 사회 안전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각 도시마다 도시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각 시마다 맞춤형 정책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신상영·조권중·이석민·이윤상(2015)의 연구에서는 도시안전 차원에서 다양한 재난·사고 유형과 안전관리 영역의 주요 과제들을 식별하고, 서울의 장래 전망 속에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황선아·김종구·강윤원(2015)의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여건에 맞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포용도시에 대한 생활안전지표를 설정하였다. 생활안전지표로는 범죄취약(범죄발생율, CCTV 설치율, 5대 범죄율, 노후주택 비율 등), 보행안전취약(교통사고율, 자동차 허용 속도, 보도율 등), 노인취약(노후주택비율, 무더위쉼터 갯수, 저소득층 분포율, 고령화 지수 등)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착안점 도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안전인식과 도시안전 위협요인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지우석·강은영·강상준·구연숙·조성한(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범죄, 교통안전, 도시재난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황선아·김종구·강윤원(2015)의 연구에서는 범죄, 보행안전, 노인 취약과 관련된 단편적인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도시안전에 위협하는 위협요인들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어딘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위협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을 고려하였다. 국가안보 이외에도 환경오염, 먹거리, 정보보안,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와 같은 주요 요인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구와 군을 비교한 연구가 미흡하다. 도시는 구와 군의 특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인천광역시는 8개의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2개의 군(강화군, 옹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구와 군을 구별하여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을 규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와 군의 도시안전 위협요인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협요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표본 수, 표본 추출 등 통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I.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1.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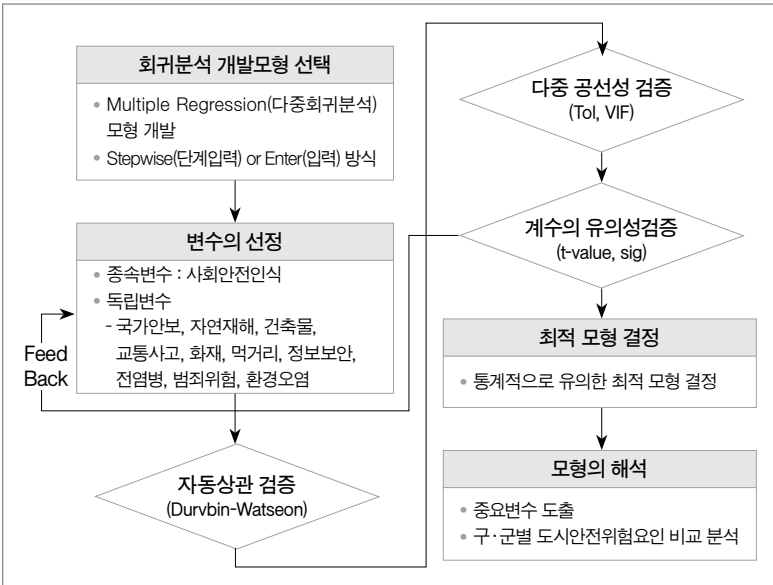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군별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공식 통계자료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 자료로 다중회귀분석 수행 시 각 구와 군의 자료를 토대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회귀모형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회귀모형을 확장한 모형이다. 다중회귀모형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도출하면서, 어떠한 변수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안전인식이며, 독립변수들은 국가안보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즉,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중회귀모형 개발 시 자동상관,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자동상관(자기상관)은 시간 및 공간에 따라 나열된 일련의 관측치들 간의 상관관계로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이 1.5 ~ 2.5 사이의 값을 가지면 자동상관을 무시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각 변수들 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팽창계수(VIF) ≤ 10 , 공차한계(Tolerance) ≥ 0.1 이면, 다중공선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 계수 값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t-value와 유의수준(sig) 값을

활용하는데, 신뢰수준 95% 내에서 유의수준(sig) ≤ 0.05 일 경우,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다중회귀분석 모형 개발 방향

2.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본 연구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 등 안전 정도에 대한 평가 부분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도시안전 위험요인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생활안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연재난의 경우, 태풍, 호우, 지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있으며, 사회재난의 경우, 붕괴, 화재, 교통사고, 환경사고 등이 있다. 생활안전으로는 범죄, 먹거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 상에서 안전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활용하였다. 안전조사 항목의 경우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위험, 교통 사고, 화재위험, 먹거리 위험, 정보보안, 전염병, 범죄위험,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협요인들을 조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의식 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는 2021년 8월 9일에서 9월 17일까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6,000가구(가구주 및 만 13세 이상 가구원)¹⁾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인터넷 조사 및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안전 정도에 대한 조사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 중 안전 정도에 대한 평가항목

구분	안전 항목	안전 정도(평가척도)
독립변수 (Xn)	국가안보	5점 리커드 스케일 매우 안전하다 - 5점 안전한 편이다 - 4점 보통이다 - 3점 불안한 편이다 - 2점 매우 불안하다 - 1점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전염병	
	범죄위험	
	환경오염	
종속변수 (Y)	사회안전인식	

자료(출처):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파일 설계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구·군별 응답자 수, 연령별, 성별, 가구 월 평균 소득을 분석하였다.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구·군별 추정이 가능하도록 10개 구·군으로 층화하여 표본 추출함. 최소표본규모를 계산하여 6,000가구로 선정하였고 구·군 간 인구가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구·군별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통해 표본을 배분함(출처: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표본설계).

구의 경우 서구가 1,566명(14.9%), 군은 강화군이 874명(51.9%)으로 응답자 수가 많았다. 연령별의 경우, 60대 이상이 구 3,434명(32.7%), 군 1,082명(64.3%)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의 경우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구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인 927명(8.8%)으로 많았으며, 군은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인 244명(14.5%)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자료의 구·군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구·군 구분					
구	빈도(명)	%	군	빈도(명)	%
계양구	1,448	13.8	강화군	874	51.9
남동구	1,379	13.1	옹진군	809	48.1
동구	1,041	9.9	합계	1,683	100.0
미추홀구	1,287	12.2			
부평구	1,534	14.6			
서구	1,566	14.9			
연수구	1,328	12.6			
중구	932	8.9			
합계	10,515	100.0			
연령별					
구	빈도(명)	%	군	빈도(명)	%
13~19세	717	6.8	13~19세	43	2.6
20~29세	1,261	12.0	20~29세	78	4.6
30~39세	1,368	13.0	30~39세	76	4.5
40~49세	1,765	16.8	40~49세	155	9.2
50~59세	1,970	18.7	50~59세	249	14.8
60세 이상	3,434	32.7	60세 이상	1,082	64.3
합계	10,515	100.0	합계	1,683	100.0

성별					
구	빈도(명)	%	군	빈도(명)	%
남자	5,093	48.4	남자	782	46.5
여자	5,422	51.6	여자	901	53.5
합계	10,515	100.0	합계	1683	100.0

가구 월평균 소득					
구	빈도(명)	%	군	빈도(명)	%
50만원 미만	369	3.5	50만원 미만	151	9.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675	6.4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44	14.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41	7.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5	12.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27	8.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66	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818	7.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20	7.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45	5.2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3	2.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19	4.0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6	1.5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12	2.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0	0.6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12	1.1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	0.2
800만원 이상	202	1.9	800만원 이상	12	0.7
결측값	5,495	52.3	결측값	703	41.8
합계	10,515	100.0	합계	1,683	100.0

3. t-test를 통한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평가 및 비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은 독립인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분석법이다(데이터 솔루션 컨설팅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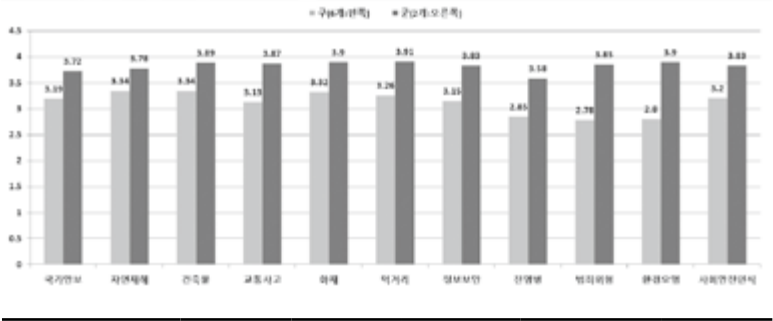
먼저,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는 구보다 군이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에 대한 안전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구 수는 구에 비해 군이 작지만,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로 활용될 사회안전인식의

경우, 구는 3.20점, 군은 3.83점으로 군이 구보다 0.623점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의 경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인은 자연재해 위험과 건축물사고 위험으로 각각 3.34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화재 위험 3.32점, 국가안보 3.19점, 정보보안 3.15점, 교통사고 3.13점으로 대부분의 지표들이 보통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의 경우 2021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호우의 경우 2020년에 비해 피해가 감소하였으며, 화재의 경우, 발생건수는 2021년 1,270건으로 2020년 1,368건 대비 98건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범죄의 경우에도 2021년 주요 범죄 발생건수는 7만 7천건으로 전년(8만 8천건) 대비 1만 1천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2022년 인천사회조사 결과보고서). 하지만, 구의 도시안전 위험요인 중에는 전염병 2.85점, 환경오염 2.80점, 범죄위험 2.78점과 같이 보통보다 낮게 안전 정도를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먹거리에 대한 안전 정도가 3.91점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화재와 환경오염이 3.90점 등 대부분의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이 4점인 ‘안전한 편이다’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도시안전 위험요인이 신뢰수준 95%에서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별로 구·군별 안전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향후 구·군별 도시안전개선에 차이를 인지하고 맞춤형 도시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평가 및 차이검증(비교)

도시안전위험요인	평균		차이검증(독립표본 t-검증)		
	구(8개)	군(2개)	평균차	t-value	유의수준 (0.05)
국가안보	3.19	3.72	-0.524	-24.747	.000
자연재해	3.34	3.78	-0.436	-21.756	.000
건축물	3.34	3.89	-0.550	-27.033	.000
교통사고	3.13	3.87	-0.737	-35.994	.000
화재	3.32	3.90	-0.582	-28.380	.000
먹거리	3.26	3.91	-0.653	-33.331	.000
정보보안	3.15	3.83	-0.674	-31.742	.000
전염병	2.85	3.58	-0.730	-28.800	.000
범죄위험	2.78	3.85	-1.062	-41.134	.000
환경오염	2.80	3.90	-1.096	-43.691	.000
사회안전인식	3.20	3.83	-0.623	-32.625	.000



IV.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1. 분석결과

1) 구 그룹 도시안전 위험요인 규명

인천광역시 8개 구의 10,515개 데이터로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단계 입력방식(Stepwise)에서 도출된 여러 개 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R2 값이 활용된다. 구 그룹의 도시안전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단계적 선택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 10개의 변수 중 9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9변 모형의 R2 값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변 모형에서 도출된 회귀모형이 전체의 52.0%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 상관계수는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사용하는데 본 회귀모형에서는 1.707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 상관계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모형의 결과요약(구 그룹)

Model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9	0.721	0.520	0.520	0.497

a Predictors: (Constant), 건축물, 범죄위험, 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환경오염, 정보보안

b Dependent Variable : 사회안전인식

9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회귀식에 의하여 설명되는 분산은 2,810.405이며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2,590.064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을 보면 0.000으로 이는 적합된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분산분석(ANOVA) 결과 요약(구 그룹)

Model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Sig)
9	Regression	2,810.405	9	312.267	1,266.520	0.000
	Residual	2,590.064	10,505	0.247		
	Total	5,400.470	10,514			

구 그룹에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 모형

을 도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338~0.471로 0.1보다 컸으며, VIF값이 2.125~2.958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뢰수준 9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건축물 0.142(t 값=12.434, Sig=0.000), 범죄위험 0.161(t 값=21.368, Sig=0.000), 국가안보 0.140(t 값=15.195, Sig=0.000), 자연재해 0.146(t 값=13.654, Sig=0.000), 교통사고 0.084(t 값=8.945, Sig=0.000), 화재 0.067(t 값=6.443, Sig=0.000), 먹거리 0.053(t 값=5.074, Sig=0.000), 환경오염 0.025(t 값=3.292, Sig=0.001), 정보보안 -0.021(t 값=-2.316, Sig=0.021) 로 도출되었다.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확인해 보면 범죄위험의 표준화 계수가 0.221로 나타나 구 그룹에서 사회안전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계수 결과값(구 그룹)

Model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Sig)	공차 한계	VIF
		B	표준오차					
9	(상수)	0.684	0.027	-	25.469	0.000	-	-
	건축물	0.142	0.011	0.144	12.434	0.000	0.338	2.958
	범죄위험	0.161	0.008	0.221	21.368	0.000	0.428	2.335
	국가안보	0.140	0.009	0.154	15.195	0.000	0.447	2.239
	자연재해	0.146	0.011	0.151	13.654	0.000	0.374	2.676
	교통사고	0.084	0.009	0.095	8.945	0.000	0.405	2.471
	화재	0.067	0.010	0.068	6.443	0.000	0.412	2.424
	먹거리	0.053	0.010	0.054	5.074	0.000	0.401	2.496
	환경오염	0.025	0.007	0.032	3.292	0.001	0.471	2.125
	정보보안	-0.021	0.009	-0.023	-2.316	0.021	0.466	2.144

2) 군 그룹 도시안전 위험요인 규명

2개 군의 1,683개 데이터로 군 그룹의 도시안전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단계적 선택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 10개의 변수 중 6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6변 모형의 R2 값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변 모형에서 도출된 회귀모형이 전체의 76.0%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 상관계수는 더반-왓슨(Durbin-Watson) 값을 사용하는데 본 회귀모형에서는 1.731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 상관계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모형의 결과요약(군 그룹)

Model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6	0.872	0.760	0.759	0.388

a Predictors: (Constant), 국가안보, 건축물, 환경오염,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b Dependent Variable : 사회안전인식

6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회귀식에 의하여 설명되는 분산은 798.847이며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252.491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을 보면 0.000으로 이는 적합한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분산분석(ANOVA) 결과 요약(군 그룹)

Model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Sig)
6	Regression	798.847	6	133.141	883.774	0.000
	Residual	252.491	1,676	0.151		
	Total	1,051.338	1,682			

군 그룹에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 모형을 도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227~0.758로 0.1보다 컸으며, VIF값이 1.319~4.40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뢰수준 9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국가안보 0.329($t_{값}=17.445$, Sig=0.000), 건축물 0.195($t_{값}=7.685$, Sig=0.000), 환경오염 0.124($t_{값}=9.250$, Sig=0.000), 자연재해 0.127($t_{값}=6.438$, Sig=0.000), 화재 0.095($t_{값}=4.896$, Sig=0.000), 전염병 0.022($t_{값}=2.116$, Sig=0.034) 순으로 도출되었다.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확인해보면 국가안보의 표준화 계수가 0.384로 나타나 군 그룹에서 사회안전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계수 결과값(군 그룹)

Model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Sig)	공차한계	VIF
	B	표준오차					
6	(상수)	0.433	0.052	-	8.285	0.000	-
	국가안보	0.329	0.019	0.384	17.445	0.000	0.295
	건축물	0.195	0.025	0.193	7.685	0.000	0.227
	환경오염	0.124	0.013	0.157	9.250	0.000	0.495
	자연재해	0.127	0.020	0.142	6.438	0.000	0.293
	화재	0.095	0.019	0.095	4.896	0.000	0.379
	전염병	0.022	0.010	0.029	2.116	0.034	0.758

2. 분석결과 비교분석

다중회귀모형의 결과인 표준화계수를 토대로 구·군별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국가안보(구:0.154, 군:0.384), 자연재해(구:0.151, 군:0.142), 건축물(구:0.144, 군:0.193), 화재(구:0.068, 군:0.095), 환경오염(구:0.032, 군:0.157)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국가안보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으며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안보적으로 불안함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2021년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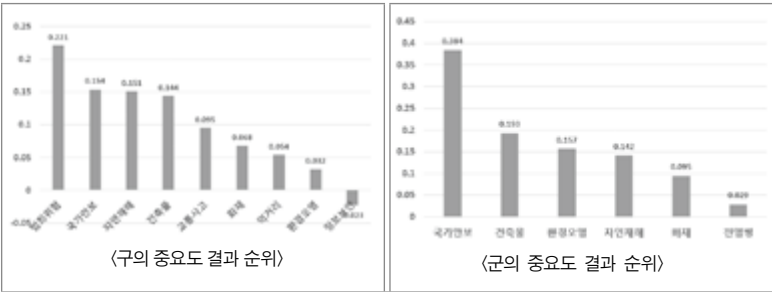
은 1월 22일 서해상으로 미사일 2발 발사를 시작으로 총 8번의 미사일을 서해 및 동해상에 발사하였다(나무위키,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이는 연평도(인천 옹진군) 포격 등의 경험을 겪은 인천시민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구의 경우 범죄위험이 표준화 계수 0.221로 가장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천광역시에는 항구 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 문화, 인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외국인의 유출입 비중이 높은 곳이다. 또한, 2021년 인천의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66,364명으로 2016년 59,103명보다 약 11% 증가하였다(제62회 인천통계연보 2022). 이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새로운 범죄의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안전의 경우, 표준화 계수 구:0.144, 군:0.193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인천광역시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풍수해로 인한 건물, 공공시설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붕괴되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이슈도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군의 경우, 환경오염이 표준화계수 0.157로 3순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인천광역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021년 4,169개로 2016년 3,861개에 비해 약 7.4%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이슈 중 하나인 공단들에 대한 대기질 오염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두 그룹 간 비교분석결과

구			군		
순위	도시안전 위험요인	표준화계수	순위	도시안전 위험요인	표준화계수
1	범죄위험	0.221	1	국가안보	0.384
2	국가안보	0.154	2	건축물	0.193
3	자연재해	0.151	3	환경오염	0.157
4	건축물	0.144	4	자연재해	0.142

구			군		
순위	도시안전 위험요인	표준화계수	순위	도시안전 위험요인	표준화계수
5	교통사고	0.095	5	화재	0.095
6	화재	0.068	6	전염병	0.029
7	먹거리	0.054			
8	환경오염	0.032			
9	정보보안	-0.023			



[그림 3] 다중회귀분석 표준화 계수값을 통한 중요도 순위

V. 결론

1.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 중 사회안전인식, 도시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정도를 중심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8개 구와 2개 군의 데이터를 활용해 각각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 그룹에서는 다중회귀모형에서 도시안전 위험요인 10개 변수 중 전염병을 제외한 9개의 변수가 선택되었으며,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았

을 때 범죄위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그룹에서는 6개의 변수가 선택되었으며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큰 변수는 국가안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그룹과 군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수는 국가안보, 건축물, 자연재해, 화재, 환경오염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구·군 모두 사회안전인식에 국가안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은 북한과 근접해 있는 곳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과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시민들이 북한의 도발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물리적인 대피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건축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물 위험에 대한 안전 정도도 구·군 모두 사회안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분석 결과, 풍수해 등으로 인한 건물, 공공시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점검과 결과 홍보 등을 통한 시민들의 건축물 안전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공사 중인 아파트 붕괴 이슈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향하는 건축물에 살거나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정책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 결과를 통하여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 정도도 구·군 모두 사회안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풍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건축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

한 예방방안으로 감재(減災)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감재란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재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 홍수,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 또는 법제화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건설 시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군의 사회안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으로서는 구는 범죄위험, 군은 환경오염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의 경우, 군에 비해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범죄예방을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방범 순찰운영지역 확대, 안전쉼터 등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 주민들의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자율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군의 경우,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대상의 대부분도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인천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많은 공단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체감하고 살아왔던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대기질 측정 및 결과 알림 등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군별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안전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군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군 지역별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자료의 설문 항목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설문 항목의 경우 큰 대분류 항목에 대한 안전 정도만을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행자, 고령자, 차량 등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구·군별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와 군을 구분하여 그룹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구나 군별로도 각 지역의 특성은 존재한다. 인구 특성,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지역 특성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상에서 기초통계 분석 결과 구의 경우 2.85점으로 안전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3.58점으로 안전 정도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컸음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만을 토대로 검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영향력이 미미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창현·문순영. 2017. 「국내 안전도시 연구동향과 쟁점:2006~2016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1): 119-156.
- 김명수. 2017.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630): 1-6.
- 데이터솔루션 컨설팅팀. 2008. 『SPSS Statistics 평균비교와 데이터 축소』. (주)데이터솔루션.
- 박영희·민소영. 2015.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과공동체의식에 따른 여성의 안전의식」, 한국사회정책 22(2): 283-311.
- 배대식. 2009. 「캠퍼스 생활안전 위험요인과 인간안보 선진화 방안」,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 임동진. 201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89-114.
- 인천광역시. 2022. 「2022 인천의 사회지표」.
- _____. 2022. 「제62회 인천통계연보」.
- 안형근·전기범·김은성. 2009.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모델개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6.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출판사.
- 이재송·김유경·최열. 2017.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 인식 분석」, 국토계획 52(3): 215-235.
- 신상영·조권중·이석민·이운상. 2015.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서울연구원.
- 지우석·강은영·강상준·구연숙·조성한. 2013. 「도권 주민 안전사회 인식조사 및 개선방향」, 정책연구 2013(S): 1-132.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 2023.4.30.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doi:10.23333/P.204010.001)」.
- 황선아·김종구·강윤원. 2015.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생활안전지표 개발」,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165-166.
-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2024.4.18. (<https://namu.wiki/w/2021-2022년%20북한%20미사일%20도발>)

국 문 초 록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윤상훈(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시설연구사)

윤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으로는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안전, 화재, 환경오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요인 외에 구·군에 대해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으로는 구는 범죄위험, 군은 전염병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인식개선 노력, 건축물 관련 지속적인 점검 노력, 자연재해 예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군별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의 안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안전인식, 도시안전 위험요인, 국가안보, 건축물 안전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Urban Safety Risk Factors by District and County that Affect Social Safety

Awareness:

Based on the 2021 Incheon Metropolitan City Social Survey Data

Yoon, Sang-hoon (Research Officer, Disaster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Yoon, Hee-won (Senior Researcher, Disaster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ompare urban safety risk factors that affect social safety awareness by focusing on the social survey dat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202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revealed that urban safety risk factors common to districts and counties include national security, building safety, natural disasters, fir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part from these common factors, crime risk in the district and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unty were found to be urban safety risk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ncheon Metropolitan City needs to make efforts to improve it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undertake continuous inspections of buildings, and prepar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urban safety by district and county to create a safe city. The study can also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the future.

Key words: social safety awareness, urban risk factors, national security,
building safety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만족과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박승화**·정철***

박
승
화
·
정
철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SNS 관광정보 특성
2. 관광동기
3. 관광만족
4. SNS 공유의도
5. SNS 재이용의도
6. MZ세대
7.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설정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IV.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신뢰도 및 타당도
3. 상관관계 분석
4. 가설 검정

V. 논의 및 결론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SNS 관광정보 특성이 MZ세대 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교신저자(E-mail: Jeong72@hanyang.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183>

I. 서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최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사용자 상호 간의 연결과 교류로 현대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제품을 구매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관광분야에서도 SNS가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관광정보가 관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SNS 관광정보는 SNS를 활용하여 관광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고 이를 다시 SNS에 공유하는 것이다(한수정 2011).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연령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이하나·양승목 2017). 이는 단순한 정보공유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형성의 중심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김정민·임정하 2023). 더불어, 일반인도 정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이 SNS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관광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관광기업과 지자체가 SNS를 주요 홍보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며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곽대영 2021; Ryu and Choi 20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상공간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 없이 익숙하며, 자신의 실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 등을 SNS에 활발히 공유하고 있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 집단이 주목받고 있다.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비교하여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정보를 자주 공유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 관련하여 MZ세대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홍소희·김민 2021).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SNS 이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SNS 이용률이

16.8%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이용률이 55.1%로 크게 증가하였다(고세란 2021).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이용률이 83.5%로 가장 높았고, 5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는 2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김윤화 2022).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친교와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2021)의 조사에서는 정보나 뉴스를 얻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탐색이 주된 이용 이유로 나타났다.

기존의 SNS 관광정보에 대한 연구는 SNS 관광정보 특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관광정보를 공유하려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동기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곽대영 2017; 서민정 외 2019; 이채완 외 2020). 이러한 SNS 관광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와 다른 기성세대를 비교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SNS를 통해 획득하는 관광정보에 대해서 MZ세대의 행동 특성이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NS 관광정보에 대해서 MZ세대와 다른 기성세대의 반응과 행동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연구 모형에서 인구통계적 차이에서 오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MZ세대가 SNS 관광정보를 통해서 느끼는 관광동기, 관광만족, 관광정보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광정보의 SNS를 통한 확산이 관광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MZ세대와 다른 세대 집단 간 행동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행동 의도

를 전체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업계의 SNS 활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SNS 관광정보 특성

SNS는 사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Social’은 공동체, ‘Network’는 관계망, ‘Service’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의미한다(최선미 2009). 대표적인 SNS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있다. SNS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인 즉, 개인이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인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림, 영상, 문서, 음원 등의 형태로 구성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yd and Ellison 2007).

관광정보는 관광자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심을 끌어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Fesenmaier 199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관광자들은 어디서나 관광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여행 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임현숙·심우석 2019). 즉, SNS를 통하여 관광상품을 예약하고 더 나아가 단순한 관광정보 검색이 아닌 관광동기까지 유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Chung and Koo 2015; Wang et al. 2012; Xiang and Gretzel 2010).

웹사이트 기반 관광정보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서재연 외 2023), 웹사이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SNS 관광정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들도 있다(김태경 외 2013; 오성수·김성후 2012; 표원정·임관혁 2012; Liu and Crowe-Delaney 2020). SNS 관광정보 특성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SNS 관광정보가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SNS 관광정보의 특성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2. 관광동기

관광동기란 관광자가 특정한 여행지를 선택하고 여행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나타내며, 이는 관광자의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관광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이것은 심리적 지적 동기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관광동기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 활동을 촉발하는 동기로 정의되며, 이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김익중·박승영 2012; 임현숙·심우석 2019; 조명환 외 2000; 이해정 외 2022).

선행연구들은 관광동기를 인간의 욕구를 통해 설명하며,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관광 동기로 작용하고 관광지 선택과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관광동기를 푸쉬(push) 및 풀(pull)의 개념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푸쉬(push) 요소는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을 뜻하며, 이 요인들이 잠재 관광 여행자들을 동기부여 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성 정도 즉, 풀(pull)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Hudman & Hawkins 1989). 따라서 관광동기는 관광지 선택과 만족에 이르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

들은 관광동기를 탈출 욕구와 사회적 관계 촉진과 관련짓고, 이러한 동기가 관광 활동에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선셋별 2017; 정효숙 2017; 조명환 2002; Cromton 1979; Iso-Ahola and Allen 1982; Wang and Fesenmaier 2004).

3. 관광만족

일반적으로 만족은 소비자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의 기대와 실제로 구매한 후의 소비 경험 일치에 따라서 결정되며, 관광만족의 평가과정을 비교해 보면 기대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된다(최용훈 2008). 만족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사전에 고객이 기대한 성과와 실제로 고객이 제공받은 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고, Oliver(1997)는 서비스 및 제품이 소비자의 충족 상태를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관광만족은 여행을 통해 관광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져 어떤 관광 환경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관광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관광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정용복 2020). 또한, 관광만족은 관광자가 사전 기대와 실제 관광 경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신민정 외 2018).

이전 연구들에서는 관광만족을 관광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관광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권봉현·임현숙 2015; 김성태·이종환 2012; 박은경 2013; 염수길·이재섭 2015; 윤수지·김정희

2019; 이재곤·김은혜 2014; Lounsbury and Polik 1992; Van Raaij and Francken 1984). 이 연구에서는 SNS 관광 정보를 활용한 관광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제공하며, 이것이 후속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SNS 공유의도

SNS는 오프라인 친분 여부를 불문하고, 온라인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산하며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들은 SNS를 활용하여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거나 불편한 경험을 나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의 글이나 사진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며 도움을 받기도 한다(박탄우·이경렬 2014). 이러한 SNS를 통한 공유와 홍보 효과는 다른 SNS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체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간접 마케팅 수단이다.

SNS를 통해 관광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의도를 공유의도라고 한다(곽대영 2017). SNS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협력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Cooke and Buckley 2008). 관광자의 관광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공유의도와 관련이 있으며(김민형·황영현 2017), SNS 공유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대석·서영욱 2020; 박현지 외 2014; 서민정 외 2019; 이채완 외 2020; 한주형·김진옥 2021; Kwok and Gao 2005; Park et al. 2016). 최근 연구에서는 대체로 SNS 정보의 특성, 정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SNS를 통한 공유의도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SNS 재이용의도

의도란 개인의 어떠한 행위를 계획되거나 예견된 미래의 행동 대한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확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이용 의도란 어떠한 서비스 및 상품의 구매 이전 경험에 대한 후기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았다(전재홍·김건휘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재이용의도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전표훈 2019). 재이용의도는 그동안 단순히 고객만족을 높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이윤 창출과 전략적 목적의 수단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어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Fornell 1992)

관광에서의 재이용의도는 관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매 및 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끌어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권봉헌·임현숙 2015). 기업 마케팅 관점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며, 서비스 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여겨진다(이민정·김정만 2013).

김대석 외(2022)는 관광 SNS의 효익과 관광몰입이 행동의도(재이용의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고 입증하였다. 또한, 관광몰입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SNS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고객만족, 관광몰입 등이 재이용의도, 재구매의도,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선·이종호 2012; 서우중 외 2010; 이옥주 2018; Boulding and Zenithaml 1993; Taylor and Baker 1994).

6. MZ세대

세대(generation)란 특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과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주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특정 세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동일 연령대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의미에 따라 세대를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와 같이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2000년대 첫 세대로서 인류의 새로운 천년기를 시작할 때 태어난 세대를 나타낸다. Z세대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종종 함께 언급되며, 이 두 세대를 통칭하여 MZ세대라고도 부르는 경향이 있다(김난도 외 2019). MZ세대는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보에 민감하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진희·김남조 2019; 홍소희·김민 2021).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거침이 없으며, 자기중심적인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Z세대는 새로운 구매 고객으로 유인하려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선덕 2021; 김성은 외 2021; 남미우·박현정 2021; 오영환·정양현 2022; Culiberg and Mihelic 2016). 그러나 관광분야에서 MZ세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이들 세대의 SNS를 통한 관광 정보 활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7.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설정

이 연구에서는 SNS 관광정보 특성,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SNS 재이용의도 그리고 MZ세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관광정보는 관광자가 관광 행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관광자는 다양한 경로와 관광 홍보자료를 통해 획득하는 관광정보를 바탕으로 관광지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된다. SNS 관광정보는 관광지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표원정 2011). 관광정보는 SNS를 통해 얻고 공유하는 관광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한수정 2011). SNS를 통한 관광정보에 대해서 다수의 선행연구가 그 특성에 대한 요인을 설정하고 있다. 양성수(2008)는 온라인 구전 정보의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특성은 정보의 동의성, 생생함, 유용성, 커뮤니티 상호작용성을 제시하였고 기술적 특성은 디자인, 사용의 편리성, 지각된 평판을 제시하였다. 한수정(2011)은 SNS 관광정보 요소로 관광정보 신뢰성, 관광정보의 품질, 사용자 중심 시스템 서비스로 측정하였다. 오성수·김성후(2012)는 인지적 특성으로 정보동의성, 정보의 생생함, 커뮤니티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특성으로는 사용의 편리성과 지각된 평판을 제시하였다.

박현지 외(2014)는 관광 SNS의 정보품질이 관광자 및 관광정보 상호작용과 관광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광 SNS 정보 품질을 관광정보 간결성, 관광정보 신뢰성, 관광정보 유희성, 관광정보 적시성으로 보았다. 권봉현·임현숙(2015)은 SNS 관광정보 특성을 관광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NS 관광정보에 대하여 다양성, 상호작용성, 신속성, 접근편리성, 정확성, 최신성으로 보았다. 박영식(2017)은 관광지 선호도와 관광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SNS 관광정보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신뢰성, 유용성, 적시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임현숙·심우석(2019)은 SNS 관광정보 특성인 관광동기,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NS 관광정보의 특성을 상호작용성, 신속성, 접근편리성, 정확성으로 보았다. 서민정 외(2019)은 음식관광에 대한 SNS 정보특성에 대해서 SNS 정보특성을 상호작용성, 신뢰성, 정확성, 최신성으로 보았다. 김대석·서영욱(2020)은 관광 SNS 정보 특성이 사회적 자본과 몰입을 통하여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NS 정보 특성을 정보 신뢰성과 정보 품질을 요인으로 보았다. 서민정·임은순(2021)은 SNS 음식 관광정보 특성에 대해서 상호작용성, 정보신뢰성, 정보유용성, 정보유희성이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친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관광정보와 관련된 독립변수로 정보의 신속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상호작용성을 설정하였다.

관광정보의 신속성은 온라인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신속하고 최근의 내용을 담은 관광정보일수록 이용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쉽게 수용하게 된다(김기영 외 2016). 관광정보의 신속성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의미로 관광정보의 적시성 또는 최신성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관광정보의 신뢰성은 제공되는 관광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박현지 외 2014). 관광정보의 정확성은 관광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태경 외 2013). 관광정보의 상호작용성은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의 공유 및 정보 교류가 가능한 정도를 나타낸다(서민정 외 20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SNS 관광정보가 이를 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관광지로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여행을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SNS 관광정보의 특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SNS 관광정보의 신속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SNS 관광정보의 신뢰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SNS 관광정보의 정확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SNS 관광정보의 상호작용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관광동기는 관광자가 관광지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는 관광자의 심리를 의미한다(노은정 외 2018). 다수의 선행연구가 관광동기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보았고,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익중·박승영 2012; 임현숙·심우석 2019; 조명환 외 2000). 특히, 배길관광처럼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은 감성적인 속성이 강한 관광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신진옥 외 2017).

관광만족은 관광을 통해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도는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김송이·정철 2017). 만족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지불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인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Anderson 1994). 권봉헌·임현숙(2015)은 관광만족은 관광자가 관광을 하면서 관광의 시작 단계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느끼고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동기와 관광만족은 SNS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관광정보를 공유하는 의도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SNS 공유의도는 관광 경험과 지식을 SNS에 올리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의미한다(곽대영 2017). 관광자의 관광 평가가 공유의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SNS 유대성과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민형·황영현 2017). 관광자가 SNS를 통해 자신의 관광 지식을 공유하면 관광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된다(김태경 외 2013).

SNS 재이용의도는 이전에 매체를 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매체를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박은주·조정섭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관광동기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등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자의 관광동기는 관광자의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관광자의 관광동기는 관광자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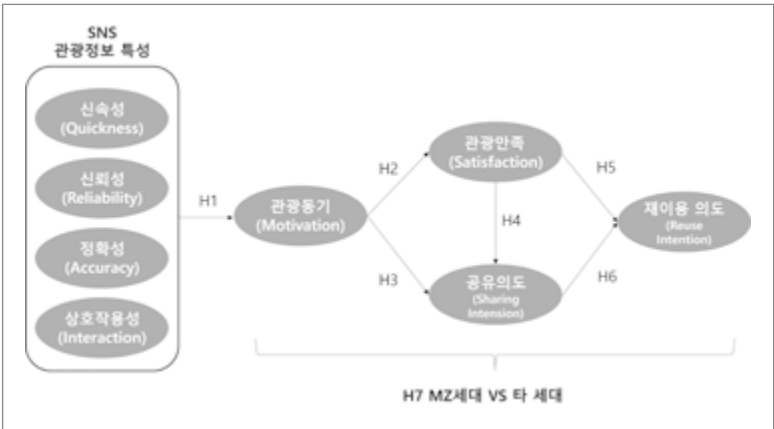
H4. 관광자의 관광만족도는 관광자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관광자의 관광만족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관광자의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SNS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가설에 따른 변수 간의 영향의 정도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SNS를 통한 관광정보 공유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반응 및 행동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MZ세대와 전체 집단 간의 관광의도,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의 유의미한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SNS 관광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동기, 관광만족도와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SNS 관광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비확률표본추출의 목적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는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표본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근 SNS를 통해 관광정보를 접촉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포함하여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달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구글 또는 네이버의 설문 양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총 900를 배

포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60부의 설문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2부를 제외한 74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서 SNS 관광정보 특성에 대한 하위 4개 항목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척도를 구성하였다. SNS 관광정보 특성에 대한 하위 4개의 항목인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신속성은 선행연구(권봉현·임현숙 2015; 임현숙·심우석 2019; Huda 2022)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고, 신뢰성은 선행연구(박영식 2017; 박현지 외 2014; 서민정 외 2019; Ada et al. 2010; Bart et al. 2005)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정확성 역시 선행연구(권봉현·임현숙 2015; 임현숙·심우석 2019; 서민정 외 2019; Ada et al. 2010)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고, 상호작용성은 선행연구(박영식 2017; 오성수·김성후 2012; 표원정·임관혁 2012; Grossbart et al. 1978)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관광동기는 선행연구(김익중·박승영 2012; 노은정 외 2018; 임현숙·심우석 2019; Iso-Ahola 1982; Wang and Fesenmaier 2004)를 기반으로 5개의 항목을 구성하였고, 관광만족도는 선행연구(권

봉헌·임현숙 2015; 박영식 2017; Anderson et al. 1994)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SNS 공유의도 역시 선행연구(김대석·서영옥 2020; 박현지 외 2014; 서민정 외 2019; Chen and Hung 2010; Kwok and Gao 2005; Lin and Featherman 2019; Kourouthanassis et al. 2017)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SNS 재이용의도는 선행연구(김국선·이종호 2012; 김대석 외 2022; 민소라 2020; 장연아·김한나 2019; Boulding and Zeithaml 1993)를 기반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정의	출처
SNS 관광 정보 특 성	신속성 (quickness)	온라인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신속하고 최근의 정보를 의미	권봉헌·임현숙(2015) 김기영 외(2016) 임현숙·심우석(2019) Huda(2022)
	신뢰성 (reliability)	제공되는 관광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	박영식(2017), 박현지 외(2014) 서민정 외(2019) Ada et al.(2010), Bart et al.(2005)
	정확성 (accuracy)	관광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	권봉헌·임현숙(2015) 서민정 외(2019), 임현숙·심우석 (2019) Ada et al.(2010)
	상호작용성 (interaction)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의 공유 및 정보 교류가 가능한 정도	박영식(2017), 서민정 외(2019) 오성수·김성후(2012) 임현숙·심우석(2019) 표원정·임관혁(2012) Grossbart et al.(1978)
관광동기 (tourism motivation)		관광자가 관광지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는 관광객의 심리를 의미	김익중·박승영(2012) 노은정 외(2018), 임현숙·심우석 (2019) Iso-Ahola(1982) Wang and Fesenmaier(2004)
관광만족도 (tourism satisfaction)		관광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하는 정도	권봉헌·임현숙(2015) 박영식(2017) Anderson et al.(1994)

변수명	정의	출처
SNS 공유의도 (SNS sharing intention)	관광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교환하려는 의도나 계획	김대석·서영욱(2020) 박현지 외(2014), 서민정 외(2019) Chen and Hung(2010) Kwok and Gao(2005) Lin and Featherman(2019) Kourouthanassis et al.(2017)
SNS 재이용의도 (SNS reuse intention)	이전에 매체를 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매체를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	김국선·이종호(2012) 김대석 외(2022), 민소라(2020) 박은주·조경섭(2020) 장연아·김한나(2019) Boulding and Zeithaml(1993)
MZ세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김정연(2021), 이종숙(2020) 한주형·김진옥(2021) Culiberg and Mihelić(2016)

IV.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20대 30대가 MZ세대로 각각 231명,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전체 집단인 40대가 165명, 50대 이상이 90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별은 남성과 여성 비율이 4:6 정도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연 소득은 2천~4천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천 미만인 29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용 서비스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153명, 네이버 123명, 카카오톡 106명, 유튜브 144명, 기타가 222명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으로는 코로나19가 210명, 정보가 184명, 여행계획이 157명, 흥미 84명, 기타가 113명으로 나타

났다. 이용빈도는 매일 사용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표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나이	20대 미만	49	6.6	이용 목적	코로나19	210	28.1
	20대	231	30.9		정보	184	24.6
	30대	213	28.5		여행계획	157	21
	40대	165	22.1		흥미	84	11.2
	50대 이상	90	12		기타	113	15.1
성별	남성	302	40.4	이용 빈도	매일	448	59.9
	여성	446	59.6		주4~5회	101	13.5
서비스 종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53	20.5		주1~2회	94	12.6
	네이버	123	16.4		기타	105	14.0
	카카오톡	106	14.2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247	33
	유튜브	144	19.3		1~3시간	185	24.8
	기타	222	29.7		3~4시간	150	20.1
전체		748	100	전체	4시간 이상	166	22.2
					전체	748	100

2. 신뢰도 및 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하여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과정에 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리는 일부 문항이 있어서 정확성 중 1문항, 상호작용성 중 1문항, 관광동기 중 1문항, 관광만족 중 1문항, SNS 공유의도 중 1문항을 제외하였다. 각 문항들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적절했으며, 각 요인들의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AVE의 제공근 값은 모두 기준치($CR = .70$, $AVE = .50$)보다 높게 나

타났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측정한 결과에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며,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적합도 지표인 χ^2 , RMR, NFI, CFI, RMSEA 등을 통하여 이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χ^2 (카이-제곱)은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통계량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샘플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 모형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597.029로 나타났다. df(자유도)는 모형의 복잡성을 나타내며 여기서 자유도 값은 296으로, 이는 모형에서 추정된 매개 변수의 수와 관련이 있다.

p-value(유의확률)는 카이-제곱 검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확률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이 0.05 이하인 경우, 모형이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고 판단하며 여기서 $p=0.000$ 으로 나타나므로 모형이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모형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와 모형이 잘 부합함을 나타내므로, CFI 값은 0.972로 모형이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GFI(Goodness-of-Fit Index)는 모형의 부합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데이터와 잘 부합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GFI 값은 0.945로 모형의 데이터 부합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는 모델의 자유도를 고려하여 GFI를 보정한 값이다. AGFI 값은 0.930으로 모형의 데이터 부합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집중타당성			
			λ	크론바 하알파	CR	AVE
SNS 관 광 정 보 특 성	신 속 성	나는 새로운 SNS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0.746	0.856	0.894	0.679
		내가 활용한 SNS 관광정보는 이용자들의 정보 교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	0.791			
		내가 접하는 SNS 관광정보는 최근에 게시된 관광정보이다.	0.798			
		내가 접할 수 있는 SNS 관광정보는 신속하게 널리 확산된 정보이다.	0.761			
	신 뢰 성	내가 접하는 SNS 관광정보는 믿을 만하다.	0.789	0.890	0.879	0.645
		내가 활용한 SNS의 관광정보는 확실하다.	0.844			
		내가 접하는 SNS의 관광정보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0.830			
		내가 활용한 SNS의 관광정보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0.811			
	정 확 성	내가 접하는 SNS 관광정보는 대체로 정확하다.	0.781	0.795	0.853	0.660
		내가 활용한 SNS 관광정보는 오류가 없는 편이다.	0.767			
		내가 접하는 SNS 관광정보는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다.	0.712			
	상 호 작 용 성	내가 이용한 SNS에서 관광정보 관련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756	0.809	0.859	0.670
		내가 접하는 SNS 관광정보는 다른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0.797			
		내가 이용한 SNS 관광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0.747			
관광 동기		나는 SNS 관광정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0.738	0.779	0.832	0.623
		나는 SNS 관광정보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을 위한 활동을 한다.	0.731			
		나는 SNS 관광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노력한다.	0.736			
관광 만족도		나는 SNS 관광정보를 이용한 관광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0.731	0.793	0.842	0.640
		나는 SNS 관광정보에 제시된 관광지에 만족한다.	0.799			
		나는 SNS 관광정보를 이용한 관광 경험에 만족한다.	0.719			

구성개념	측정항목	집중타당성			
		λ	크론바 하알파	CR	AVE
SNS 공유 의도	나는 SNS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관광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0.862	0.920	0.883	0.716
	내가 사용한 SNS 관광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SNS로 공유할 것이다.	0.902			
	내가 SNS 관광정보를 활용하여 경험한 관광 활동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것이다.	0.907			
SNS 재이용 의도	나는 SNS 관광정보를 다시 이용할 것이다.	0.746	0.811	0.881	0.650
	나는 SNS 관광정보를 다시 이용할 확률이 높다.	0.742			
	나는 SNS 관광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	0.722			
	나는 가까운 미래에 관광 활동을 한다면 SNS 관광정보를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	0.672			

$\chi^2=597.029$ $df=296$ $p=.000$ $CFI=.972$ $GFI=.945$ $AGFI=.930$ $NFI=.946$ $RMR=.024$ $RMSEA=.037$
 주) λ =Factor loading,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NFI(Normed Fit Index)는 모형의 부합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데이터와 잘 부합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NFI 값은 0.946으로 모형이 데이터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모형의 잔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데이터와 잘 일치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RMR 값은 0.024로 모형의 잔차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데이터와 잘 부합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RMSEA 값은 0.037로 모형이 데이터와 양호하게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상기 결과를 요약하면, 여러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면 모델이 어느 정도 양호한 적합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서 이 연구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이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그 외 각 변수 간에 모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 0.80 이상 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0.8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AVE의 제곱근 값을 계산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루트 AVE는 해당 변수의 판별타당성을 나타낸다. 대각선 상의 값은 AVE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이 값은 해당 변수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충분히 구별될 수 있고 모형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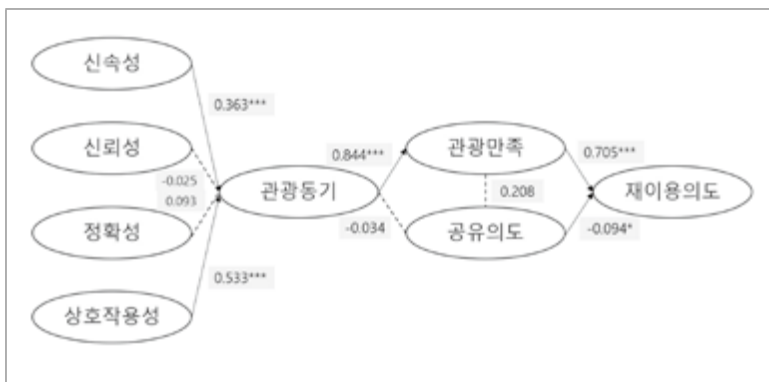
[표 4] 판별타당성 결과

구성개념		SNS 관광정보 특성				관광 동기	관광 만족	SNS 공유 의도	SNS 재이용 의도	AVE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상호 작용성					
SNS 관광 정보 특성	신속성	1.000								.824
	신뢰성	.287**	1.000							.803
	정확성	.496**	.266**	1.000						.813
	상호 작용성	.518**	.285**	.643**	1.000					.818
관광동기		.500**	.190**	.496**	.605**	1.000				.789
관광만족		.612**	.264**	.463**	.502**	.500**	1.000			.800
SNS 공유의도		.073*	-.138**	.073*	.118**	.115**	.148**	1.000		.806
SNS 재이용의도		.450**	.316**	.655**	.573**	.503**	.465**	0.033	1.000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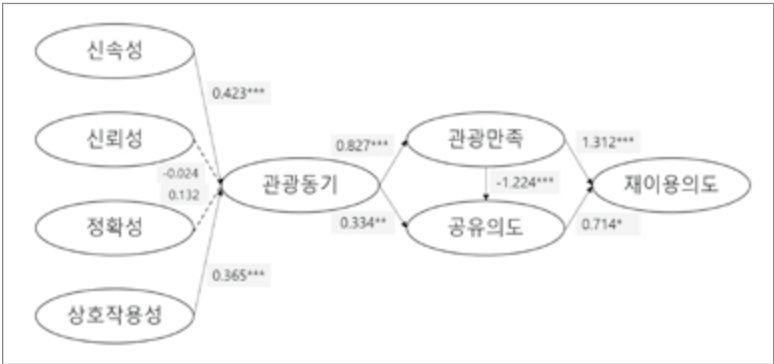
4. 가설 검증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이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잠재적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SNS 관광정보 특성과 관광동기의 관계에서 SNS 관광정보 특성 중 신속성($\beta=.363$, $p<.01$)과 상호작용성($\beta=.533$, $p<.01$)은 관광동기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SNS 관광정보가 관광동기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관광동기와 관광만족의 관계에서 관광동기는 관광만족($\beta=.844$, $p<.01$)과 양의 관계가 있었다. 즉, 관광동기가 높을수록 관광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광만족과 SNS 재이용의도의 관계($\beta=.705$, $p<.01$)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관광을 통해 높은 만족을 느끼면, 그 경험을 SNS를 통해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beta=-.094$, $p<.05$)의 관계에서는 부의 관계가 있었다. 즉, 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하려는 의도가 높을수록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



[그림 2] 전체 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그림 3] MZ세대 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하면 가설 H1-1, H1-4, H2, H5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H1-2, H1-3, H3, H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6는 연구 가설과는 다르게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이 기각되었다.

MZ세대 집단을 따로 분리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3]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SNS 관광정보 특성 중 신속성($\beta = .423, p < .001$)과 상호작용성($\beta = .365, p < .001$)은 관광동기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즉, SNS를 통한 관광정보가 관광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관광동기는 관광만족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beta = .827, p < .001$), SNS 공유의도 사이에도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beta = .334, p < .01$). 이는 관광동기가 관광에 대한 만족도와 SNS를 통한 자신의 관광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관광만족이 SNS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가설과 다르게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관광만족은 SNS 재이용의도와 정(+)의 관계($\beta = 1.312, p < .001$)가 나타났으며, 만족한 관광 경험을 향후 SNS를 통해 다시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beta = .714, p < .05$)가 나타났는데, 이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높을수록 SNS를 통한 재이용

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MZ세대에 해당되는 응답자를 포커싱해서 분석하였을 때, 전체 집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의 영향에 대한 결과값이다.

2) 다중집단분석

MZ세대 집단과 기타 집단(전체 집단에서 MZ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간 경로계수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 (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MZ세대 집단과 기타 집단의 측정도구에 대한 차이 검정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Delta\chi^2$ 은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차이를 보여주며, Sig.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유무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Delta\chi^2(38)=25.19$ 에 해당하는 유의확률은 0.945로 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 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설문지와 같은 측정 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집단과 기타 집단은 조사 설문지의 문항에 대해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측정 동일성에 대한 모델 적합도 검정

모델	χ^2	df	IFI	TLI	CFI	RMSER	$\Delta\chi^2$	Sig
비제약모델	1699.44	888	.962	.955	.962	.025		
제약모델	1724.63	926	.963	.957	.963	.024	$\Delta\chi^2(38)=25.19$	.945 (유의하지 않음)

[표 6] 다중집단분석

가설경로		기타 집단			MZ세대 집단			t값
		β	C.R.	p	β	C.R.	p	
관광 동기	<- 신속성	0.29	5.489	***	0.423	5.485	***	2.517*
	<- 신뢰성	0.031	0.870	0.384	-0.024	-0.441	0.659	-0.748
	<- 정확성	0.178	2.063	0.039	0.132	1.385	0.166	-0.066
	<- 상호작용성	0.575	5.923	***	0.365	3.367	***	-1.36
관광만족	<- 관광동기	0.755	10.804	***	0.827	10.123	***	-1.43
공유의도	<- 관광동기	0.219	2.840	0.005	0.334	2.898	0.004	0.518
	<- 관광만족	0.825	8.615	***	-1.224	-8.427	***	-11.6624***
재이용 의도	<- 관광만족	-3.379	-2.278	0.023	1.312	3.897	***	3.131**
	<- 공유의도	4.015	2.748	0.006	0.714	2.149	0.032	-2.235*

[표 6]의 다중집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만족과 SNS 공유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기타 집단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MZ세대 집단에서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관광만족과 SNS 재이용의도 간 관계에서는 기타 집단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MZ세대 집단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7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MZ세대와 전체 집단 간의 관계에서 계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MZ세대와 다른 세대 집단 간에 일부 변수 및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 가설 검정 결과

이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SNS 관광정보의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H1)은 일부 채택되었다. 신

속성과 상호작용성은 관광동기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SNS 관광정보의 빠른 정보 획득과 상호작용 요소가 관광동기를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신뢰성과 정확성은 관광동기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H2)에 따라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동기가 관광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NS를 통한 관광 정보가 관광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다른 가설들은 특히, 관광자의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각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자의 관광동기와 SNS 행동 간의 관계가 다양하며, 일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가설(H7)에 따르면 SNS 관광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 동기, 관광만족도,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에는 세대별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기타 집단과 MZ세대 집단 간에는 몇몇 경로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세대별로 SNS 관광정보와 관광행동 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관광 분야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세대 간의 행동 및 요구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7] 연구 가설의 검정 결과

가설	가설문항	가설검정
H1	SNS 관광정보의 특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지지
H1-1	SNS 관광정보의 신속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1-2	SNS 관광정보의 신뢰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실패
H1-3	SNS 관광정보의 정확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실패
H1-4	SNS 관광정보의 상호작용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2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자의 관광동기는 관광자의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3	관광자의 관광동기는 관광자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실패
H4	관광자의 관광만족도는 관광자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실패
H5	관광자의 관광만족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
H6	관광자의 SNS를 통한 SNS 공유의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실패
H7	SNS 관광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동기, 관광만족도와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 지지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SNS 관광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SNS 관광정보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SNS 관광정보의 특성을 범주화하고 SNS 관광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측정변수들을 SNS 관광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된 설문은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빈도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SNS 관광정보의 특성의

하위요인인 신뢰성과 정확성은 관광자의 관광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 관광정보 특성의 신속성과 상호작용성은 관광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성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결과는 SNS 관광정보가 최신이나 최근의 내용을 담은 정보일수록 그리고 SNS 상에서 참여자 간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용자가 관광지로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여행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관광자의 정보탐색을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SNS 관광정보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표원정·임관혁(2012)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동기가 관광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동기가 높을수록 관광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광만족은 SNS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관광만족도가 높을수록 SNS 재이용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이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재이용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Taylor & Baker(1994)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동기가 SNS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만족이 SNS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 공유의도가 SNS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 모형과 다르게 부(-)의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민정 외(2019)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관광만족이 SNS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프라이버시 우려, 정보 과잉 등의 이유로 공유 의향

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시간이 과거에 비해
서 최근 SNS 사용자의 행태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SNS 관광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동기, 관광만족도, SNS 공유
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가 세대별 차이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MZ세대에서는 전체집단과 다르게 관광동기가 SNS 공유의도
에 미치는 정(+)의 영향과 SNS 공유의도가 SNS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공유의도가 SNS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집단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
만, MZ세대 집단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SNS 재이용의도
에 대해서 전체집단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MZ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 연구 모형에서 분석하였
을 때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검정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SNS 관광정보의 특성인 신뢰성과 정확성은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고, SNS 관광정보의 특성인 신속성과 상호작용성이 관광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관광정보를 이
용하는 이용자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
은 정보들은 이용자의 관광동기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으므로, 신뢰
성과 정확성 보다 신속성과 상호작용성이 관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신 정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SNS에
서 제공되는 관광정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
서 관광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관광 행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실시간 피드백 기능, 라이브 Q&A 세션,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MZ세대와

같은 신기술에 익숙한 연령대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객의 관광동기는 관광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NS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동기가 높을수록 관광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관광자들이 SNS 관광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광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정보 제공자는 사용자의 동기를 높이는 방향의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에 주목해야 하며, 접근성과 이용 역시 편리해야 한다. 특히, 스토리텔링, 몰입감 있는 비주얼 콘텐츠, 대화형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SNS 재이용의도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로서 관광정보 제공자들에게 SNS 플랫폼에서의 정보 품질 및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용자를 유지하고, 재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리뷰, 피드백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MZ세대와 그 외 세대 간의 반응 차이는 특히,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세대의 특성과 선호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MZ세대는 상호활동적이고 혁신적인 요소에 더 끌릴 수 있으므로 가상현실(VR) 투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들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SNS를 활용한 관광정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

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관광동기와 관광만족이 SNS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SNS 공유의도에 대한 가설 3과 가설 4는 모두 지지 실패 되어 시사할 부분은 없으나 SNS 공유의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만의 여행 경험 공유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사진 공유하기’ 등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새로운 관광지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SNS를 통한 관광정보의 공유의도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및 사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탐색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 이 연구의 응답자 다수가 20~3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하거나 연령층을 고르게 표본을 수집한다면, 전 연령대에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SNS 공유의도와 SNS 재이용의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후속 연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세란. 2021. 「202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곽대영. 2017. 「SNS 관광정보의 신뢰 및 만족수준에 따른 정보공유 및 사용의도 차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2(1): 155-162.
- _____. 2021. 「SNS 관광정보 품질이 도시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정보 실재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0: 113-146.
- 권봉현·임현숙. 2015.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 만족도 및 신뢰도 그리고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4(4): 215-233.
- 김경민·임정하. 2023. 「연령대별 SNS 이용행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6): 349-362.
- 김국선·이종호. 2012. 「소셜커머스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311-321.
- 김기영·김민경·심재익. 2016. 「외식정보를 제공하는 SNS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0(12): 179-193.
- 김난도·전미영·최지혜·이향은·이준영·김서영·이수진·서유현·권정윤. 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북코스모스.
- 김대석·방원기·서병욱. 2022. 「관광 SNS효익이 관광몰입을 통해 행동의도(재이용의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SNS 유형의 조절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3): 29-40.
- 김대석·서영욱. 2020. 「관광 SNS 정보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몰입을 통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7): 27-41.
- 김민형·황영현. 2017. 「관광경험의 구전동기에 관한 연구」. MICE관광연구 17(4): 7-21.
- 김선덕. 2021. 「MZ세대 주거 트렌드 변화」. 충북 이슈 및 트렌드 45호.
- 김성은·박정은·윤진영. 2021. 「학업 중단 이후 취직을 결정한 MZ세대 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방대 중도 탈락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9(3): 25-49.
- 김성태·이종환. 2012. 「지역축제의 체험적 요소, 관광목적지 이미지, 관광만족, 그리고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내국인관광객과 방한중국관광객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6(4): 5-25.
- 김송이·정철. 2017. 「대학축제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

- 치는 영향: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9(4): 103-123.
- 김윤희. 2022. 「세대별 SNS 이용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익중·박승영. 2012. 「관광동기와 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6(4): 75-92.
- 김정연. 2021. 「레스토랑 간편식(RMR)의 선택속성이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MZ세대와 X세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8): 97-110.
- 김태경·정삼권·이기중. 2013. 「SNS 정보품질이 관광정보 및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5(4): 1-23.
- 남미우·박현정. 2021. 「MZ세대 남성 소비자들의 e스포츠를 융합한 화장품 마케팅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5): 95-108.
- 노은정·노정희·허우요우. 2018. 「중국 중장년층의 한국 관광동기에 따른 관광지 선택 속성과 라이프 스타일 차이 분석」. 관광경영연구 22(4): 475-499.
- 민소라. 2020. 「모바일 SNS를 통해 지각된 관광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21(3): 83-104.
- 박영식. 2017.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지 선호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7(6): 199-215.
- 박은경. 2013. 「문화유산관광에서의 진정성이 관광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화회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주·조경섭. 2020. 「1인 미디어 채널의 이용 동기가 채널 재이용 의도,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먹방 채널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13(4): 75-99.
- 박탄우·이경렬. 2014. 「SNS 상의 온라인 구전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통합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100): 172-224.
- 박현지·박중환·윤정현·김영하. 2014. 「관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관광객-관광정보 상호작용이 관광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26(2): 259-277.
- 서민정·박자연·임은순. 2019. 「음식관광에 대한 SNS 정보특성이 정보만족,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9(4): 141-158.
- 서민정·임은순. 2021. 「방한중국관광객이 인식한 SNS 음식관광정보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메이븐 성향의 조절효

- 과」. 호텔관광연구 23(2): 1-15.
- 서우중·원옥연·홍진원. 2010. 「SNS 웹 사이트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혁신연구 26(1): 99-132.
- 서재연·김유민·김송이·정철. 2023. 「관광정보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과 스토리텔링이 이용자의 태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관광정보 웹사이트 마핑위 사용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5(2): 189-210.
- 선셋별. 2017. 「생태관광동기, 매력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민정·원문가·송학준. 2018. 「동기, 선택속성, 관광만족, 재방문의도, 생활만족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공정여행 여행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7(6): 1-16.
- 신진옥·김송이·오은지·정철. 2017. 「뱃길 관광객의 방문동기, 감정적 반응, 만족도,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6): 351-372.
- 양성수. 2008. 「온라인 구전 관광정보의 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수길·이재섭. 2015. 「시티투어 구성요인과 도시이미지, 관광만족 관계 연구: 서울시티투어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7(2): 171-186.
- 오성수·김성후. 2012. 「관광지선택에 SNS관광정보 특성이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5): 3255-3271.
- 오영환·정양현. 2022.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한 MZ세대 여성기술창업의 동기, 목적, 과정 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37(1): 1-30.
- 윤수지·김정희. 2019. 「관광도시브랜드 자산이 관광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9(4): 7-17.
- 이민정·김정만. 2013.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2(2): 187-207.
- 이옥주. 2018. 「O2O플랫폼 품질이 개인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관계품질과 재사용의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근·김은혜. 2014. 「외래 관광자의 관광경험이 관광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북촌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9(1): 179-199.
- 이채완·오정민·이상호. 2020. 「사람들은 왜 관광경험을 SNS에 전시하는가?」. 관

- 광연구저널 34(3): 21-32.
- 이종숙. 2020. 「MZ세대의 YouTube 기반 뷰티건강정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준비수용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대한미용학회지 16(4): 367-375.
- 이진희·김남조. 2019.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탐색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용모형의 적용」. 관광연구논총 31(4): 139-164.
- 이하나·양승목. 2017. 「SNS 이용자 집단 구분과 예측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1(2): 5-40.
- 이혜정·이다희·정철. 2022. 「북촌관광객의 동기, 이미지 및 지각된 가치: 한국과 해외 관광객 비교」. 관광연구논총 34(4): 123-143.
- 임현숙·심우석. 2019. 「SNS 관광정보특성의 관광동기, 관광지선택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23(2): 677-700.
- 장연아·김한나. 2019. 「SNS특성과 의복쇼핑특성이 인스타그램 마켓에서의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629-642.
- 전재홍·김진휘. 2017.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이 축제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7 춘천국제마임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6): 317-327.
- 정용복. 2020.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의 선택속성이 관광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도연구 53: 159-185.
- 정효숙. 2017. 「다문화가족의 관광동기와 관광지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베트남·중국·필리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환·주현식·한성호. 2000. 「관광욕구가 관광동기 및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2(2): 31-35.
- 조명환. 2002. 「방한 일본인 여성관광객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4): 49-66.
- 최선미. 2009. 「SNS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싸이월드 미니홈피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훈. 2008.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여행학연구 29: 107-126.
- 표원정. 2011. 「SNS 관광정보가 지역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표원정·임관혁. 2012. 「SNS 관광정보의 특성이 관광객 정보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51: 285-308.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 한주형·김진옥. 2021. 「소셜미디어 여행정보 공유 동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MZ세대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레저연구 33(7): 181-200.
- 한수정. 2011. 「SNS 관광정보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호텔관광연구 13(4): 273-285.
- 홍소희·김민. 2021. 「MZ세대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24(1): 113-120.

- Ada, S., Rao, H. R., and Sharman, R. 2010.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 (SNS) use at the campus emergencie." Paper presented at the ICIS.
- Anderson, E. W., Fornell, C. and Lehmann, D. R.. 1994. "Customer satisfaction, market share and profitability: Findings from Sweden." *Journal of Marketing* 58(3): 53-66.
- Bart, Y., Shankar, V., Sultan, F. and Urban, G. L. 2005. "Are the Drivers and Role of Online Trust the Same for All Web Sites and Consumers? A Large-Scale Exploratory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rketing* 69(4): 133-152.
- Boulding and Zeithaml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 Boyd, D. M. and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Chen, C. and Hung, S. 2010. "To give or to receive? Factors influencing members' knowledge sharing and community promotion in professional virtual communities." *Information & Management* 47: 226-236.
- Chung, N., and Koo, C. 2015. "The use of social media in travel information search."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2): 215-229.
- Cooke, M. and Buckley, N. 2008. "Web 2.0, social networks and the future of market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0(2): 267-292.
- Crompton, John L. 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Culiberg, B., and Mihelič, K. K. 2016. "Three ethical frames of reference: insights into Millennials' ethical judgements and intentions in the workplace."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25(1): 94-111.
- Fesenmaier, D. R. 1994. "Traveler use of visitor information center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in Illino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1): 44-50.
- Fornell, C. 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1): 6-21.
- Grossbart, S. L., Mittelstend, R. A. and Murdock, G. W. 1978. "Nearest Neighbor Analysis: Inferring Behavioral Processes from Spatial Patter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5: 114-118.
- Huda, M. 2022. "Towards an adaptive ethics on social networking sites (SNS): A critical reflection."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20(2): 273-290.
- Hudman, L. E., and Hawkins, D. E. 1989. *Tourism in contemporary society: an introductory text*. Prentice Hall.
- Iso-Ahola, S. E. and Allen, J. R. 1982. "The Dynamics of Leisure Motivation: The Effects of Outcome on Leisure Need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3(2): 141-149.
- Kourouthanassis, P. E., Mikalef, P., Pappas I. O. and Kostagiolas, P. 2017. "Explaining travellers online information satisfaction: A complexity theory approach on information needs, barriers, sourc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 Management* 54: 814-824.
- Kwok, S. H. and Gao, S. 2005. "Attitude towards knowledge sharing behavior."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46(2): 45-51.
- Lin, X., Sarker, S. and Featherman, M. 2019. "Users' Psychological Perceptions of Information Sharing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A Comprehensiv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23(4): 453-491.
- Lounsbury, J. W. and Polik, J. R. 1992. "Leisure needs and vacation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14(2): 105-119.
- Liu, T., Xia, J. and Crowe-Delaney, L. 2020. "Tourism Information Diffusion through SNSs: A Theoretical Investigation." *Sustainability*

12: 1731.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Oliver, R. L. 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ustomer*. New York: MacGraw-Hill.
- Park, H., Seo, S. and Kandampully, J. 2016. "Why post on social networking sites (SNS)? Examining motives for visiting and sharing pilgrimage experiences on SN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2(4): 307-319.
- Ryu, D. H., and Choi, T. W. 2015. "Real-time Complaint Handling Service interworking with SN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10(12): 1381-1388.
- Taylor, S. A., and Baker, T. L. 1994.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ormation of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70(2): 163-178.
- Van Raaij, W. F. and Francken, D. A. 1984. "Vacation decisions, activities, and satisfac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1): 101-112.
- Wang, Z., Tchernev, J. M., and Solloway, T. 2012. "A dynamic longitudinal examination of social media use, needs, and gratific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829-1839.
- Xiang, Z., and Gretzel, U. 2010. "Role of social media in online travel information search," *Tourism management* 31(2): 179-188.

국 문 초 록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자의 관광만족과 SNS 활용에 미치는 영향

박승화(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정철(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MZ세대는 디지털 마케터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회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의 생각과 활동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SNS 관광정보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관광자의 SNS 관광정보,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로서 SNS 관광정보는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상호작용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SNS 관광정보 특성이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SNS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MZ세대와 그 외 나머지 집단의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그룹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SNS 관광정보의 특성에 따른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그리고 SNS 재이용의도가 부분적으로 세대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직 관광학에서 새로운 소비자인 MZ세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MZ세대의 SNS 관광정보 활용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SNS 관광정보 특성, 관광동기, 관광만족, SNS 공유의도,
SNS 재이용의도, MZ세대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SNS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ourists' Satisfaction and SNS Utilization

Park, Seung-Hwa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Jeong, Chul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The MZ generation, a group that actively shares and forms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social group that digital marketers need to focus on. Therefore, understanding how the MZ generation—who enjoy sharing their daily thoughts and activities with others—responds and behaves toward SNS tourism information compared with older generations is important.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SNS tourism information, tourism motivation, tourist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use and share on SNS. Theoretically, SNS tourism information is categorized into timeliness, reliability, accuracy, and interactivity. Subsequently,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he MZ generation and other groups on the impact of SNS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ourism motivation, tourist satisfaction, intention to reuse SNS, and sharing information on S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partially influenced tourism motivation, tourist satisfaction, intention to share on SNS, and intention to reuse SNS, with differences across gener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how the MZ generation uses SNS tourism information, as this new consumer demographic has not previously been thoroughly examined in tourism studies.

Key words: SNS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tourism motivation, tourism satisfaction, SNS sharing intention, SNS reuse intention, MZ generation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민
기
채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에 대한 법적 논의
2. 주거복지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2. 분석틀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2. 규범적 실효성 체계

V. 결론 및 논의

I. 서론

헌법에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헌법의 주거생활 보장 취지를 반영하여, 장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해외파견 연구교수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E-mail: minkichae@ut.ac.kr, Tel: 043-849-1765)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225>

투고(접수)일 2023.10.25. 심사(수정)일 2023.11.27. 게재확정일 2024.6.17.

관과 단체장의 책무로서 주거정책 수립·시행,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환경의 정비, 주택의 건설·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주거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의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시민의 주거생활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나래 2018; 박정연 2016). 특히 대규모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고독사, 음주, 소란, 활력 부재, 지역사회와 임대주택단지와의 관계 단절, 거주민의 고립·낙인·배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박윤영 2018, 65). 또한 협소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주거지 내로 생활범위가 한정된 노인과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려 있다(이흥렬 2019, 107). 전통적 주거위기가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위기가구도 출현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신규 주거위기가구로서 전세 피해가구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주거는 여전히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문제의 사회적 해답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찾고자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조례는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어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나아가 조례의 조항들이 법률의 법문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례의 순기능은 「주거기본법」에도 적용된 바 있다. 「주거기본법」보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2년 6개월이나 먼저 제정되었고, 당시 서울시 조례의 목적, 주거약자 등의 정의, 단체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 주거실태조사의 내용, 주거복지사업의 목록, 위원회 구성과 기능,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 등의 조항들은 「주거기본법」 제정 시, 법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례의 순기능은 법률 제정의 추동을 넘어,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

상에서도 확인된다(윤찬영 1997, 123). 따라서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욕구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과 1인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이주민 등 신규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상위법인 「주거복지법」 개정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로부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한편 「주거복지법」 제정 이후 관련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주거권의 법적 의미(김서기 2018; 박정연 2016, 이은기 2016), 최저주거기준 보장(임성훈 2021; 최승원·김태영 2016), 1~2인 가구의 주거보장(이홍렬 2021), 주거약자에 대한 법적 규정 명확화(양승광 2022),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양성 촉진(권오정 2015; 신원우 2017; 오정석 2015),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주거복지센터 기능 확대(이종권·김정미 2016; 이지숙 2015) 등이었다. 「주거복지법」 이외에 소수의 주거기본 ‘조례’에 주목한 연구들(박윤영 2016; 이지숙 2016)도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조례 연구는 소수일 뿐이며, 조례에 초점을 둔 연구라 할지라도 최근의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차례 개정된 현행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거기본 조례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에 대한 법적 논의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③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헌법상 사회권 중 하나인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25개조로 구성되었다. 당시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목적 규정은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어, 법률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7번의 개정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거실태조사 실시 신설(2015년), 학생 등 청년층 추가를 통한 주거실태조사 대상 세분화(2017년 4월), 벌칙 강화(2017년 11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확대 변경, 단독세대주 가구 추가를 통한 주거실태조사 대상 세분화(2018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주거지원 지원대상아동 추가, 지원대상아동 추가를 통한 주거실태조사 대상 세분화(2019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회의 요건(의결정족수, 찬성 요건 등) 강화(2021년)였다. 그간 법률 개정 역사의 핵심적 특징은,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법률에 추가시키기 위한 개정 방향이었다.

한편 「주거기본법」에서는 다양한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들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포함, 「국토기본법」에 적합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준수해야 할 법률로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등교육법」, 「아동복지법」이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를 고려한 법률이기에, 그 구현을 위해 다양한 법률들과 관련되어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법률들을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임대주택법」과 「주거급여법」,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인 민간자격과 관련된 「자격기본법」 등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주거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2015년 6월 제정된 「주거기본법」보다 이른 시기인, 2012년 12월 31일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서는 그 제정 이유로서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동 조례의 제정 당시 목적은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현재는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목적 변경은 상위법의 정신을 반영하고자 하는

규범적 타당성 확보 및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으로부터 보편적 사회서비스 성격으로의 개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법률보다 먼저 제정된 선행조례 또는 자주조례가 아니며, 위임조례로서 탄생 배경을 갖는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보면,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이 3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2. 주거복지 선행연구 검토

1) 주거기본법 관련 선행연구

먼저 주거기본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법률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방식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 중 구성요소로서 제시될 권리성에 해당하는 주거권, 적용대상, 급여종류, 전달체계, 전문인력, 권리구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은기(2016, 267)는 ‘주거권’이 헌법상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③항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사회적 기본권이며,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거관련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도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권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문준혁(2016, 31)은 법률에 주거권이 명시되었으나, 그 하위 권리 규정들인 신청권 또는 수급권, 구제절차 부재는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하였다. 박정연(2016, 127)은 주거권에는 신체 보호 공간으로서 갖는 건강보장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안전성 또는 편의성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건강보장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도주거기준 및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건강보장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서기(2018, 53)는 주거권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는 용어에서의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UN의 '사회권 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적절성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주거권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윤영(2018, 65)은 물리적 주거를 넘어 사회적 관계, 즉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을 고려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였다.

적용대상과 급여종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다. 최승원·김태영(2016)은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가 지속되는 핵심적 이유로 주거비 지불능력의 부족을 꼽으며, 주거 빈곤의 해결방법인 주거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유사 법률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주거비 지원제도 통합, 중복제도 정비, 신청의 유도, 주거지원대상자 발굴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양승광(2022, 53)의 연구에서는 2012년 「주거약자법」에 등장한 '주거약자의 개념'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제안하면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초기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주거약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임성훈(2021, 175)은 저소득층의 실효성 높은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위해, 미국과 영국의 주거적합성 기준 마련 및 임대인에 대한 기준 준수 부과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법률에서의 저소득층의 주거적합성 보장 입법과 함께 및 그 강제를 위한 행정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흥렬(2021, 113)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소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1-2인 가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법제에서의

입법론 도출을 제안하였다.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지숙(2015, 293)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은 법률보다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민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바람직한 공공기관의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종권·김정미(2016, 33)는 주거복지 공공 전달체계 핵심적 개편 방향은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협업적 운영'이며,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간 협력,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구축,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전문인력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오정석(2015, 20-21)은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사의 역할로 주거문제 상담자, 주거서비스의 연계자, 주거복지교육 담당자, 주거급여 및 주거실태조사의 조사자·평가자·기획자,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권오정(2015, 7-8)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 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과제로 주거복지사의 양성 및 배치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 주거복지 교육기관 및 교과과정 개발, 주거복지사 업무의 배치 확대 및 신규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신원우(2017, 85)는 주거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그에 기초한 주거복지사의 직무 적합적 교육과정 설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최승원·김태영(2016)은 권리구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생존권 위기 해소, 신속성 확보, 권리구제 기산점, 제기기간, 처리기간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주거기본 조례 관련 선행연구

주거기본조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수뿐이다. 해당 조례들을 살펴보면, 이지숙(2016, 77)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및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하였고, 부채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다. 박윤영(2016, 162-164)은 권리성, 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라는 분석기준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주거복지조례를 비교한 결과, 조례들은 추상성이 강하여 실효성이 약한 권리성, 주거약자에 초점을 둔 대상자 범위, 급여와 재원에서의 임의적 성격, 전문인력 자격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최근의 주거기본법 및 주거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조례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셋째,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에 제공하는 법률 및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은, 주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권리성의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에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의 확대, 공공과 민간의 주체 간의 전달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주거복지사의 양성·교육·채용 및 전문인력의 기능과 권한, 권리구제의 보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이슈들이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이 현행 법률 및 조례에서 충분히 개정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인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거기본법」 및 광역자치단체 주거 기본 조례이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 키워드로 '주거기본'을 입력할 때 자치법규로서 총 177개 조례와 규칙이 검색되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17개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 1 참조).

제정일이 가장 빠른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이며, 제정일이 가장 늦은 조례는 2021년 7월 8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이다. 울산, 충북, 전북, 경북 조례의 경우,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전북의 조례는 '주택'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이라는 명칭은 없으나, 조례의 법문 상 내용적으로는 타 지자체의 주거기본 조례와 거의 유사하다.

[표 1] 주거기본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제정일	최근 개정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2012.12.31.	2023.10.04.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6.03.30.	2023.08.16.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7.03.02.	2023.10.04.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8.11.05.	2022.02.24.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7.11.15.	2023.09.25.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6.08.12.	2022.12.30.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21.07.08.	개정 부재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2019.07.19.	2021.07.1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016.07.19.	2023.05.17.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2020.12.31.	2023.09.27.

조례명	제정일	최근 개정일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	2021.05.18.	개정 부재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2018.07.30.	2023.08.10.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2016.12.30.	개정 부재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2019.10.17.	2023.03.30.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2020.11.05.	개정 부재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2021.07.08.	2022.08.04.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2016.09.28.	2021.12.31.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거기본'을 검색하여 재구성(2023.10.20 검색)

2. 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윤찬영(1998, 209-236)의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기준'을 수정한 민기채(2023, 32-34)의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 및 측정'을 본 분석대상인 주거기본 조례의 법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분석틀은 분석요소별 측정 방법과 해석방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칫 내용분석이 가질 수 있는 장황함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민기채(2023)의 분석틀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는 첫째, 수평적 분석 이외에 수직적 분석을 추가한 것이다. 수직적 분석이라 함은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을 준거틀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내용적 체계화 수준이 가장 높은 조례가 규범적 준거틀로 가정되었으며,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조례 비교(수평적 분석)만 수행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을 이상적인 사회복지법률의 준거틀로 설정하고, 그 준거틀에 기초하여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을 비교(수직적 분석)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

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주민의 권리성과 인력의 전문성을 추가하였다. 주거기본 조례에서는 주거권과 주거전문인력에 관한 규정들이 있기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셋째, 기존 연구의 분석대상은 농민수당으로서 현금성 급여라는 점에서 급여 구성요소를 다양한 구성내용에 기초하여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급여 구성요소에서, 현금 급여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사용의 무제약성, 급여형태의 자율성, 급여주기의 단기성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급여 중심의 주거기본 조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여종류의 포괄성만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설명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규범적 타당성 체계로서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주민의 권리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적 실효성 체계로서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권리구제의 보장성, 벌칙의 엄격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이다(민기채 2023, 3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방법이다. 법률 및 조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거기본법」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거기본 조례를 비교한 것이다. 내용분석 시, 측정방법과 해석 방식을 정하였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측정방법은 항목 수와 규정 수준을 활용하였고, 항목 수가 많을수록, 항목별 규정수준이 강행규정일수록 구성내용의 성질이 강하다고 해석하였다(민기채 2023, 32).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들 중 50% 이상의 조항을 50% 이상의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다면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낮다고 해석하였다.

[표 2]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 및 측정

구분	구성 요소	구성내용	측정방법	해석
규범적 타당성	권리성	조례의 목적지향성	-	질적 해석
		주민의 권리성	-	질적 해석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책무성 강화
	적용 대상	적용대상의 보편성	① 항목 수	항목 수가 많을수록, 보편성 강화
	급여	급여종류의 포괄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포괄성 강화
	재정 부담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재정책임성 강화
규범적 실효성	전달 체계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책임성 및 통합성 강화
	인력	인력의 전문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전문성 강화
	권리 구제	권리구제의 보장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보장성 강화
	벌칙	벌칙의 엄격성	① 항목 수 ② 항목별 규정수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강행규정일수록, 전문성 강화

주 : 항목별 규정수준은 강행규정 > 노력의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의 순이며, 강행규정은 '~해야 한다', 노력의무규정은 '노력해야 한다',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를 의미함

자료: 윤찬영(1998)의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화: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기준' 분석틀을 수정한 민기채(2023)의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 및 측정'을 일부 수정하여 저자 작성

IV. 연구결과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1) 조례의 목적지향성

광역시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타당성 체계 중 권리성 구성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조례의 목적지향성을 규정하는 ‘목적’ 조항을 살펴본다.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목적에서는,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및 시행령) 위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시행에 필요한 사항, 주거복지, 주거권 보장(광주, 경기)/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경북), 시도민의 주거안정, 시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위법을 살펴보자.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서 정한 목적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주거권 보장’,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 이념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반영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목적지향성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법률의 목적에서 명시된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서 상당히 반영

하고 있다. 이를테면, 법률에서의 목적 조문을 조례에서의 목적 조문에 반영하고 있는데,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은 ‘시도민의 주거안정’으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은 ‘시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주거복지 등’은 ‘주거복지’로, ‘주거권 보장’은 ‘주거권 보장/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으로 반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일부(부산, 광주, 경기, 경북)일 뿐이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③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의 명칭이 주거‘기본’법으로써,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공공부조 성격이 아님을 고려할 때, 경북 조례에서 주거약자에 한정된 주거권 보장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조례의 목적지향성이 가장 강한 주거기본 조례는 부산, 광주, 경기 조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전북 조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거기본 조례의 목적지향성

구분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	①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②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사항/ ③시행에 필요한 사항	주거 복지	①주거권 보장/②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	시도민의 주거안정	시도민의 주거수준 향상
법률	●	①	●	●	●	●
서울	●	②	×	×	●	●
부산	●	③	●	×	●	●
대구	●	②	×	×	●	●
인천	●	②	×	×	●	●
광주	●	①	×	①	●	●
대전	●	②	×	×	●	●
울산	●	③	×	×	●	●
세종	●	②	×	×	●	●

구분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	①주거정책의 수립 및 주 인에 관한 사항/②주거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 ③시행에 필요한 사항	주거 복지	①주거권 보 장/②주거약 자의 주거권 보장	시도민의 주거안정	시도민의 주거수준 향상
경기	●	②	✕	②	●	●
강원	●	②	✕	✕	●	●
충북	●	②	✕	✕	●	●
충남	●	②	✕	✕	●	●
전북	●	③	✕	✕	✕	✕
전남	●	②	✕	✕	●	●
경북	●	①	✕	③	●	●
경남	●	②	✕	✕	●	●
제주	●	③	✕	✕	●	●

주 : ● 규정 존재, ✕ 규정 부재

(2) 주민의 권리성

두 번째로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조항을 살펴본다.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주거권 조항에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주거권의 내용은 일부 자치단체(서울, 대구, 세종, 경기)에서만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성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민의 권리가 강한 주거기본 조례는 서울, 대구, 세종, 경기이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그것이 약하다.

[표 4] 주거기본 조례의 주민의 권리성

구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법률	●	●	●
서울	●	●	●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주 : ● 규정 존재, ✕ 규정 부재

(3)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세 번째로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을 규정하는 ‘단체장의 책무’ 조항을 살펴본다.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단체장의 책무 조항에서는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제3조 명시, 주거정책(사업) 수립·시행(추진·지원), 예산 확보,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및 연도별) 수립·시행/시행, 주거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 동조 제1호에서는 주거비 지원, 제2호에서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주거지원필요계층),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구비를 모두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단체장의 예산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주거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거정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주거종합계획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다. 예컨대, 단체장의 책무 조항조차 부재한 경우(부산, 울산, 세종, 제주), 단체장의 책무 조항이 있지만,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제3조 명시가 없어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있고, 단체장의 책무 조항의 강제력을 노력의무규정으로 격하시킨 경우(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남)도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에 관하여는 강행규정이 전무하다. 주거종합계획에 있어서도, 법률에서는 수립·시행을 명시하나, 수립만을 명시하는 경우(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제주)도 있다. 계획만 있고 시행이라는 용어가 부재한 경우, 그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실질적으로 부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다른 구성요소의 내용분석에서도 견지하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이 가장 강한 주거기본 조례는 서울과 광주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와 강원 조례가 있으며, 인천 조례, 경북 조례, 충남 조례, 경기, 충북, 경남 조례, 전남 조례, 대전과 전북 조례의 순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부산, 울산, 세종, 제주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표 5] 주거기본 조례의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구분	「주거기본법」 제3조 명시	주거정책(사업) 수립·시행 (추진·지원)	예산 확보	주거종합계획 ①수립·시행/②수립	주거실태조사
법률	●	●	●	①	△
서울	●	●	▲	①	△
부산	✕	✕	✕	②	✕
대구	●	●	▲	②	△
인천	●	▲	▲	②	✕
광주	●	●	▲	①	△
대전	✕	▲	✕	①	✕
울산	✕	✕	✕	②	✕
세종	✕	✕	✕	②	✕
경기	✕	▲	▲	①	△
강원	●	●	▲	②	△
충북	✕	▲	▲	①	△
충남	✕	●	▲	②	△
전북	✕	▲	✕	①	✕
전남	✕	●	▲	①	✕
경북	✕	●	▲	①	△
경남	✕	▲	▲	①	△
제주	✕	✕	✕	②	✕

주 : ●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단, 상위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제3조 명시 여부의 경우, ● 규정 존재, ✕ 규정 부재

2) 적용대상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타당성 체계 중 적용대상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거기본법」에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주거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살펴본다. 적용대상과 관련된 조항은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 사업’, ‘정의’이다.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은 시도민, 「주

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공공임대주택 입주인, 주거급여 대상,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 긴급구조 가구,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족, 이주자, 1인 가구, 전세피해자이다.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와 제2조(주거권)에서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의미를 갖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2호에서는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원필요계층은 곧 주거정책의 우선 또는 특별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②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해당 법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2조(정의)의 1에 따르면,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제②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해당 법률인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의 3에 따르면,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서 확인되듯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다. 이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구조 가구,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

족, 다자녀 가족, 이주자, 1인 가구, 전세피해자를 주거지원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규정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시도민과 주거약자인 장애인·고령자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일부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 조례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명시는 5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만 확인된다. 그 외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대상들도 조례 개정 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가장 강한 조례¹⁾는 제주 조례이며, 다음으로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조례,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조례, 서울과 전남 조례, 부산 조례, 대구, 대전, 충남 조례의 순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인천과 전북 조례라고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의 규정을 조례에서 구현하는가라는 규범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강원 조례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가가 아닌 얼마나 많은 대상을 포괄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제주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는 법률이 조례에 관한 항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적용대상의 보편성의 강화와 약함을 어떤 기준으로 서술할 것인가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주거급여법」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등'이라는 용어를 법률명 또는 조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에는 열거되지 못한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후자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즉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등'의 의미를 무시한 법률과의 일치성보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한 대상자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관점은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제도에 포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6] 주거기본 조례의 적용대상의 보편성

구분	시도민	「주거 기본법」 제3조 제2호	주거지원필요계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급여 대상	최저주거 기준 미만 가구	긴급 구조 가구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족	이주자	1인 가구	전세 피해자	
			주거약자		저소득층	신혼 부부	청년층												지원 대상 아동
			장애인	고령자															
법률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주 1 : ● 규정 존재, × 규정 부재

주 2 : '주거종합계획'이 아닌 주거복지사업이나 주거복지센터 사업에서 실제 규정한 지원대상으로 한정함. 다만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만이 아닌 '수립·시행'으로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3) 급여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타당성 체계 중 급여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종류의 포괄성을 규정하는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사업', '주거종합계획'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급여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 자금 설치·운용·지원,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주민교육, 주거복지서비스, 전세피해지원, 자활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서는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강행규정, 제13조(주거정책 자금)의 설치·운용·지원에 대한 임의규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에서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강행규정, 제15조(주거비 보조)에 대한 강행규정, 제16조(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강행규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 대한 임의규정, 제22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에 대한 임의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추가적으로 사례관리, 주민교육, 주거복지서비스, 전세피해지원, 자활을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반영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 있어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는 강행규정인 지원사업이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고 있어서,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상의 지원사업들을 일부 명시하지 않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인천의 임대주택공급,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제주의 주거정책 자금의 설치·운용·지원, 경기와 전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인천, 광

[표 7] 주거기본 조례의 급여종류의 포괄성

구분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자금 설치·운영·지원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사레 관리	주민 교육	주거복지 서비스	전세 피해지원	지활
서울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주 1 : ●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주 2 : 주거종합계획이 아닌 주거복지사업이나 주거복지센터 사업에서 규정한 급여종류로 한정함. 다만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만이 아닌 '수립·시행'으로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의 정보제공 및 상담 조항)를 규범적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급여종류의 포괄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서울 조례이며, 다음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조례, 전북 조례,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조례, 충남과 제주 조례의 순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인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4) 재정부담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타당성 체계 중 재정부담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규정하는 ‘단체장의 책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용 수립·시행/시행,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 주거복지센터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보면,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1호에서는 주거비 지원 및 제2호에서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취약계층)에 대한 강행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①항 제5호에서는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강행규정,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전달체계 운영 예산 구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와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않다. 이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단체장의 재정 책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측면

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용 수립·시행 또는 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다. 법률에서는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및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을 모두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강행규정이 전무하였다. 또한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조례는 4개뿐이었다.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광주와 경북 조례이며, 다음으로 경기 조례, 서울, 전남, 경남 조례,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조례, 충북 조례, 세종 조례, 대전과 전북 조례의 순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부산, 울산, 제주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표 8] 주거기본 조례의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구분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용 ①수립·시행/②수립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	주거복지센터 예산 지원
법률	●	①	●	●	✕
서울	▲	①	△	✕	△
부산	✕	②	△	✕	✕
대구	▲	②	△	✕	△
인천	▲	②	△	✕	△
광주	▲	①	△	●	△
대전	✕	①	✕	✕	△
울산	✕	②	△	✕	✕
세종	✕	②	△	✕	△
경기	▲	①	✕	●	△
강원	▲	②	△	✕	△
충북	▲	①	✕	●	✕
충남	▲	②	△	✕	△
전북	✕	①	✕	✕	△
전남	▲	①	△	✕	△

구분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용 ①수립·시행/②수립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	주거복지센터 예산 지원
경북	▲	①	△	●	△
경남	▲	①	△	✕	△
제주	✕	②	△	✕	✕

주 : ●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2. 규범적 실효성 체계

1) 전달체계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실효성 체계 중 전달체계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규정하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수립·시행/시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연계, 주거복지센터 설치·위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주거위기가구 발굴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을 보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①항 제9호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강행규정,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①항에서의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제③항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연계에 대한 노력의무규정,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서의 설치·위탁에 대한 임의규정,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에서의 구축·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주거복지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서울 조례 제20조 제①항의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에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서울 조례에서는 독특하게 '전·월세종합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2023년 10월 4일 신설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주거위기가구 발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위기가구 발굴 조항을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또는 업무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서울),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부산, 광주), 대상자 발굴(경북)로 명시되어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측면에서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수립·시행 또는 시행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법률에서 별도의 조(條)로서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의무규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연계, 임의규정으로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을 분석대상 조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광주와 경북 조례이며, 다음으로 경기 조례, 서울 조례, 충북 조례, 부산 조례의 순이다. 그 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표 9] 주거기본 조례의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구분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수립·시행/②수립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민간 부문과의 연계	주거 복지센터 설치·위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주거위기 가구 발굴
법률	①	●	▲	△	●	△	✖
서울	①	✖	✖	△	●	△	△
부산	②	✖	✖	△	●	✖	△

구분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수립·시행/②수립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민간 부문과의 연계	주거 복지센터 설치·위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주거위기 가구 발굴
대구	②	×	×	△	●	×	×
인천	②	×	×	△	●	×	×
광주	①	●	▲	△	●	×	△
대전	①	×	×	△	●	×	×
울산	②	×	×	△	●	×	×
세종	②	×	×	△	●	×	×
경기	①	●	▲	△	●	×	×
강원	②	×	×	△	●	×	×
충북	①	●	▲	×	●	×	×
충남	②	×	×	△	●	×	×
전북	①	×	×	△	●	×	×
전남	①	×	×	△	●	×	×
경북	①	●	▲	△	●	×	△
경남	①	×	×	△	●	×	×
제주	②	×	×	△	●	×	×

주 : ●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2) 인력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실효성 체계 중 인력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우선 채용·배치, 전달체계 인력 배치, 전문성 보유 기관 위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촉,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립·시행/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을 보면,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①항 제1호에서의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의무규정, 제2호에서의 주거

복지 전문인력 교육지원에 대한 임의규정, 제3호에서의 주거복지 전문인력 우선 채용·배치에 대한 임의규정,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②항에서의 전달체계 인력 배치에 대한 강행규정,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②항에서의 전문성 보유기관 위탁에 대한 임의규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위촉에 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또는 수립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확인되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기본 조례는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위촉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다.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법률에서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우선 채용·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들이 분석대상 조례에서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경기 조례이다. 다음으로 경북 조례, 전북 조례, 광주 조례, 서울 조례, 경남 조례, 강원 조례, 제주 조례, 전남 조례, 충북 조례의 순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주거기본 조례의 인력의 전문성

구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우선 채용·배치	전달체계 인력 배치	전문성 보유 기관 위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촉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①수립·시행/②수립
법률	▲	△	△	●	△	●	×
서울	△	△	×	×	△	●	①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구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우선 채용·배치	전달체계 인력 배치	전문성 보유 기관 위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촉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①수립·시행/②수립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②
경기	▲	△	△	●	△	●	①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①
전남	△	×	×	×	△	●	×
경북	△	△	△	●	△	●	①
경남	△	×	×	×	△	●	①
제주	×	×	×	×	△	●	②

주 : ● 강행규정, ▲ 노력의무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3) 권리구제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실효성 체계 중 권리구제 구성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구제의 보장성을 규정하는 ‘주거복지센터 위탁계약 취소’, ‘주거복지센터 기능’,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의견진술 기회 사전제공,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전세피해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급여제한 및 주거피해 상황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인천 조례에 따르면,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②항에서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 조례 제21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제6호에서 ‘주거복지 사

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 조례 제25조(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②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임대차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권리구제의 보장성에 대한 규범적 실효성을 볼 때, 법률과 시행령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규정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권리구제 관련 규정들이 특정 조례들(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에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규범적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권리구제의 보장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서울 조례이다. 다음으로 광주와 전남 조례, 인천과 경남 조례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조례이다.

[표 11] 주거기본 조례의 권리구제의 보장성

구분	의견진술 기회 사전제공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전세피해자 지원
법률	✕	✕	✕
서울	●	△	△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구분	의견진술 기회 사전제공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전세피해자 지원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주 :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4) 벌칙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범적 실효성 체계 중 벌칙 구성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벌칙의 엄격성을 규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거복지센터 위탁’ 조항을 살펴본다. 해당 조항에서는 위원 해촉, 위탁 취소, 지도 감독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필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제25조(벌칙)에 따르면, “제23조제③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해촉) 제2 2호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3조에서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제6조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벌칙 조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없다. 자치단체에서는 벌칙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 취소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필요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 조례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①항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 제22조(지도 감독) 제②항에서 “시장은 제①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벌칙의 엄격성에 대한 규범적 실효성을 볼 때, 법률과 시행령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규정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직무상 비밀누설 처벌에 대한 조례에서의 규정은 전무하며, 위탁 취소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필요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특정 조례들(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에서만 확인되어, 규범적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벌칙의 엄격성이 가장 강한 조례는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조례이며, 그 다음으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조례가 있다. 그것이 가장 약한 조례는 울산, 충북, 경북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2] 주거기본 조례의 벌칙의 엄격성

구분	직무상 비밀누설 처벌	위원 해촉	위탁 취소	지도 감독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필요 조치
법률	●	△	✖	✖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주 :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규정 부재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분석대상이 되는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종합적 연구결과를 시각화하였다(그림 1 참조). 주요 연구결과로서, 첫째,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에서의 규정을 조례에서 구현하는가라는 규범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조례의 목적지향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의 규범적 타당성은 높은 반면, 주민의 권리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의 규범적 타당성은 낮았다. 조례의 법문은 사회복지 현실에 적용가능한가라는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권리구제의 보장성, 벌칙의 엄격성의 규범적 실효성은 낮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결과, 서울과 광주 조례가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의 목적지향성에서는 부산, 광주, 경기, 주민의 권리성에서는 서울, 대구, 세종, 경기,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에서는 서울과 광주,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는 제주,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는 서울,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및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광주와 경북, 인력의 전문성에서는 경기, 권리구제의 보장성에서는 서울, 벌칙의 엄격성에서는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이 이상적인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의 조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 이에 헌법 정신을 반영한 「주거기본법」의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의 조문을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는 수립·시행을 명시하나, 수립만을 명시하는 경우(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제주)가 있다. 그 배경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수립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들이 제6조를 준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다른 사회복지법률처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주거지원필요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조례에서는 주거약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급여 대상,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 긴급구조 가구,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족, 이주자, 1인 가구, 전세피해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 전세피해자 등 신규 주거약자를 포괄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 확대가 요청된다.

넷째, 주거위기가구 발굴 조항 신설이 요청된다. 서울, 부산, 광주, 경북 조례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또는 업무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서울),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부산, 광주), 대상자 발굴(경북)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제②항의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의 적극 발굴'의 정신을 「주거기본법」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서울, 세종,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조례에서는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주거기본법」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노력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거종합계획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법 정합성 차원에서도 요청된다.

여섯째, 권리구제절차의 보장성 제고를 위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급여제한 및 주거피해 상황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법률에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주거기본법」에는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반면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조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위탁계약 취소의견진술 기회 사전제공, 주거복지센터 기능으로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전세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규범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조항을 「주거기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목적 조항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향상은 부산 조례에서만, 주거권 보장은 광주, 경기, 경북 조례에서만 확인된다. 상위법의 목적 조항에서 명시

하고 있는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지향성에서의 규범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주거권)은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대구, 세종, 경기에서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거권 조항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변경, 주거실태조사 실시 추가가 요청된다. 「주거기본법」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항은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규정한 주거정책 관련 각 호(號)들이다. 조례에서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기본 조례는 규범적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규정에서, 시행이라는 용어가 부재한 경우, 주거정책 및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도 하거나, 미실행에 따른 법적 책임의 다툼 여지가 발생하므로 시행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의 주거실태 파악, 주거위기가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률 제20조(주거실태조사)와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서 규정한 주거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용대상의 보편성 강화를 위해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주거지원필요계층 명시, 신규 주거약자를 포괄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 확대가 요청된다. 조례에서 모든 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주거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을 향하고 있다. 이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조례에 열거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에 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조항들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인 주거지원사업들을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주거기본 조례는 하나도 없다.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서 임의규정화되어 있는 주거지원사업 관련 법문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모두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거기본 조례에서는 해당 조항이 부재하거나 임의규정으로만 명시해 놓고 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용 항목에, 주거복지 사업비 지원, 전달체계 운영예산 구비, 주거복지센터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일곱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연계, 주거복지정보체계 활용,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법률에서는 강행규정으로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의무규정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 연계, 임의규정으로서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명시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해당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전달체계 구축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함에도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규범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달체계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법률 및 시행령을 명시(법 제22조제①항 및 영 제14조제①항에 관한 사항)한 경기 조례를 참고함으로써,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시에서 도입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전세사기 피해예방,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임대차상담 등의 규정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좋은 사례이다.

여덟째,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우선 채용·배치, 전달체계 인력 배치 규정 추가를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채용은 규범적 실효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관련 조항들을 경북 조례 제18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참고하여 조례에 반영한다면, 사업을 담당할 주체의 재생산 구조가 정착되어, 지역사회에서 보다 실효성 높은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주택시장에서의 전·월세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 기능으로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남 조례에서는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도민의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보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조례의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열째, 위탁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을 통해 보장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면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조례에서는 위탁 취소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필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사무

를 위탁받은 기관도 넓은 의미에서 보장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히 주거복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벌칙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거기본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상위법에 의거하여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단하고, 다시 그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상위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비교 연구방법의 혁신에도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권오정. 2015. 「주거기본법 제정과 주거복지사의 현재와 미래」. 한국주거학회지 10(2): 5-8.
- 김나래. 2018.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방향」. 부동산법학 22(1): 123-148.
- 김서기. 2018.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주거 관련 제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합건물법학 26: 53-87.
-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5(1): 31-64.
- 민기채. 2023.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 46(3): 25-55.
- 박윤영. 2018.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제연구 9(3): 65-82.
- 박정연. 2016.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법학논총 29(2): 127-167.
- 신원우. 2017. 「주거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상품학연구 35(4): 85-90.
- 양승광. 2022. 「주거약자의 개념(概念)」. 사회보장법연구 11(1): 53-84.
- 오정석. 2015.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복지사의 역할」. 한국주거학회지 10(2): 18-21.
- 윤찬영. 1998. 『사회복지법제론Ⅰ·총론』. 서울: 나남.
- 이은기. 201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267-299.
- 이종권·김경미. 2016.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7(4): 33-46.
- 이지숙. 2015.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8(4): 283-292.
- _____. 2016.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7(6): 77-84.
- 이흥렬. 2019.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 방안 검토」. 부동산법학 23(3): 107-141.
- _____. 2021.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부동산법학 25(4): 113-140.

임성훈. 2021.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행정법연구 66: 175-204.

최승원·김태영. 201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7(2): 101-14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 문 초 록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 주거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 신설,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변경,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포괄적 규정, 주거위기가구 발굴 신설,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목적 조항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 명시,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추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추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명시, 강행규정으로 주거지원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추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명시, 주거복지 정보체계 활용,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우선 채용·배치,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신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조례, 주거기본 조례,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주거기본법, 비교 연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Min, Kicha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aims to derive a plan to revise residence framework acts and ordinanc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system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by setting the Residence Framework Act as a reference frame and performing vertical and horizontal analyses simultaneously. Consequently, the levels of normative validity and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low overall. Recommendations for measures to amend the law include establishing a new housing policy for all citizens, changing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housing comprehensive plans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egulation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new searching regulations for households in housing crises,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nd education, and new rights relief, such as appeals. To revise ordinances, the purpose of improving housing welfare and guaranteeing housing rights, the basic principles of housing policy, the conduct of housing status surveys,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as mandatory regulations, budget

securit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housing welfare specialist training, and educational support were proposed.

Key words: social welfare ordinanc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 residence framework act, comparative study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손창우*

손
창
우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설계
- 2. 연구도구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II. 연구결과

- 1.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 2.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한계: 심층면접 결과

IV. 논의

I. 서론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방문보건 사업은 주로 시 군구 보건소의 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초기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손창우·유명순 2016), 1990년 이후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노인 의료

.....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E-mail: cwshon@inje.ac.kr, Tel: 051-890-6876)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273>

투고(접수)일 2024.1.30. 심사(수정)일 2024.2.22. 게재확정일 2024.6.17.

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보건소 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대도시는 소도시 또는 농촌에 비해 의료 기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소 중심의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의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시군구 거주 노인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도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었고(강복수 외 1995), 시골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의 질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담당인력 한명이 책임지고 있는 지리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 기인하는 낮은 치료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건강관리가 강조되어 왔다(김원진·장연기 2005).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서울시는 자치구 보건소가 아닌, 행정동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만 65세 및 만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 하였고(서다람·손창우 2021), 2023년부터는 사업명을 '건강동행센터'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서울시복지재단 2023). 이는 행정동이라고 하는 보다 좁은 물리적 공간 내의 건강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의 방문건강관리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노인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리울만 하였다.

그동안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우울 고위험군 발굴, 자살경향성 및 인지저하 어르신 발굴, 허약노인 판정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찾동 사업의 경우, 우울 고위험군 발굴률은 4.5%, 인지저하 노인 발굴률 8.0%, 허약노인 발굴률이 26.5% 수준으로 취약노인의 발굴 측면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행정동이라고 하는 공간의 내에서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노인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에서의 한계가 드러

났다(이준영 외 2020). 게다가, 방문관리사업 등록 노인의 지속적 감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족도 수준, 필요서비스 미충족 경험률의 계층 간 격차 등을 포함한 사업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서다람·손창우 2021; 손창우 외 2019). 게다가, 성과 측정 방식에 있어서도 실적 평가 중심의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고, 사업의 구조, 과정 및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접근은 매우 부족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이자 기능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는 공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소와는 그 역할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정책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는 대표적인 의료전문직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사회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화가 완료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공공조직의 규범과 문화를 수용하는 조직 몸입이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김상욱·서영준 2003). 특히, 공공의 사업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 흔히 서비스에 질이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기 쉬운데, 공공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구조와 수준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김인 2006), 정책 개선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주요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Goddard 2005), 조직과 행위자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평가하는 것은 보건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방문간호사의 소속은 보건소로서 명목적으로는 의사의 명령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행정동으로 동주민센터의 조직하에서 운영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말해, 방문간호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업무지시의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예, 보

건소 건강증진과)의 명령과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장의 지시 하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Henri Fayol의 조직관리 원칙에 따르면, ‘권한과 책임(authority & responsibility)의 명확화’와 ‘명령 및 지휘의 일원화(unity of command and direction)’는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영향을 준다(Bacud 2020). 거버넌스는 책무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측면에서 책무는 핵심적인 지표이자 구성 요소이다(Dubnick and O’ Brien 2011; Ruhanen et al. 2010). 즉, 공공조직의 거버넌스 평가는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거버넌스 수준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소의 지역주을 대상 건강관리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공중보건의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박은자 외 2023),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과정적 성과로서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의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개선 지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평가결과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 노인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인식과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개발한 보건정책 거버넌스 평가도구(거버넌스 구성요소: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이해당사자 참여, 투명성과 정보, 감독과 규제, 일관성과 지속성)를 활용하였다(Savedoff and Gottret 2008). 추가적으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성공적인 보건사업 사례로 남을 가능성, 사업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양적 접근과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접근을 병행하여 수행한 혼합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는 수치화된 결과만으로 파악하기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과 적은 표본수를 갖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Raine et al. 2016).

연구참여자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의 관리자급 공무원과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로 구성하였다.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들의 경우,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 계획과 관리의 주체이며,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이중적 명령 체계 하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로서 책무성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째, 사업의 이해도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업 첫해인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치구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서울시 5대 권역별(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로 1개 자치구씩 총 5개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자치구 중 인구구성 및 건강 수준 측면에서 각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를 추천받았다. 연구에서 활용한 5대 권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의 발전 계획과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도시 특성을 구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선정된 자치구별로 2개 행정동을 임의 추출한 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의 공문 협조를 통해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에 대해 사전 면접에 대한 동의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접과 약식설문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실 공간을 대여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거버넌스 설문조사

거버넌스는 본래 행정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의 질, 효율성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강조되면서 공중보건학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Savedoff 2011). 또한 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모형과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도구 중 하나가 세계은행이 개발한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s), WGI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목소리와 책무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규제 질, 부패관리 등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주로 국가 단위의 공

적개발원조나 국가비교연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손창우 외 2013), 본 연구와 같이 도시 차원의 보건사업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보건분야의 거버넌스 평가를 위해 개발한 또다른 거버넌스 평가 프레임워크(Svedoff and Gottret 2008)를 활용하여,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정부와 같은 대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책무성(accountability through governance)’이라고 불리운다. 또한 이 도구는 국내에서도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거버넌스 평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평가(최지숙·이근우 2021), 신포괄수가제도 거버넌스 인식 평가 연구(손창우 외 2023; Shon and You 2020)에 활용되는 등 보건정책 거버넌스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은 물론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거버넌스 평가도구는 총 5가지 영역,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선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7점 척도로 평가하되, 4점 이상을 긍정적인 평가로 간주하였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성공적인 보건사업 사례로 남을 가능성, 사업만족도는 10점 척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도구의 5가지 영역은 (1)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coherent decision making structure), (2) 이해당사자 참여(stakeholder participation), (3) 투명성과 정보(transparency and information), (4) 감독과 규제(supervision and regulation), (5) 일관성과 지속성(consistency and st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는 ①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② 위기가 갈 등관리 전략이 정례화되어 있는지, ③ 관리와 운영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둘째, '이해당사자 참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사업의 도입,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단일 질문으로 평가했다. 셋째, '투명성과 정보'는 ① 사업의 명분이나 정당성이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② 사업의 주요 서비스 구성 요소들이 서울시의 현실적 정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③ 사업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④ 사업의 도입,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넷째, '감독과 규제'는 ① 사업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②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인센티브 구조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③ 사업의 도입, 수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일관성과 지속성'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동기가 정치환경의 변화나 기타 내부 조건의 변화에 의해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단일 질문으로 평가하였다.

2)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심층면접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소개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동의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독하였다. 도입질문으로는 사업 참여의 이유와 사업의 도입 목적과 명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를 자기기입방식의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확인 후 맥락적 해석을 위해 각 영역별 응답의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

체적인 질문과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한계, 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무리 질문으로 는 평가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 면접 순서 및 질문지 구성

순서	구분		질문지 내용
1	연구소개		연구소개, 연구를 통한 기대, 연구 동의성 작성
2	도입질문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여/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도입 목적과 명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거버넌스 평가	설문조사	거버넌스 평가 설문지 5개 영역 15문항, 좋은 거버넌스 인식 3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
4		심층면접	(조사문항별)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심층면접: 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현재의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서울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사업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마무리 질문		서울시의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로 각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를 각 1개씩 선정, 총 5개 도시를 선정하였고, 2020년 11월 16일부터 11

월 26일간 각 도시별 1회씩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진행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약식 설문조사지와 주요 질문내용을 배포하여, 연구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참여자가 자유롭게 주제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응하며, 설문조사와 면접의 결과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모든 참여자에게 구득하였다. 면접당 연구참여자 3-4명과 함께 심층면접 방식으로 각각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참여자는 19명이었다. 이후 설문과 면접으로 얻어지는 모든 개인정보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했다. 모든 면접내용은 녹취 후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전사된 자료를 면접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자료의 유효성을 높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19명의 참여자의 대부분은 18명이 여성이었으며, 50대(n=9)와 40대(n=6)가 전체 참여자 중 약 80%를 차지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찾동)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4년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는 9명, 방문간호사는 10명이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11명, 무기계약직이 8명으로,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에 비해 3명 더 많았으며, 자치구 보건소 참여자는 모두 정규직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소속	성별	연령대	직위	근로형태
D1	동주민센터	여자	4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2	동주민센터	여자	4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3	동주민센터	여자	5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구분	소속	성별	연령대	직위	근로형태
D4	동주민센터	여자	5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5	동주민센터	여자	30대	방문간호사	정규직
D6	동주민센터	여자	4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7	동주민센터	여자	4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8	동주민센터	여자	20대	방문간호사	정규직
D9	동주민센터	여자	5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D10	동주민센터	여자	50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G1	자치구(보건소)	여자	40대	관리자(주무관)	정규직
G2	자치구(보건소)	여자	30대	관리자(주무관)	정규직
G3	자치구(보건소)	여자	50대	중간관리자(팀장)	정규직
G4	자치구(보건소)	여자	50대	중간관리자(팀장)	정규직
G5	자치구(보건소)	여자	50대	중간관리자(과장)	정규직
G6	자치구(보건소)	여자	50대	중간관리자(팀장)	정규직
G7	자치구(보건소)	남자	40대	중간관리자(과장)	정규직
G8	자치구(보건소)	여자	50대	중간관리자(팀장)	정규직
G9	자치구(보건소)	여자	30대	관리자(주무관)	정규직

2) 분석방법 및 시각화

약식 설문조사에서 구득한 자료는 코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결과를 5차원의 거버넌스 평가 항목에 따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여 각 항목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녹취를 전사한 후 주제별 분석을 위하여 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CAQDAS) 프로그램인 NVivo 11을 활용하였다. 녹취록을 코드화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주요 연구 질문에 따라 하위노드를 구성하였다(Shon and You 2020). 다섯가지로 구성된 거버넌스 요소에 따른 하위노드와 대상자별 코딩 빈도

(Coding frequency)는 시각화하여 별도로 부록을 통해 제시하였다. 하위노드는 거버넌스 평가항목별로 주요 결과를 도출한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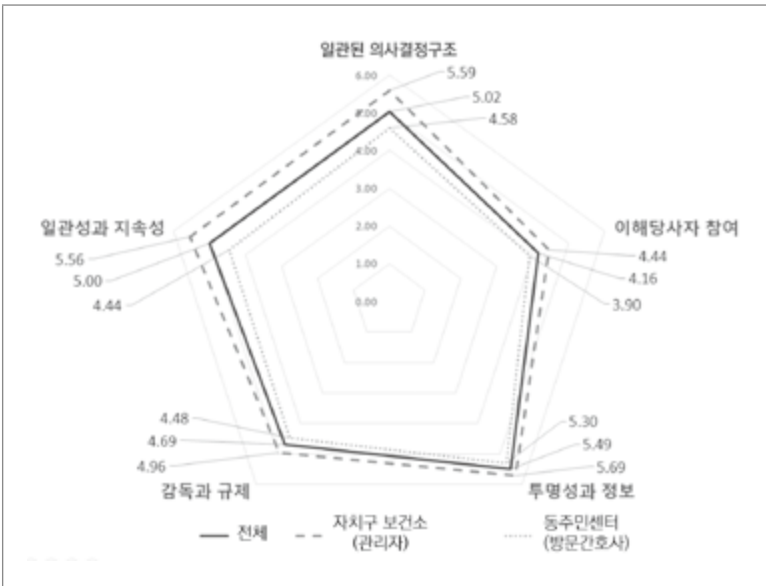
1.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거버넌스 평가 결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평가 결과, ‘투명성과 정보(5.49점/7점)’,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5.02점/7점)’, ‘일관성과 지속성(5.00점/7점)’, ‘감독과 규제(4.69점/7점)’, ‘이해당사자 참여(4.16점/7점)’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영역은 거버넌스 하위 영역들 중 보건소 관리자와 방문간호사 간의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5.59점/7점)가 방문간호사(4.58/7점)에 비해 권한 대비 책무와 역량이 잘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해당사자 참여’ 영역은 보건소 관리자의 점수가 4.44점/7점, 방문간호사의 점수가 3.90점/7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인 거버넌스 인식이 다른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4.16점/7점). 셋째, ‘투명성과 정보’는 다른 거버넌스 하위 영역 중 비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고(5.49점/7점),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의 평가는 5.69점/7점, 방문간호사의 평가는 5.30점/7점으로 보건소 관리자들이 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감독과 규제’ 영역은 ‘이해당사자 참여’ 다음으로 거버넌스 인식이 낮게 평가

되었고(4.69점/7점),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는 4.96점/7점, 방문간호사는 4.48점/7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관리자가 더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평가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과 지속성’ 영역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5.00점/7점), 타 거버넌스 영역에 비해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보건소 관리자 5.56점,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4.4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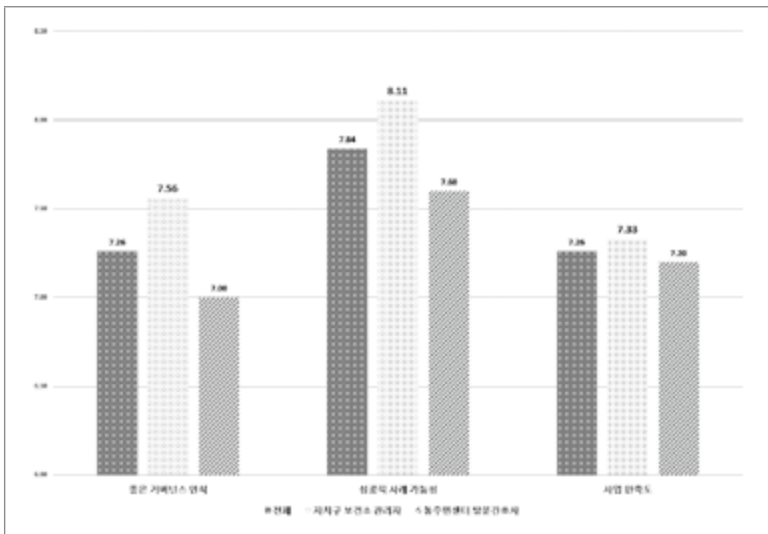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거버넌스 인식 평가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평가 결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공공기관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인식에 대한 전반적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좋은 거버넌스 평가 결과는 7.26

점/10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는 7.56점/10점,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7.00점/10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성공적인 보건사업 사례로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 점수는 7.84점/10점으로,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는 8.11점/10점, 방문간호사는 7.60점/10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26점/10점이고,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는 7.33점/10점, 방문간호사는 7.20점/10점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림 2] 서비스 제공자의 거버넌스 정책 인식 수준

3) 심층면접을 통해 본 거버넌스 평가의 맥락과 이유

(1)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영역은 다른 하위 거버넌스 평가 영역에 비해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방문간호사의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었으나, 두 집단 모두 실적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대상자 관리 연속성 확

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량에 비해 책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저희는 실적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대로 일단 업무를 하게 돼요. 이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 연결 건수도 제출해야 되고 이랬었거든요.” (G2)

“(…) 자꾸 이제 그 건수에 치이다 보니까 이 본래의 빛깔은 퇴색돼버리는 거죠. (…) 실질적으로 도래자분들에 대해서는 1회성 방문밖에 안 되는 결과가 많았어요.” (D4)

이와 함께, 일부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부터의 명령(직무기술서 상의 업무)과 동주민센터의 동장·팀장의 명령 사이에서 업무상의 혼선, 이로 인해 늘어가는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동은 방문을 가는데 팀장님 자체가 뭐하려고 그렇게 가야 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인력이 많아도 못 가요. 예, 팀장님이나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D7)

(2) 이해당사자 참여

‘이해당사자 참여’ 영역은 전체 거버넌스 평가의 하위 영역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모두 사업의 도입-수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요 행위자인 일선 간호사의 의견 반영,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뭐 모니터링도 이제 해마다 하잖아요. 저희가 설문조사랑 모니터링 이랑 해마다 이렇게 해서 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하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D6)

다만, 초기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자치구 참여자들의 경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건강관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수준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차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특히, 민간자원)과 대상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투명성과 정보

‘투명성과 정보’ 영역은 다른 거버넌스 하위 영역에 비해 가장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은 영역이었다.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모두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명분이나 정당성이 비교적 명백하고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찾동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지역 주민이 있는 곳에 직접 내려가서, 협업을 통해 좀 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비전과 목표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이제 구색이 돼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4)

다만, 사업의 명분이나 정당성에 비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업무와 역할(role)로 인해 갈등과 혼선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응급상황일 때는 복지공무원이랑 같이 가야 된다, 뭐 써야하고 해야된다 그런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D6)

추가로, 보건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PHIS, 행복e음 등)이 통합되지 않아 업무수행의 비효율성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PHIS인데, 행복e음하고 두 개가 분리돼 있으니까, 같은 시스템을 안 쓰니까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또 열어서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 시스템 안에 있으면 같이 보고 (좋은데요).” (G1)

“그런데 이제 일단 물어보기 전에는 저희가 그런 쪽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리고 행복e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한이 축소되다 보니까 최소한만 볼 수 있거든요.” (D6)

(4) 감독과 규제

‘감독과 규제’ 영역은 ‘이해당사자 참여’ 영역 다음으로 전반적인 평가 수준이 낮았다. 거버넌스 영역 중 ‘감독과 규제’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목표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책무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모두 성과평가 시스템 속에 환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속적인 감독과 피드백을 통한 사업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실제 수행한 업무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표로 개

선하거나 평가지표에 질적인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엑셀표에 한 번 하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일을 해도 뭐 한 달로 봤을 때 애가 뭘 했었지?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 ” (D7)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표를 해 줄 때 진짜 질적인 관리 위주로 줄 건지, 그러면 양적인 건 최소한으로 주고 질적인 걸 하나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 ” (G8)

(5) 일관성과 지속성

‘일관성과 지속성’ 영역은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사이의 평가 점수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영역이었다. 특히, 노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보건소 관리자에 비해 사업의 지속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정치 리더가 누구인지,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동주민센터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 어쨌든 이 사업은 이미 안착되고 고정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는 인식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G3)

“그러니까 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 이거 왜 안 없어지고 계속 찾동이 되냐,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바뀌니까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D4)

[표 3] 거버넌스 하위항목별 주요 결과 요약

거버넌스 하위항목	주요 결과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1) 실적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대상자 관리의 연속성 부재 2) 이원화된 명령체계에 따른 업무상의 혼선
이해당사자 참여	1) 주요 행위자나 대상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및 피드백 구조 부족 2)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미흡
투명성과 정보	1) 사업의 명분 및 정당성의 명문화 2)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역할(role)로 인한 갈등과 혼선 3) 통합되지 않은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비효율성
감독과 규제	1) 사업의 성과평가시스템의 환류체계 부족 2) 지속적인 감독 및 피드백을 통한 사업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일관성과 지속성	1)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우려

2.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한계: 심층면접 결과

1) 방대한 건강사정 항목으로 인한 비효율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건강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항목(스크리닝 도구)의 수가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시 제공자 및 수혜자 모두에게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처음에 스크리닝을 다 하면 대상자분들이 받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조사를 받는구나. (…) 처음부터 너무 진을 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간소화, 정말 핵심만 좀 엑기스만 뽑아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D6)

2) 개별 간호사 역량에 따른 서비스 질의 차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이 방문간호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신규 방문간호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과의 라포(rapport)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기 보다는 방문간호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처음에는 라포형성 차원에서 이렇게 가족관계 물어보고 혈압, 당뇨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 그런 거 좀 다 파악하고 하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는 처음부터 해야할 건강확인 같은 건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 (D8)

IV. 논의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시간 중단되었던 도시의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시행 9년차를 맞이한 서울시의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거버넌스 인식을 평가한 연구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의 맥락적 해석은 물론 도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19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건정책 거버넌스 평가를 위해 개발되고, 다수의 국내 보건정책 거

버넌스 연구에서 사용된 거버넌스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Savedoff and Gottret 2008; Shon and You 2020; 손창우 외 2023). 이후, 맥락적 이해를 위한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의 이유, 사업의 명분과 목적, 수혜 대상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한계, 사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5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평가 결과가 낮은 영역이 ‘이해당사자 참여’로 확인되었고,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와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 참여’가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지역자원과의 연계 시스템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주도의 보건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더 용이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보건정책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손창우 외 2023; 황순기 2013).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좌절과 절차적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업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유명순 2009). 이를 동주민센터의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적용해 보면, 현재 서비스 제공자인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이 자치구 보건소와의 소통 과정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사업 개혁 과정에 방문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무관심, 냉소와 침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손창우 외 2013).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소통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거버넌스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였는데,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에 비해 평가 점수가 낮은 주요 이유는 이원화된 명령체계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여진다. 심층면접 결과,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부터의 업무지시(직무기술서 상의 업무)와 동주민센터의 동장·팀장의 업무지시를 이중으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방문간호사는 노인 및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간호 및 보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며, 지역사회 내 주요 보건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2021).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방문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자치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간 중복된 명령체계 하에서 방문간호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명령체계 일원화, 건강사정 방식의 간소화, 간호사 권한 강화 등 지역단위의 건강관리 체계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관성과 지속성’ 영역 또한 자치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평가 인식의 차이가 크게 확인된 항목 중 하나로, 방문간호사가 보건소 관리자에 비해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조례제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5년으로 당시에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부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채

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전에 채용된 간호사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었고, 이들은 다음 서울시장의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은 법치주의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경호 2023).

‘투명성과 정보’ 영역의 경우,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보건소 관리자와 방문간호사 모두 사업의 명분과 정당성이 비교적 투명하게 제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제공자들과 이용자들 모두에게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사회적 압력이 중요하며, 제공자 관점을 넘어선 이용자 관점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Hale 2008). 다만, 향후 보건정보시스템과 복지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바탕으로 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된다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감독과 규제 영역의 경우, 보건소 관리자와 방문간호사 모두에게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사업의 제재와 보상,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명시는 물론 사업 도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구현하는 것인데, ‘감독과 규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영역의 거버넌스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낮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감독과 규제를 통해 표준화된 행동, 위험관리는 물론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O'Brien 2019).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평가지표인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이해당사자 참여, 투명성과 정보, 감독과 규제,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 모두를 고려 하여,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관점에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7.26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활용 해 보건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했던 손창우·김정아·이선주(2023) 연구 의 치과주치의 제도(7.09점/10점)와 Shon and You(2020) 연구의 실평갈 수가제(4.22점/1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거버넌스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거버넌스 평가시 정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의료제공자, 학계의 관점을 포함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사업 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보건소 관리자와 방문간호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 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정책 수립은 공공이 담당 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지역보건사업은 사업 계 획과 관리, 서비스 제공 모두 공공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 으므로 공공조직 내부의 위계와 역할에 따른 거버넌스 인식 차이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수행 과 정에서 드러난 주요 한계로는 지나치게 많은 건강사정 항목으로 인한 비 효율성과 개별 간호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의 편차 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먼저, 지나치게 많은 건강사정 항목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 비효율성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되고 있 는 노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결과와 도시 노인들의 건강정보를 연계하 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특히,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손창우 외 2021). 현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방문간호사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사후에 각 지자체로 검진결과가 통보가 되는 형태의 느슨한 정보공유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대상자에게 건강보험자료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를 지자체의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차 검진 안내, 의료기관과 보건소 연계를 시작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및 기타 도시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서다람·손창우 2021). 또한 개별 간호사 역량에 따른 서비스 질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공 서비스 질 표준화를 위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사례관리 교육 및 신규 간호사에 대한 현장 교육 등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남수 2022).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도시로서 다양한 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택의료학회, 노인간호학회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이외에도,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지역사회 내 조직의 역량을 활용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남재걸 2016; 최진도 외 2014). 특히, 보건의료 영역

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자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틀을 갖춘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의 한계로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의 5개 권역별 1개 자치구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추천받은 후 연구자가 행정동을 임의선정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모든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직 공무원들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편향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조사 시점으로 인한 기억 편향(recall bias)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 수행되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던 시점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시 노인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주요 영역별 양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맥락과 이유, 사업의 전반적 성과와 한계를 질적접근을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이자,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장기간 동안 노인방문건

강관리 사업을 중단하였고, 노인건강관리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 개선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내 노인의 건강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령일원화, 방문간호사의 참여 수준의 증대,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책무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복수·이경수·김천태. 1995. 「도시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 보건행정학회지 31(1): 45-61.
- 고경호. 2023.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혁신 및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적용: 충남지역 민간위탁형 기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의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31(1): 45-61.
- 김상욱·서영준. 2003. 「기업내부노동시장(FILM)과 직업내부노동시장(OILM)의 직장이동과 직업이동 성향: 의료전문직의 사례」, 한국사회학 37(4): 1-29.
- 김원진·장영기. 2005.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남지역 노인 건강증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117-140.
- 김인. 2006.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39.
- 남재걸. 2016.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도시행정학보 29(3): 199-230.
- 박남수. 2022.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전 사회적 접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4): 29-38.
- 박은자·송은솔·윤강재. 2023. 「코로나 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43(3): 26-37.
- 서다람·손창우. 2021.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따른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41(2): 271-284.
- 서울특별시. 202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건강』, 서울특별시.
- 서울시복지재단. 2023. 8. 24.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운영 위한 '동행센터 업무매뉴얼' 발간』, 보도자료.
- 손창우·권순만·유명순. 2013. 「정책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본 한국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신포탈수가제 사례에 관한 심층면접 결과」, 보건행정학회지 23(4): 326-342.
- 손창우·김정아·이선주. 2023. 「학생 치과주치의제도 거버넌스 평가와 함의」,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11(3): 24-35.
- 손창우·서다람·황종남. 2021.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5(2): 254-267.

- 손창우·유명순. 2016.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조직의 혁신-보건
소 조직의 메르스 대응을 사례로」. 한국병원경영학회지 특별호: 96-106.
- 손창우·이승재·황종남. 2019.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 서울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9(2): 213-229.
- 유명순. 2009. 「간호 연구와 조직 이론의 통합적 접근: 동향과 함의」. 간호행정학
회지 15(3): 346-354.
- 유명순·이근찬·권순만·윤혜정. 2012. 「한국 병원 최고 경영자의 책무성 인식:
심층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2(4): 597-627.
- 이준영·손창우·신가희·유자영.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 황순기. 2013.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방안」. 지방정부연구 16(4): 137-161.
- 최지숙·이근우. 2021.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평가 모형 개발
-1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진도·김영·유시생. 2014. 「건강한 도시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 건강도시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2(2): 199-
209.
- Bacud, S. A. D. 2020. "Henri Fayol's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Its
Effect To Organizational Leadership And Governance." *Journal
of Critical Reviews* 7(11): 162-167.(DOI:[https://doi.org/10.31838/
jcr.07.11.25](https://doi.org/10.31838/jcr.07.11.25))
- Dubnick MJ, and O' Brien J. 2011. "Rethinking the Obsession: Accountabilit
y and the Financial Crisis," In Dubnick MJ, Frederickson HG editors,
Accountable Governance: Problems and Promises. London: M.E.
Sharpe.
- Goddard, A. 2005. "Accounting and NPM in UK local government-
contributions towards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Financial
Accountability & Management* 21(2): 191-218.(DOI:[https://doi.
org/10.1111/j.1468-0408.2005.00215.x](https://doi.org/10.1111/j.1468-0408.2005.00215.x))
- Hale, T. N. 2008.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globalgovernance." *Global
governance* 14(1): 73-94. (DOI: <https://doi.org/10.1163/19426720-01401006>)
- O'Brien, J. 2019. *Trust, accountability and purpose: The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hanen, L., Scott, N., Ritchie, B., Tkaczynski, A. 2010. "Governance: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Tourism Review* 65(4): 4-16.
- Savedoff, W. D. 2011. "Governance in the health sector: a strategy for measuring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655).
- Savedoff, W. D., and Gottret, P. E. (Eds.). 2008. "Governing mandatory health insurance: learning from experience," *World Bank Publications*.
- Shon, C., and You, M. 2020. "Evaluation of Health Policy Governance i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DRG-Based Hospital Payment System from Interviews with Policy Elit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1): 3757. (DOI:<https://doi.org/10.3390/ijerph17113757>)
- Raine, R., Fitzpatrick, R., Barratt, H., Bevan, G., Black, N., Boaden, R., Bower, P., Campbell, M., Denis, J.L., Devers, K., Dixon-Woods, M., Fallowfield, L., Forder, J., Foy, R., Freemantle, N., Fulop, N.J., Gibbons, E., Gillies, C., Goulding, L., Grieve, R., Grimshaw, J., Howarth, E., Lilford, R.J., McDonald, R., Moore, G., Moore, L., Newhouse, R., O'Cathain, A., Or, Z., Papoutsis, C., Prady, S., Rycroft-Malone, J., Sekhon, J., Turner, S., Watson, S., and Zwarenstein, M. 2016. "Challenges, solu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evaluation of service innovations in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Health Services and Delivery Research* 4(16).(DOI:<https://doi.org/10.3310/hsdr04160>)

국 문 초 록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손창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이 연구는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거버넌스 인식을 평가하고, 도시 노인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5대 권역별로 1개씩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취약성이 가장 높은 거버넌스 영역은 '이해당사자 참여'였고, 자치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거버넌스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와 '일관성과 지속성'이었다. 이해당사자 참여의 경우,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였으며,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였다. 또한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이원화된 명령체계에 따른 업무 혼선이 개선의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지역사회보건,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책무성

Abstract

Governance Evaluation of Home Visiting 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in Seoul, Korea

Shon, Changwoo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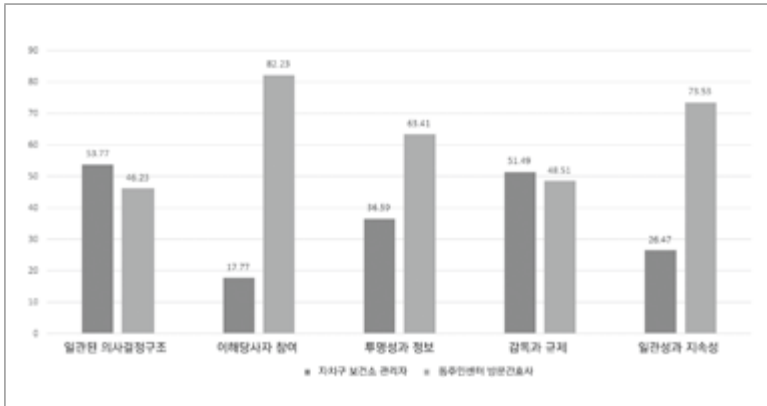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governance by service providers of home-visiting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in Seoul, Korea, and propose enhancements to increase future service effectiveness. Five autonomous districts representative of Seoul's five major regions were selected.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19 participants of manager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visiting nurses at community centers. The analysis identified "stakeholder participation" as the most vulnerable dimension. Notably, there was a significant disparity in governance perceptions between public health center managers and visiting nurses, particularly in "coherent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consistency and stability." The study highlighted the lack of effective mechanisms to incorporate feedback from key stakeholders, such as visiting nurses, and a deficiency in systems for collaborating with local resources. Additionally, work confusion from a dual-command system in decision-making structures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tical area for improvement.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home-visiting health services, integra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and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medical expert groups is recommended.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robust governance

frameworks that include clear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improve elder care services.

Key words: community health, Home Visiting 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Governance, Participation

Appendix B

Coding frequency (%) by stakeholders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시공간적 특성 탐색 방법론: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을 사례로*

박소현**·윤정원***·김민수***·구양미****

I. 서론

II. 선행연구

1. 경로창출 메커니즘과 지역발전 연구
2.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의 경로창출

III. 연구방법

1. 특허 데이터 추출
2. 토픽모델링을 통한 특허 분류
3. 토픽별 시공간적 특성 분석

IV. 분석 결과

1. 토픽모델링을 통한 경로 식별
2. 경로별 시공간적 특성

V. 결론

*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과 2024년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산학협력단-IGC 운영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조교수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학사과정, 공동저자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yangmi@snu.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309>

투고(접수)일 2024.4.29. 심사(수정)일 2024.5.30. 게재확정일 2024.6.17.

I. 서론

경로창출(path creation) 혹은 신규 경로발전(new path development)은 지역 내 새로운 산업 및 경제 활동의 출현과 성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Hassink et al, 2019; Martin and Sunley 2006). 새로운 산업 경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며 일자리, 기업, 투자 등의 증가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진화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관점의 접근은 경로창출의 경로의존성에 주목해 지역이 보유한 내재적 역량, 즉 기존 산업과 기술적 연관도가 높은 산업이 새로운 경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보았다(Boschma et al, 2012; Neffke et al, 2011). 최근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 등 지역 내 제도로서의 비기업 행위자와 글로벌 파이프라인, FDI 등 지역 외 행위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e.g, Boschma and Capone 2015; He et al, 2016). 경로창출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주변부 지역은 어떻게 신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산업 위기에 대응해 어떻게 새로운 대안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등 오늘날 복잡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 경제 문제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병옥·구양미 2023; Dawley 2014).

연구방법론 및 연구설계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크게 광역 혹은 국가 단위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해 결정요인을 규명하거나(Boschma et al, 2012; Frenken et al, 2007; He et al, 2016), 로컬 수준에서 특정 산업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Doloreux and Turkina 2021; Huh and Park 2018; 이재열·장근용 2021). 전자의 경우 연관다양성, 비연관다양성, 제도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된 가설들을 통계적

으로 검증해 결과를 일반화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다이내믹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경우 기업을 포함해 정부, 지역 대학, 연구 기관 등 여러 행위자의 역할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 또한 연구 대상인 특정 산업 자체에 치중해 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해당 경로가 지역에 착근(embeddedness)되어 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로창출이 지역 내 기존 경로나 함께 발전한 다른 새로운 경로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Hassink et al. 2019; Frangenheim et al. 2020; Harris and Pike 2023). 한 경로의 출현이 다른 경로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거나 반대로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공진화하는 관계가 되는 등 다양한 경로 간 관계가(inter-path relations)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로 간 관계가 공간적으로 이질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Bruel et al. 2021). 즉, 하나의 경로만이 아니라 여러 경로와 그들의 시공간적 진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경로 창출이 어떻게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새롭게 창출된 경로가 지역에 착근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제안한다. 이 탐색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단계로 (1) 특허 데이터 추출, (2) 특허 데이터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통한 주요 세부 토픽(즉, 산업 경로) 추출, (3) 발생 핫스팟 분석과 행위자 및 기술적 특성 분석에 기반한 경로 발전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경로가 창출되었는지, 이와 연관된 다른 경로들은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와 기술군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경로창출 메

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경로 간 관계를 이해하는 등 향후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에 적용한다. 인천의 바이오의약산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셀트리온, 한국안센, 머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및 외국계 제약회사가 송도지구에 잇따라 입지하면서 새롭게 산업이 발전한 대표적인 신산업 경로창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로 경로창출 과정의 시공간적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경로가 송도를 넘어 인천시 전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제약 부문 외 바이오 관련 인접 경로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전반적인 산업생태계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나아가 출원인의 유형, 산업군, 기술군 등 시계열적 특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로창출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 향후 연구와 정책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1. 경로창출 메커니즘과 지역발전 연구

지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 경로가 나타나는가는 경제지리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Neffke et al. 2011; 박정 2019). 이 문제에 대해 진화경제지리학 문헌은 경로의존성 개념에 의거 기존 산업 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연관성과 조직적 루틴으로부터 산업이 분기(branching) 혹은 연관 다각화(related diversification)하여 새로운 경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Martin and Sunley 2006; Boschma and Frenken 2011; Neffke et al. 2011).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산업적 기반과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비연관 다각화(unrelated diversification)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수출입 관계, 국가의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한 요인이 검토되었다.

진화경제지리학적 접근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로 발전 과정을 점진적이고, 지역 내생적이며, 기업주도적 과정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Trippl et al. 2018; Hassink et al. 2019). 기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종류와 기업 진입 및 퇴출 데이터를 다루면서 연관다각화와 비연관다각화 사이 이분법적 도식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진화경제지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수용되어 점차 비기업 행위자와 지역 외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다. 제도의 역할(He et al. 2016; Boschma and Capone 2015; Doloreux and Turkina 2021), 대학 및 연구 기관(Isaksen and Trippl 2017; Vallance 2016) 등 다중 행위자 접근(mutiactor approach)에 기반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외부 지식 및 자원의 유입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Isaksen and Trippl 2017). 나아가 Grillitsch et al.(2018)은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딩, 다각화, 신산업 출현으로 세분화하고, 각 경로의 행위자, 네트워크,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장소 기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다각화를 통한 경로창출은 여러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발전주의적 성격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발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산업정책 측면에서 하향식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역할과 외부 자원 유입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주변부지역, 저발전지역 등 기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미비한 비핵심지역의 경우, 연관다양성만으로는 지역의 경로창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imone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경로창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내

생적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외생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로창출이 반드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Bruel 2021; Hassink et al. 2019). 기존 연구는 새로운 경로가 지역에 착근되지 못하거나 기존 지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 경제의 불균등이 심화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된 경로가 기존 산업 경로 혹은 또 다른 신규 경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양한 경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에의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Frangenheim et al. 2020; Hassink et al. 2019). 일명 다중경로 다이내믹(multi-pathway dynamics) 혹은 경로 간 관계(inter-path relations)에 관해서는 기존 진화경제지리학 문헌에서도 “경로 간 커플링”, “경로 상호의존성” 등의 용어로 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Martin and Sunley 2006), 최근 들어서야 실증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Bruel et al.(2021)은 나미비아에서 관광업 관련 경로가 창출됨에 따라 기존 농업 부문 경로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형식의 지역 간 불균등이 야기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Harris and Sunley(2023)는 영국 남동부 지역을 사례로 해양산업의 녹색 전환을 통한 신규 경로창출이 기존 경로와의 경쟁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같은 시장을 겨냥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자산이 희소한 경우, 경쟁적 경로 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반대로 희소하지 않은 연관 자산을 사용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호협력적 경로 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Breul and Atienza 2022).

요컨대, 지역 내 새로운 산업의 경로창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대학, 연구 기관,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당 경로가 지역경제 내 착근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 경로 간 관계와 그들의 시공간적 특성을 탐색해야 한다.

2.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의 경로창출

200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이후 송도지구 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얀센, 머크, 아지노모토제넥신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및 위탁생산업 분야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입지함에 따라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산업 경로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인천 내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기업은 총 53개, 종사자수 6,796명으로 2011년 기업 23개, 종사자수 1,412명과 비교할 때 크게 성장했다(Jo and Yoon 2023). 기업뿐 아니라,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이원의료재단, 바이오 리서치 콤플렉스, 제이씨비 공동생물과학연구소 등 학교 및 연구 기관이 입지했으며(서봉만 2019), 중앙정부 및 인천시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이어져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실습교육센터,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IFEZ 바이오분석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이 설치되었다. 최근에는 2019년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중소 벤처기업을 포괄하는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잠재력 높은 중소, 중견기업의 유치와 혁신 역량을 갖춘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서봉만 2019).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산업이 지역 경제에 착근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송도와 남동공단 내 기업들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구조가 생성됨에 따라 송도 내외에서 제약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이 발전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김동관·유광민 2021; 서봉만 2017; Jo and Yoon 2023),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과 연관된 경로가 발전되었는지, 그 경로들의 시공간적 진화

과정은 어떠한지, 바이오클러스터가 입지한 송도 외 인천 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대기업 외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가 바이오헬스밸리 사업에 의료기기 및 뷰티 산업을 포함한 만큼 해당 경로들도 포괄해 경로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 공공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역 내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특허 데이터 추출

특허 데이터는 기술적 혁신, 지식 스퍼illo버 등 기술적 활동을 측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혁신 역량의 지표로서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경제 수준이나 지역 간 상호작용, 산업생태계 등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특히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는 지식과 기술 혁신을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봄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중요한 지역산업 지표로 활용했다(허동숙 외 2016; Park and Koo 2021).

본 연구에서도 특허 데이터를 지역 내 경로창출 및 산업발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2000년과 2021년 사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를 추출하기 위해 kipris plus 서비스를 활용해 출원인 정보에 '인천'이 포함된 등록특허 총 71,446건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그 후 유광민·김동관(2023)이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에 근거해 제시한 바이오산업 관련 IPC 코드를 포함한 특허를 추출했다. 바이오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

이 부재한 상황이나¹⁾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과 관련된 총 49개의 IPC 코드를 포함했다. 산업군과 IPC 코드가 완전히 매칭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해 바이오산업과 거리가 먼 특허들을 수작업으로 제거했다. 결과적으로 총 6,945건의 특허가 추출되었다.

2. 토픽모델링을 통한 특허 분류

추출된 특허 초록 자료에 대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주요 토픽을 추출했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의 하나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 집합으로부터 잠재적인 토픽을 찾아 대량의 텍스트 문서를 분류할 수 있어 특허 분석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이현상 외 2022; 윤철원 외 2024). 특허자료를 분류하는 데 IPC 코드를 사용하거나 산업 코드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렇게 기 정의된 범주는 분석의 목적에 비해 너무 넓을 수 있다(Tseng et al. 2007). 또한 복수의 IPC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와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토픽모델링은 자료가 내포한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의 주관이나 이론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론으로 적합하다(DiMaggio et al. 2013; 임연수 2023).

토픽모델링을 위한 여러 알고리즘 중 LDA (Latent Dirichlet al. location)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LDA는 주어진 문서 안에 어떤 주제가 존재할지에 대한 확률적 모델로 관찰 가능한 단어를 기반으로 문서별 토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바이오산업은 대분류 8개, 중분류 51개로 구성됨. 대분류에는 바이오의약품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자원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이 포함됨(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22).

픽 분포와 토픽별 단어 분포를 추정한다. 이에 따라 각 문서는 다양한 토픽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확률값이 계산되어 그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Blei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특허 초록 자료를 기반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했으며, 추출된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분류된 특허 내용을 검토해 명칭을 부여했다. 텍스트 전처리 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형태소 단위로 분해하고, 이 중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불용어 처리를 통해 전치사, 조사 등 의미 없는 단어와 “발명”, “상기”, “방법” 등 특허자료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를 제거했다.

토픽 수 결정을 위해 응집도 지수(Coherence Score)를 계산했다. 응집도 지수는 토픽 내 상위 단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Newman et al, 2010),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동일한 토픽에 속한 단어 간 상호관련성이 높고 의미론적으로 일관성 있음을 의미한다(김선욱·양기덕 2022). 잠재적 토픽의 수를 2부터 10까지로 설정한 후, 토픽 수별로 10번씩 반복하여 응집도 지수를 산출해 평균값을 비교했으며,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을 활용해 분류가 잘 되었는지 확인했다. 분석에는 Python 패키지인 konlpy, gensim을 활용했다.

3. 토픽별 시공간적 특성 분석

1) 발생 핫스팟 분석

토픽별 시공간적 발전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발생 핫스팟 분석(Emerging hotspot analysis) 기법을 적용했다. 이 방법론은 Getis-Ord G_i^* 통계량을 통해 공간적 클러스터를 추출한 후, Mann-Kendall 검정을 통해 시간적 추세를 분석하는 두 개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읍면동 단위

에서²⁾ 등록된 특허건수에 대해 Getis-Ord G_i^* 통계를 계산해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분류한다(Getis and Ord 1992). 핫스팟으로 분류된 지역은 특허 출원이 많은 지역끼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콜드스팟은 반대로 출원량이 적은 지역끼리 군집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어서, 식별된 핫스팟 및 콜드스팟의 시계열적 안정성 또는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Mann-Kendall 검정을 적용한다(Mann 1945; Kendall and Gibbons 1990). 각 구간의 값을 이전 기간과 비교해 증가, 감소, 또는 변화 없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범주형 변수 1, -1, 혹은 0의 값으로 변환한다. 모든 시간 구간에 대한 이러한 값들을 합산한 후, 시계열적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ESRI 2024).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을 8개의 핫스팟, 8개의 콜드스팟, 1개의 패턴 없음, 총 17개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 방법론은 비모수적 검정으로서 정규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에 적합하며, 이상치에 대해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s et al. 2017).

발생 핫스팟 분석은 기존 핫스팟 분석보다 지역의 역동성을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스냅샷 데이터라면 어떤 기간의 데이터를 쓰냐에 따라 포착되기도 포착될 수 없기도 한 산발형과 진동형 핫스팟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같은 핫스팟이라도 신규형, 연속형, 강화형, 감소형을 구분해 산업 경로가 공간적으로 확산 혹은 축소되어 가는 그 시계열적 추세를 탐색할 수 있다. 해당 방법론은 여러 분야에서 시공간적 추세를 탐색하기 위해 활용된 바 있다. Harris et al.(2017)은 열대지역 삼림과괴의 시공간 분포를 시각화해 글로벌 삼림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김예은·박종호(2021)는 우리나라 고위험 읍무를

2) 출원인의 주소지 자료에서 읍면동 주소를 추출함. 원자료에서 상세 주소는 마스킹 처리되어 있으나 법정동 추출이 가능함. 특허 데이터는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조직 단위에서 지역 산업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출원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시공간 분포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Morckel and Durst(2023)는 미국 오하이오주 빈집 증감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해, 이의 잠재적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는 특정 산업 경로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시계열적 핫스팟에 집중했다. 나머지 8개의 시계열적 콜드스팟은 모두 콜드스팟으로 분류해 시각화했다. 분석 결과 총 4가지 유형의 시계열적 핫스팟만이 추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표 1]과 같다. 해당 방법론이 경제지리 분야에서 활용된 적이 없어 합의된 해석방법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연속형 핫스팟은 산업 경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형 핫스팟을 통해 산업 경로가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발형 및 진동형 핫스팟은 시계열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수의 행위자가 산업 경로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ueen 인접성 척도를 기반으로 공간가중행렬을 생성했으며, 시간적 이웃은 1년 간격으로 정의했다. 분석에는 R의 sfdep 패키지를 활용했다.

[표 1] 발생 핫스팟 분석의 핫스팟 유형 정의

유형	정의
신규형(new)	가장 마지막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핫스팟이 발생한 지역
연속형(consecutive)	가장 최근 2개 기간에서 연속적으로 핫스팟이 발생한 지역
산발형(sporadic)	기간에 따라 핫스팟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지역
진동형(oscillating)	일부 기간은 핫스팟이고 일부 기간은 콜드스팟인 지역

자료: ESRI(2024)

2) 행위자 및 기술적 특성 분석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를 보강하기 위해 주요 행위자와 특허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해 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했다. 우선 출원인의 조직 유형, 즉 기업, 대학, 공공부문의 비중 변화를 분석해 행위자의 유형적 특성을 탐색했다. 이에 더해 특허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부 R&D 특허 성과 정보를 활용해 정부 연구과제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했다. 출원인의 산업군을 시각화해 해당 토픽 지식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을 판단했으며, 마지막으로 출원된 IPC(International Patent Code) 코드 비중을 시각화했다. 전체 기간에 걸쳐 상위 3~5개의 범주를 강조해 주요 범주의 시계열적 변화 과정을 시각화함과 동시에, 고유한 출원인 수, 산업군 수, IPC 개수를 별도의 선 그래프로 병치함으로써 다양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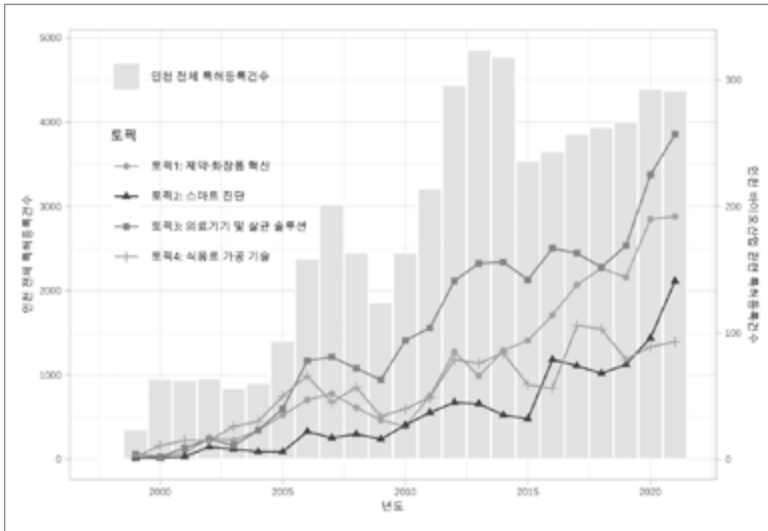
행위자 분석을 위해 특허 데이터에서 개인 출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인 정보를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제공하는 기업 정보와 결합했다. 조직의 유형, 산업군, 설립 연도 등의 정보를 추출했다. 정보가 없는 경우, 검색을 통해 주소지가 매칭되는 경우에 한 해 정보를 수집했다. 행위자는 공동출원의 경우에도 특허 1건당 1회로 계산했으며, 복수의 IPC 코드가 부여된 경우 합계가 1이 되도록 점수를 나눈 후 소분류 수준에서 (e.g., A61K) 집계했다.

IV. 연구 결과

1. 토픽모델링을 통한 경로 식별

인천시 전체 특허 연간 등록 건수의 경우 2000년과 2020년 사이

377.1% 성장한 한편,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16건, 2020년 600건으로 3,650.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연도별 인천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 등록 건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총 네 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각 제약·화장품 혁신, 스마트 진단, 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 식품 가공 기술로 명명하고, 이를 인천 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산업 경로로서 분석했다. 모든 토픽의 출원 건수가 2000년 대비 크게 증가해, 신규 선도기업과 연구 기관이 입지한 바이오의약품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등 바이오산업 내 인접 경로들 또한 함께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 토픽 모두 등록건수 기준으로 모두 크게 성장하여 회소하지 않은 관련 자산을(e.g., 인적자원 및 보유기술) 공유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상호협력적 경로 간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Breul and Atienza 2022). 또한 2021년 기준 토픽 3(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과 토픽 1(제약·화장품

혁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IPC 코드를 기반으로 한 기술 연구에서 A61K (의약품, 치과용 또는 화장품 제제)와 A61L (재료 또는 물건을 살균하기 위한 방법 또는 장치 일반)가 주요한 IPC로 나타났다(유광민·김동관 2023).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상위 출원인은 [표 2]와 같다.

[표 2] 토픽별 주요 키워드 및 상위 출원인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주요 키워드	추출, 피부, 효과, 화장, 세포, 성분, 중량, 화합물, 질환, 화장품, 발효, 단백질, 모발, 염증, 식품, 미백, 향균, 식물, 주름, 복합, 항산화, 펩타이드, 보습, 약물, 유기	장치, 신호, 센서, 영상, 측정, 제어, 감지, 모듈, 시스템, 출력, 카메라, 데이터, 촬영, 입력, 이미지, 환자, 초음파, 렌즈, 전원, 제어, 검사, 치료, 치아, 분석, 착용, 광원, 부위	형성, 내부, 장치, 설치, 살균, 공기, 회전, 상부, 연결, 방향, 배출, 고정, 삽입, 지지, 용기, 마스크, 프레임, 몸체, 공간, 유닛, 엘이디, 필터, 분사, 자외선, 유입, 형상, 케이스	제조, 혼합, 건조, 제거, 발효, 분말, 공정, 재료, 세척, 가열, 숙성, 배양, 분쇄, 코팅, 분해, 물질, 혼합물, 온도, 식품, 원료, 미생물, 반죽, 음식물, 소스, 포장, 양념, 수분, 냉동
상위 출원인	인하대학교 바이오에프디엔씨 국립생물자원관 인천대학교 대봉엘에스 셀트리온 길의료재단 엔프라니 코스모코스 의약바이오 컨버전스연구단	인하대학교 길의료재단 인천대학교 에스티지24 엠씨넥스 가천의과학대학교 아이블포토닉스 토비스 해성홀딩스 굿닥터스	인하대학교 세종파마텍 길의료재단 상아프론테크 연우 에스티지24 라니 웰뷰텍 에이치엠에이치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정석인하학원 셀트리온 대한제당 대봉엘에스 국립생물자원관 동서식품 울트라브이 상건

주: 주요 키워드는 중요도 순으로, 상위 출원인은 전체 출원 건수 순으로 정렬함

토픽 1에서는 제약·화장품 혁신 관련 경로가 탐지되었다. 해당 경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관련 특허들로 구성되어, 송도에서 추진된 바이오클러스터, 송도 글로벌 R&PD센터 등의 사업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제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특허들도 같은 경로로 구분되어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산업과 긴밀

히 연결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위 행위자 중 바이오에프 디엔씨,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과 화장품 제조를 겸하는 업체와 엔프라니 등 화장품 제조업체가 포함된 한편, 의약품 관련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특허 출원 활동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관련 특허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길의료재단 등 대학과 병원을 중심으로 비기업 행위자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20년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총 190건으로 2000년 대비 9,400.0%, 2010년 대비 630.8% 증가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토픽 2는 스마트 진단 관련 경로로 의료 영상장치, 영상 및 이미지 기반 분석 기법 등 광학기기 및 데이터 기반의 의료 장치 및 진단 시스템 특허를 포함한다.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및 바이오서비스산업과 연관된다. 토픽 1과 유사하게 대학 및 병원이 상위출원자이며, 이외 영상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이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96건으로 2000년 대비 9,500.0%, 2010년 대비 255.6% 증가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토픽 3은 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과 관련된 소독기, 악취 희석 기술, 위생 케이스와 기타 기계식 의료기기 관련 특허를 포괄한다. 바이오의료기기산업과 일부 바이오환경산업과 연관된 경로로 판단된다. 기계 혹은 전기장비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으며, 화장품 및 의약품 용기나 미용 기기 관련 기업들도 상위 출원인에 포함되었다. 2020년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총 225건으로 2000년 대비 11,150.0%, 2010년 대비 139.4% 증가해, 2020년 기준 4개 토픽 중 가장 등록건수가 많은 토픽으로 분류된다. 토픽 3은 토픽 2와 함께 2019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마스크 등 관련 살균기와 진단 기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토픽 4는 식음료 가공 기술과 관련, 특정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반대로 생물체를 활용해 다른 목적을 위한 조성물 제조 방법 등을 포함해 바이오식품산업과 연관된다. 대학 출원인과 더불어 기존 지역 내 식품기업들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2020년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89건으로 2000년 대비 709.1% 2010년 대비 122.5%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낮은 토픽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토픽 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비중이 가장 낮은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2. 경로별 시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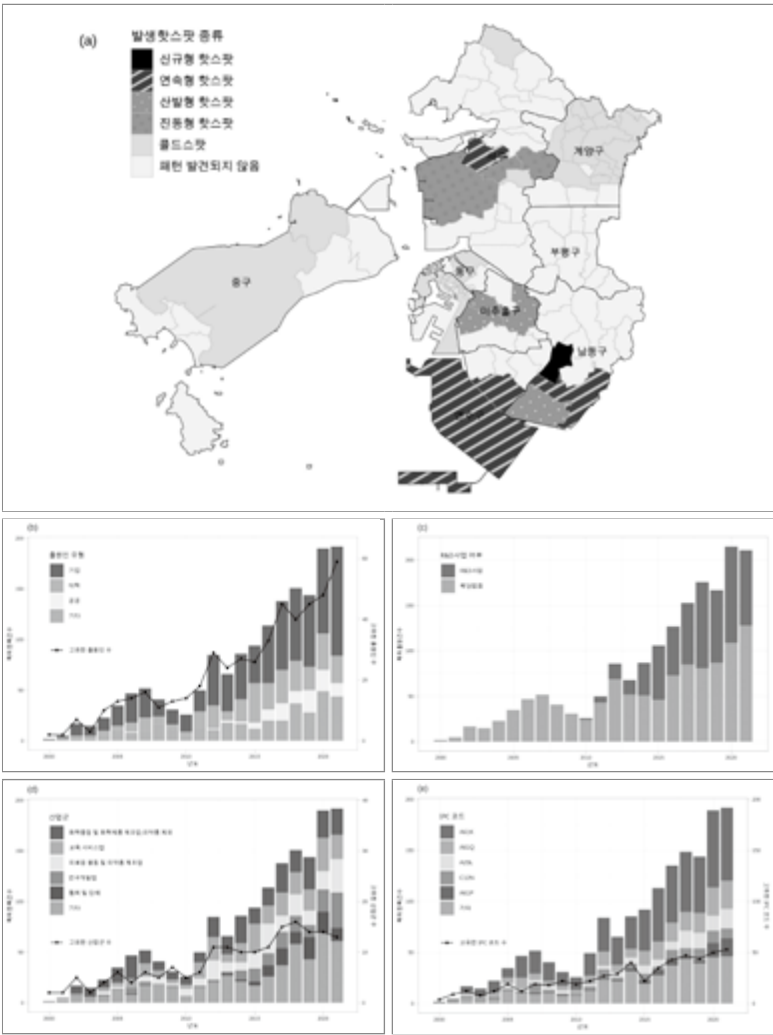
토픽별 시공간적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5]와 같다³⁾.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토픽 1(제약·화장품 혁신)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 일대와 서구 일부가 연속형 핫스팟으로 탐지되었으며, 미추홀구에서 산발형 핫스팟이, 화장품 업체들이 입지한 서구에서 진동형 핫스팟이 식별되었다([그림 2-(a)]). 남동구 일대에서 신규형 핫스팟이 식별되어 해당 산업 경로가 연수구를 넘어 지역 내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측면에서 기업과 대학, 공공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른 토픽에 비해 특히 2010년 이후 공공의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그림 2-(b)]). 정부 R&D 지원 비중도 201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해 정부 및 공공의 역할이 큰 부문으로 판단된다([그림 2-(c)]). 이는 산업군 구성에도 반영되어 교육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협회 및 단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C 코드의 경우 A61K (의약품,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A61Q (화장품 또는 유사 화장품 제제의 특정한 용도)이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5년 이후 A61B (진단; 수술; 개인 식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2-(d)]). 토픽 1은 산업군과 IPC 코드의 측면에서 상위 5개

3) 지면상의 문제로 강화군과 웅진군은 제외함. 두 개 군에서 핫스팟은 발견되지 않음.

범주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고유한 산업군 수와 IPC 수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이 높은 부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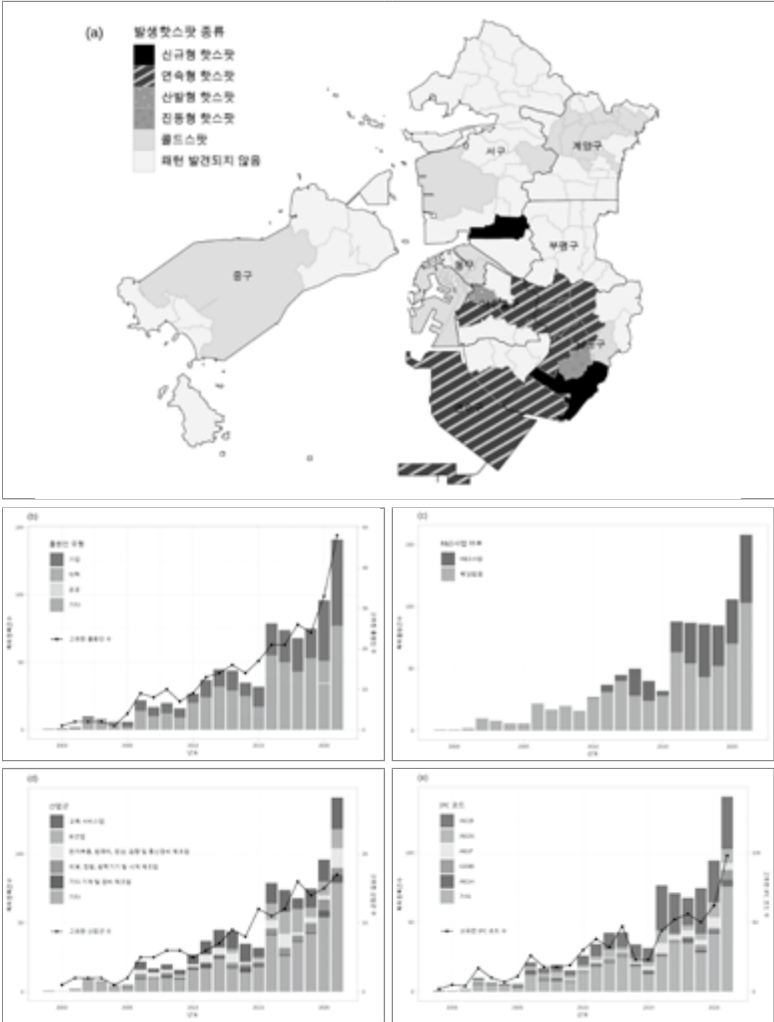
토픽 2(스마트 진단)는 토픽 1과 유사하게 연구구와 남동구 일부, 그리고 미추홀구에서 연속형 핫스팟이 탐지되었다(그림 3-(a)). 남동구의 2



[그림 2] 토픽 1(제약·화학품 혁신)의 시공간적 경로창출

개 동과 서구 1개 동이 신규형 핫스팟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이 두드러지며(그림 3-(b)), 토픽 1과 유사하게 R&D 지원 비중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c)). 행위자의 산업군 측면에서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상위를 차지해 대학뿐 아니라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더불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여러 제조업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d)). 상위 출원 IPC 코드는 A61B (진단; 수술; 개인 식별)인 한편(그림 3-(e)), 고유 산업군 수와 고유 IPC 코드 수 측면에서 개수가 꾸준히 증가해 다양한 산업군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기술적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저변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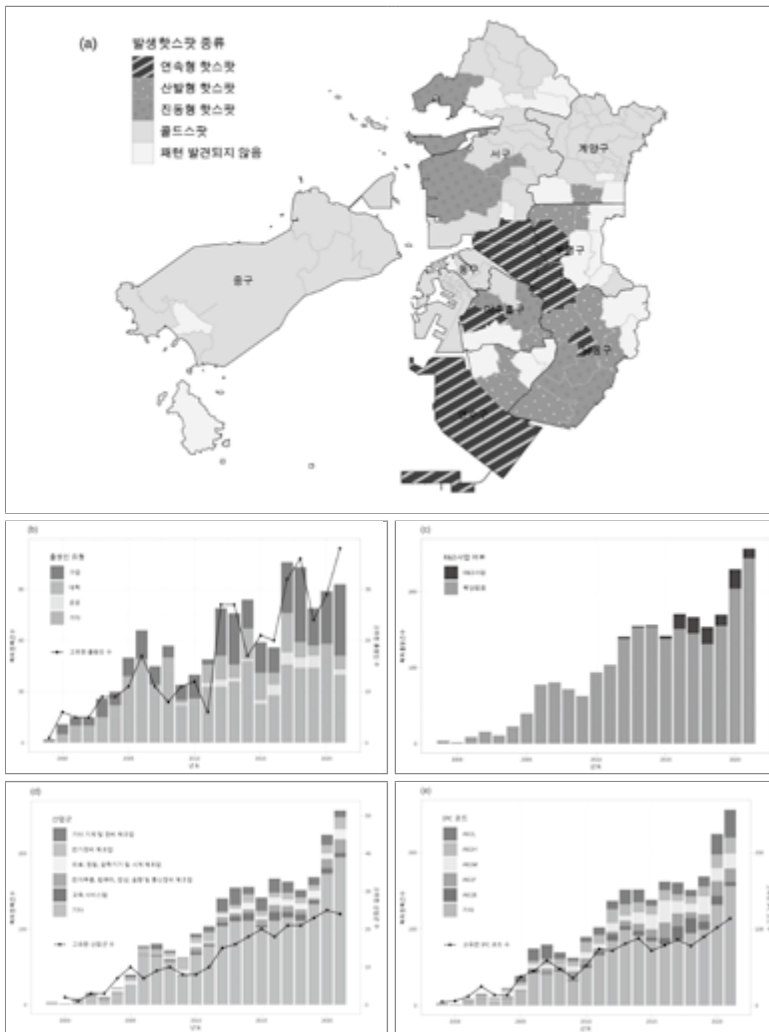
토픽 3(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은 연수구와 남동구뿐 아니라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등 넓은 범위에서 핫스팟이 발견되었다(그림 4-(a)). 구도심과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속형 핫스팟이 발견되며, 신규형 핫스팟은 식별되지 않았다. 기업과 기타 개인 출원인의 비중이 높으며(그림 4-(b)), R&D 지원 비중이 낮아 민간 부문의 역할이 주요한 경로로 나타났다(그림 4-(c)). 산업군 측면에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바이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군보다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일반 제조업 관련 업체들의 출원이 활발하며, 고유한 산업군 수가 네 개 토픽 중 가장 많아 다양성이 가장 높은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4-(d)). 기술적 측면에서 A61L (재료 또는 물건을 살균하기 위한 방법 또는 장치 일반)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5년 이후 A61M (흡인 또는 펌프 장치)의 비중이 증가했다(그림 4-(e)). 고유한 IPC 코드 수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토포 2(스마트 진단)의 시공간적 경로추출

마지막으로 토포 4(식음료 가공 기술)는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에서 연속형 핫스팟이 발견되었고,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지에서 산발형 및 진동형 핫스팟이 추출되었다. 토포 3과 유사하게 신규형 핫스팟은 발견되지 않아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행위자 측면에서 대학과 공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R&D 사업 지원이 201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군 측면에서 교육서비스업과 식품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비중이 성장해 식품품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제



[그림 4] 토크 3(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의 시공간적 경로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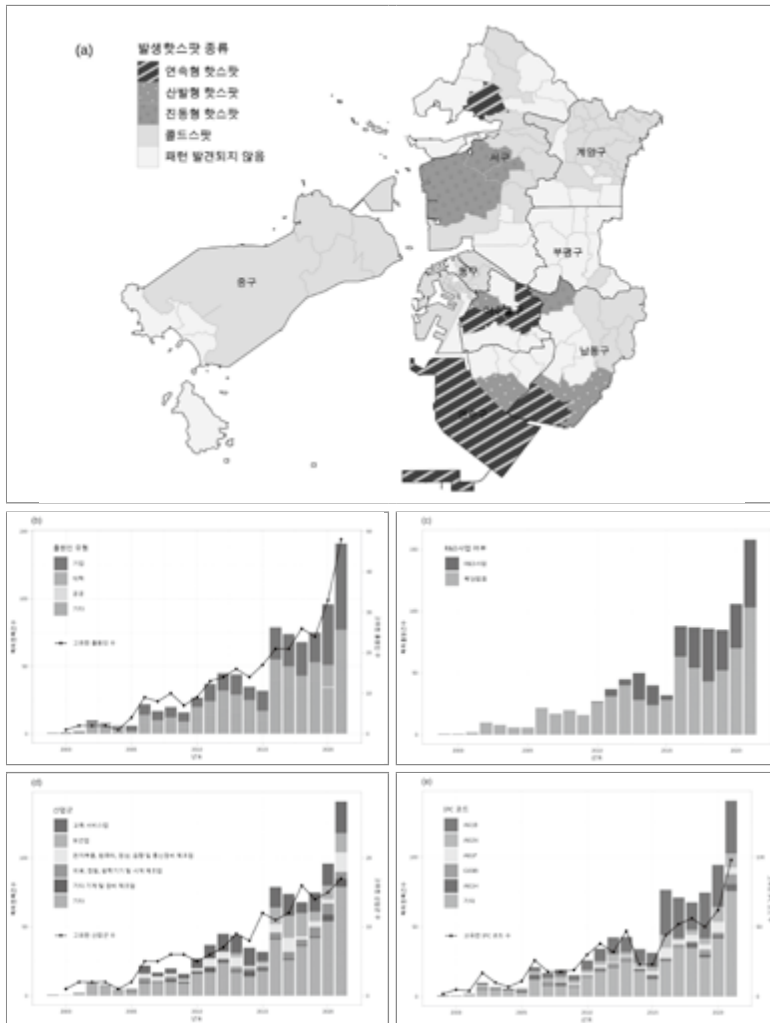
조하는 기술 관련 특허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IPC 코드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최근 A61K와 A61L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 탐색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로창출 메커니즘과 지역경제 발전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바이오 의약산업과 그 인접 산업 경로들이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내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네 개 토픽 모두에서 연속형 핫스팟이 발견되어 바이오산업 경로창출 및 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장품과 연관된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우 의약산업과 동일한 토픽으로 분류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으로 향후 정책적 방향 설정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남동구 등지의 화장품 기업들이 바이오의약산업 발전과 함께 활발하게 지식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기업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토픽 1 외 나머지 토픽들 또한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등 의약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상호협력적 경로 간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자 측면에서 삼성바이오 등 선도기업들의 출원이나 공동출원은 두드러지지 않고, 대학 및 공공의 출원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탐색 결과를 고려할 때, 선도기업의 입지 자체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도기업이 입지하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Jo and Yoon 2023),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대학, 병원, 공공 기관, 중소기업이 해당 경로에 참여함에 따라(김동관 2020)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대학과 병원, 공공 기관의 경우 기업에 비해 공동출원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술 전파와 경로 강화에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공간적 측면에서도 연수구뿐만 아니

라 남동구와 서구 등지에서 신규 핫스팟이 형성되는 등 지역을 포괄하는 경로 발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연관다양성의 측면에서 기존에 지역이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산업, 기계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과 관련된 기술 역량이 긍정적인 역



[그림 5] 토픽 4(식음료 가공 기술)의 시공간적 경로창출

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2000년대 초반 출원 활동이 매우 미미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경우, 지역 내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측정될 것이나, 바이오의약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암묵지적 역량이 외부 기업의 유입, 정부 지원 등과 결합해 경로창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터뷰, 추가 데이터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지역 내 새로운 산업 경로가 창출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토픽모델링과 발생 핫스팟 분석 등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지역에 대한 기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경로창출 과정과 경로 간 관계의 시공간적 특성, 주요 행위자 및 기술군 특성을 다각도에서 탐색할 수 있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제안했다.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을 사례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해당 프레임워크가 경로창출 메커니즘과 지역 경제에의 착근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 결과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 신규 경로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산업은 화장품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경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진단 기기 및 시스템, 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 식음료 가공 기술 등 전후방 연계 산업들이 상호협력적 경로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입지, 즉 외부 자본의 유입이 지역 내 새로운 경로 발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한편, 경로 발전 과정에서 대학, 병원, 그리고 정부의 투자와 같은 비기업 행위자들과

지역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공간적으로 모든 경로에 대해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에서 핫스팟이 발견되어, 해당 지역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연구 질문을 발굴하고 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경로창출의 메커니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로창출 관련 문헌에서 최근 관심받고 있는 경로 간 관계 혹은 다중경로적 접근법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제한한 탐색 프레임워크는 경로 간 관계 혹은 경로창출과 지역발전 관련 연구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 경로의 시공간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경로창출 메커니즘과 관련된 가설을 구체화하고 시공간적으로 중요한 행위자 및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국가 및 광역 단위에서의 모델링과 특정 로컬에서의 질적 연구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해당 방법론은 중시적 수준에서(meso-level) 이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호협력적 경로 간 관계의 예시로서 향후 포괄적인 경로창출 전략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연수구 및 남동구에 더해 미추홀구와 서구 등 병원, 대학 등 산업 자산을 보유한 지역 내 다른 지역을 어떻게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송도 중심의 클러스터 기반 집적경제와 지역경제의 균등한 발전 간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분석에서 중소기업의 지식 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사업의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이 지역 내 다른 기업이나 연구 기관과 지

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수요 및 공급을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R&D 정책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과 병원 등 비기업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들이 지역 내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해 포괄적인 경로창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자산이 축적되고 있는 바이오의약부문에서 비기업행위자가 상호보완적인 지식자산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정부 R&D 사업이 포괄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제안한 탐색 프레임워크로는 토픽 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더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예를 들어 네가지 이상의 토픽이 추출되는 경우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로 간 관계를 정량화하는 메트릭을 개발하거나 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행위자나 IPC 코드 측면에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을 공유하는 정도를 정량화해 경로 간 관계를 계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한 확장된 연구를 시행하고, 특히 데이터 외 기업거래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등 프레임워크를 여러 각도에서 평가해 범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사례연구에서 다루었던 연관 경로 외에 비연관 경로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경쟁적 경로 간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산업 탐색 방법론으로서 공동출원 네트워크를 고려해 지역 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거나, R&D 부문 외 가치사슬상 연계 등 공간적 분업 구조를 함께 탐색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병옥·구양미. 2023.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 변화: 2010년대 이후 조선업 불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6(2): 73-95.
- 김동관. 2020. 「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IDI 도시연구 17: 171-205.
- 김동관·유광민. 2021. 「송도 산업클러스터의 집적화 실태 분석 - 집중도, 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4(3): 199-230.
- 김선옥·양기덕. 2022. 「LDA와 BERTopic을 이용한 토픽모델링의 증강과 확장 기법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9(3): 99-132.
- 김예은·박종호. 2021. 「우리나라 시군구의 고위험 음주율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41(3): 7-22.
- 박경. 2019. 「경로(신산업) 창출(Path creation)의 신지역정책: 진화경제지리학의 성과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2): 214-245.
- 유광민·김동관. 2023. 「특허정보를 활용한 인천 전략산업 융합기술 분석」. 혁신클러스터연구 14(1): 90-117.
- 윤철원·이슬찬·문성현·전정환. 2024.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우주분야 기술 동향 분석-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40(1): 86-103.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22.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서봉만. 2017. 「인천시 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바이오산업」. 인천연구원.
- . 2019.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 및 운영 개선 방안」. 인천연구원.
- 이재열·장근용. 2020.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충청북도 솔라밸리 입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1): 157-175.
- 이현상·차오신·신선영·김규리·오세환. 2022. 「특허데이터 기반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분석: 특허지표 및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9(4): 43-66.
- 임연수. 202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쟁점 분석: 중요 관련 전국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1): 431-443.

허동숙·박소현·구양미. 2016. 「농촌지역 산업 기술지식의 융합과 지식 네트워크: 순창군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3): 566-582.

Blei, D. M., Ng, A. Y., and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edited by Lafferty J., 993-1022.

Boschma, R. and Capone, G. 2015. "Institutions and diversification: Related versus unrelated diversification in a varieties of capitalism framework." *Research Policy* 44(10): 1902-1914. (DOI:<https://doi.org/10.1016/j.respol.2015.06.013>)

Boschma, R. and Frenken, K. 2011. "Technological relatedness and regional branching." In *Beyond Territory: Dynamic geographies of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and innovation*, edited by H. Bathelt, M. P. Feldman and D. F. Kogler, 64-81. London: Routledge.

Boschma, R., Minondo, A., and Navarro, M. 2013.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t the Regional Level in Spain: A Proximity Approach Based on Product Relatedness." *Economic Geography* 89(1): 29-51. (DOI:<https://doi.org/10.1111/j.1944-8287.2012.01170.x>)

Breul, M. and Atienza, M. 2022. "Extractive industries and regional diversification: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diversification in mining regions."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1: 101125. (DOI:<https://doi.org/10.1016/j.exis.2022.101125>)

Breul, M., Hulke, C., and Kalvelage, L. 2021. "Path Formation and Reformation: Studying the Variegated Consequences of Path Cre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97(3): 213-234. (DOI:<https://doi.org/10.1080/00130095.2021.1922277>)

Dawley, S. 2014. "Creating new paths? Offshore wind, policy activism, and peripheral region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90(1): 91-112. (DOI:<https://doi.org/10.1111/ecge.12028>)

DiMaggio, P., Nag, M., and Blei, D. 2013. "Exploiting affinities between topic modeling and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culture: Application to newspaper coverage of US government arts funding." *Poetics* 41(6): 570-606. (DOI:<https://doi.org/10.1016/j.poetic.2013.08.004>)

- Doloreux, D. and Turkina, E. 2021. "New path creation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regional preconditions, new actors and their collective actions, and policies," *Regional Studies* 55(10-11): 1751-1763. (DOI:<https://doi.org/10.1080/00343404.2021.1919610>)
- ESRI. 2024. "How Emerging Hot Spot Analysis works".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space-time-pattern-mining/learnmoreemerging.htm> (검색일: 2024년 3월 1일)
- Frangenheim, A., Trippl, M., and Chlebna, C. 2020. "Beyond the Single Path View: Interpath Dynamics in Regional Contexts," *Economic Geography* 96(1): 31-51. (DOI:<https://doi.org/10.1080/00130095.2019.1685378>)
- Frenken, K., van Oort, F., and Verburg, T. 2007. "Related Variety, Unrelated Variet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Studies* 41(5): 685-697. (DOI:<https://doi.org/10.1080/00343400601120296>)
- Getis, A. and Ord, K.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189-206. (DOI:<https://doi.org/10.1111/j.1538-4632.1992.tb00261.x>)
- Grillitsch, M., Asheim, A., and Trippl, M. 2018. "Unrelated knowledge combinations: The unexplored potential for regional industrial path development,"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1(2): 257-274. (DOI:<https://doi.org/10.1093/cjres/rsy012>)
- Harris, J. L. and Sunley, P. 2023. "Multi-system dynamics in regional path upgrading: The intra- and inter-path dynamics of green industrial transitions in the Solent marine and maritime pathway," *Progress in Economic Geography* 1(2): 100005. (DOI:<https://doi.org/10.1016/j.peg.2023.100005>)
- Harris, N. L., Goldman, E., Gabris, C., Nordling, J., Minnemeyer, S., Ansari, S., Lippmann, M., Bennett, L., Raad, M., Hansen, M., and Potapov, P. 2017. "Using spatial statistics to identify emerging hot spots of forest loss,"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2(2). (DOI:<https://doi.org/10.1088/1748-9326/aa5a2f>)
- Hassink, R., Isaksen, A., and Trippl, M. 2019. "Towar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ew regional industrial path development."

- Regional Studies* 53(11): 1636-1645. (DOI:<https://doi.org/10.1080/00343404.2019.1566704>)
- He, C., Yan, Y., and Rigby, D. 2018. "Regional industrial evolution in China," *Papers in Regional Science* 97(2): 173-198. (DOI:<https://doi.org/10.1111/pirs.12246>)
- Huh, D. and Park, S. O. 2018. "Organizational routines and regional industrial paths: the IT service industry in the US National Capital Region," *Regional Studies* 52(6): 793-803. (DOI:<https://doi.org/10.1080/00343404.2017.1301661>)
- Isaksen, A. and Trippel, M. 2017. "Exogenously Led and Policy-Supported New Path Development in Peripheral Regions: Analytical and Synthetic Routes," *Economic Geography* 93(5): 436-457. (DOI:<https://doi.org/10.1080/00130095.2016.1154443>)
- Jo, K. and Yoon, S. 2023. "State Industrial Policy and Local Industrial Coalition: Evidence fr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Incheon, South Korea," *Korea Focus Working Paper* 19.
- Kendall, M. G. and Gibbons J. D. 1990. *Rank Correlation Methods*. London: Griffin,
- Mann, H. B. 1945. "Nonparametric tests against trend," *Econometrica* 13(3): 245-259. (DOI:<https://doi.org/10.2307/1907187>)
- Martin, R. and Sunley, P. 2006. "Path 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4): 395-437. (DOI:<https://doi.org/10.1093/jeg/lbl012>)
- Morckel, V. and Durst, N. 2023. "Using Emerging Hot Spot Analysis to Explore Spatiotemporal Patterns of Housing Vacancy in Ohio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Urban Affairs Review* 59(1): 309-328. (DOI:<https://doi.org/10.1177/10780874211065014>)
- Neffke, F., Henning, M., and Boschma, R. 2011. "How do regions diversify over time? Industry relatedness and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paths in regions," *Economic Geography* 87(3): 237-265. (DOI:<https://doi.org/10.1111/j.1944-8287.2011.01121.x>)
- Newman, D., Lau, J. H., Grieser K., and Baldwin, T. 2010. "Automatic Evaluation of Topic Coherence." In The 2010 Annual Conference of

-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00-108. Conference held in Los Angeles, California.
- Park, S. and Koo, Y. 2021. "Impact of proximity on knowledge network formation: the case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Area Development and Policy* 6(2): 181-199. (DOI:<https://doi.org/10.1080/23792949.2020.1797518>)
- Simone, A. 2023. "The sources of unrelated divers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lagging regions," *GeoJournal* 88(2): 2139-2152. (DOI:<https://doi.org/10.1007/s10708-022-10739-9>)
- Trippel, M., Grillitsch, M., and Isaksen, A. 2018. "Exogenous sources of regional industrial change: Attraction and absorption of non-local knowledge for new path 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5): 687-705. (DOI:<https://doi.org/10.1177/0309132517700982>)
- Tseng, Y. H., Lin, C. J., and Lin, Y. I. 2007. "Text mining techniques for patent analysi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3(5): 1216-1247. (DOI:<https://doi.org/10.1016/j.ipm.2006.11.011>)
- Vallance, P. 2016.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and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92(4): 355-377. (DOI:<https://doi.org/10.1080/00130095.2016.1146076>)

국 문 초 록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시공간적 특성 탐색 방법론: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을 사례로

박소현(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조교수)
윤정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학사과정)
김민수(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학사과정)
구양미(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진화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산업 경로창출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 발생 핫스팟 분석 등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루어져 특정 경로가 지역 경제에 착근하는 시공간적 과정을 탐색하고, 경로창출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인천 바이오의약산업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제약·화장품 혁신, 스마트 진단, 의료기기 및 살균 솔루션, 식음료 가공 기술 총 네 개의 경로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바이오의약산업의 전후방연계산업으로서 상호협력적인 경로 간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학, 병원, 정부 투자 등 비기업 행위자가 중요했음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연수구, 남동구는 물론 미추홀구와 서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 내 선도기업이 지역 내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비연관 경로를 포함하여 경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경로창출, 경로 간 관계, 토픽모델링, 발생 핫스팟 분석,
바이오의약산업

Abstract

Exploring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path creation:

A case study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Incheon

Park, Sohyun (Assistant Professor,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s,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Youn, Jungwon (Undergraduate student,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s,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Kim, Minsoo (Undergraduate student,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s,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Koo, Yangmi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roduced an analytical framework designed to examine path cre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The framework incorporate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cluding topic modeling with patent data and emerging hotspot analysis, to explore the spatiotemporal process of how specific paths are embedded in the local economy and to develop hypotheses related to the mechanisms of path creation. Applied to the pharmaceutical sector in Incheon,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emerging paths: pharmaceutical and cosmetic innovation, smart diagnostics, medical devices and sterilization solutions, and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technologies. These pathways have evolved into interconnected industries within the broader biopharmaceutical sector, facilitated by cooperative inter-path relationships. Non-firm actors, such as universities, hospitals, and

government investments,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is dynamic. The result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at encompass Yeonsu-gu and Namdong-gu, as well as Michuhol-gu and Seo-gu, and suggest that major firms in the region should collaborate more closely with local stakeholders to foster a comprehensive industrial ecosystem. Further development of this framework is required to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paths, including unrelated paths and competitive inter-path relations.

Key words: path creation, inter-path relations, topic modeling, emerging hotspot analysis, pharmaceutical industry

Bike-Sharing as Entertainment: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

Kihyun Kwon*

Kihyun Kwon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ata and Methods

1. Data and Variables
2. Model Specification: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IV. Results and Discussion

1. Descriptive Statistics
2.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Result

V. Conclusions

I. Introduction

Bike-sharing, including the behavior of riding a bicycle,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because

.....
* Assistant Professor, Urban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khkwon@inu.ac.kr, Tel: 032-835-8781)

<http://doi.org/10.34165/urbanr.2024..25.343>

of its flexibility, convenience, and low cost (Akar and Clifton 2009; Ma et al. 2020). For instance, bike-sharing helps individuals significantly shorten the travel time to reach their destinations compared to walking and eliminates several inconveniences of private bicycles, such as the fear of theft or vandalism and the search for parking space (Fishman et al. 2014; Kim and Cho 2021). Since bike-sharing also has expected to help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raffic congestion, and energy consump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bike-sharing (Gebhart and Noland 2014; Bullock et al. 2017; Duran-Rodas et al. 2019; Ma et al. 2020; Chen et al. 2022; Manout et al. 2023).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bike-sharing as a resilient mode of transportation against a health crisi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VID-19 pandemic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dividuals' travel behavior, especially decreases in urban mobility due to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stay-at-home orders, social distancing, and other efforts to avoid the virus spreading (Bergantino et al. 2021; Hu et al. 2021; Hua et al. 2021; Jiao et al. 2022; Teixeira et al. 2022; Sass et al. 2023). Under this severe pandemic situation, individual's lifestyles and modes of transport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changed (Bustamante et al. 2022; Jiao et al. 2022; Manout et al. 2023). For example, since social-distanc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t could be a barrier to the use of public transit, such as buses and the subway, where many people are in one crowded space. The interventions due to

a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could be motivators or barriers to the use of bike-sharing in different ways as compared to those before. Therefore,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is health crisis on bike share trips across the country is essential for reinforc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 recent years, many empirical studies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links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bike-sharing. However, the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ke-sharing may be mixed and inconclusive. For instance, some studies find substantially increased bike-sharing trips during the pandemic (Bergantino et al. 2021; Bustamante et al. 2022; Kwon and Akar 2023), while others observe decreased number and duration of bike-sharing trips (Hua et al. 2021; Shang et al. 2021; Teixeira et al. 2022). Some others find no significant effect exists (Nikiforiadis et al. 2020) or differs based on the phases of the lockdown (Büchel et al. 2022). Within this conside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VID-19 lockdown on bike share trips in nine large cities in the U.S. The data of bike-sharing trips in these cities are obtained from its bike share operators' official websites. We first examine the patterns of bike share trips between 2019 and 2020 by assessing descriptive statistics. We then employ a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on the pooled data to examine the impact of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 on bike share trip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next section reviews the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bike share trips, and the links between bike-sharing and the COVID-19 pandemic. In Section 3, we

present our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on bike share trips. We also discuss our analysis methods in Section 3. Section 4 presents model estimations and interpretations. We conclude with important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Section 5.

II. Literature Review

Bike-sharing has been considered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traffic congestion,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cost savings, and support for multimodal travel behavior (Fishman et al. 2014; Martin and Shaheen 2014; Bullock et al. 2017; Sun et al. 2018; Bergantino et al. 2021). Therefore,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motivators and barriers to promoting bike-sharing usage and primarily focused on bike share facilities such as stations, capacity, and bike lanes (Fishman et al. 2014; Noland et al. 2016; El-Assi et al. 2017; Wang and Akar 2019; Chen et al. 2022). For instance, Fishman et al. (2014) find the inconvenience of bike-sharing facilities to be a crucial barrier to bike-share membership. El-Assi et al. (2017)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oronto's bike-share ridership, and observe the significant effect of bike infrastructure, such as bike lanes and paths, on bike-sharing demand.

Many variations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demand for bike sharing. Some studies emphasize weather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Gebhart

and Noland 2014; Caulfield et al. 2017; Sun et al. 2018; Hu et al. 2021). For instance, Gebhart and Noland (2014) argue that bike-share usage can be affected by colder weather, precipitation, and excessive heat. Caulfield et al. (2017) observe longer bike-sharing trips during better weather conditions. Others focus on periodic and non-periodic factors such as seasons, the day of the week, and holidays (Noland et al. 2016; Chibwe et al. 2021; Radzimski and Dzięcielski 2021; Shang et al. 2021). For example, Chibwe et al. (2021) observe higher bike-share ridership on weekdays than weekends, particularly in the morning and evening peak hours. Some others connect bike-sharing to other public transport systems such as bus and subway (Noland et al. 2016; Campbell and Brakewood 2017; Sun et al. 2018; Kwon and Akar 2023).

The built enviro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ravel patterns, so several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t environments and bike-sharing (Kim and Cho 2021; Shaer et al. 2021; Bustamante et al. 2022; Jiao et al. 2022). They have shown that attributes of the built environment attributes, such as mixed, diverse, dense, and accessi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 bike share trips. For instance, Kim and Cho (2021)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bike share trips at the station-level and find that land use compositions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bike-sharing ridership. Shaer et al. (2021)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bike-sharing, and their results demonstrate factors influencing bike share trips such as diversity, density, accessibility, street patterns, and walkability.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sudden change in individuals' daily travel, which brought the need for a complete rethinking of public transport systems (Shaer et al. 2021; Vo et al. 2023). Since public transport systems such as buses and subways tend to contain many people in one crowded and shared space, avoiding virus spread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n, many empirical studies on bike-sharing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connection with the COVID-19 pandemic [For instance, Bergantino et al. (2021), Chibwe et al. (2021), Hu et al. (2021), Hua et al. (2021), Shaer et al. (2021), Shang et al. (2021), Bustamante et al. (2022), Jiao et al. (2022), Teixeira et al. (2022), Manout et al. (2023)]. They have addressed bike-sharing systems as an opportunity to be a resilient and reliable option with a small risk of contagion.

The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ke-sharing may be mixed and inconclusive because existing studies have shown either negative, positive or no correlation. For instance, using data from an online survey in Italy, Bergantino et al. (2021) examine the difference in bike-share user's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ir empirical models show that people are more likely to use bike-sharing after the COVID-19 lockdown. Bustamante et al. (2022) observe increased bike-sharing trips during COVID-19 as compared to those in previous years. On the other hand, Hua et al. (2021) examine bike-sharing demand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using trip data in Nanjing, China. They find that bike-sharing trips substantially decreased by 72-82

perc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Nikiforiadis et al. (2020) observe that COVID-19 does not affect bike-sharing trips through a survey in Thessaloniki, Greec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ke share trip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as follow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one city or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bike share trips in nine large cities in the U.S. to generalize the impact of COVID-19 on bike-sharing. Second, this study uses monthly trip data to examine bike share trip patterns between 2019 and 2020. Rather than capturing the changes caused by COVID-19 over a specific short perio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atterns of bike-sharing trips chang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ird, this study utilizes micro-level data to account for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s. The use of smaller geographic units is more likely to reflect how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ffect bike share trips. Lastly, this study focuses on round-trip bike share trips as a significant characteristic represented during the COVID-19. This can lead to a new perspective on the use of bike-sharing.

III. Data and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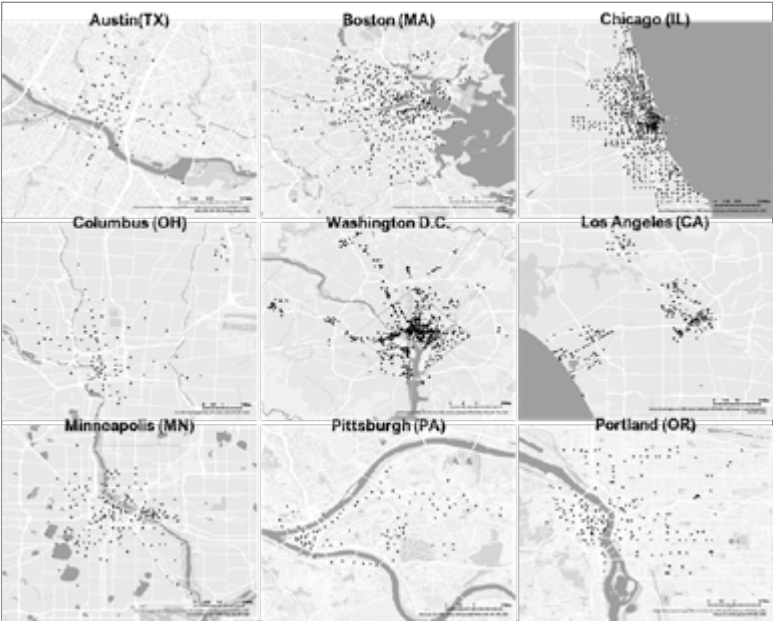
This study analyzes nine large cities in the U.S. There are two criteria for choosing these cities. First, this study selects several

cities with different commute mode share. We assume that the patterns of bike-sharing trips vary based on cities' mode sha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ommute mode share from the 2014-2018 American Census Survey (ACS), there are seventeen cit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the highest transit-share cities, car-dominant cities, and highest bike-share cities. Second, this study selects cities with bike-sharing services and public trip data available. As a result, nine cities were selected, and they have different modes and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Washington D.C. (34%), Boston (32 %) and Chicago (28%) are classified as the highest transit share cities. Columbus (78%) and Austin (75%) are car-dependent, while Portland (5%) is bike-friendly.

The bike-sharing trip data in selected nine cities are obtained from its bike-sharing operators' official websites (Austin - Metro Bike 2021; Boston - Blue Bike 2021; Chicago - Divvy 2021; Columbus - COGO 2021; Washington D.C. - Capital Bikeshare 2021; Los Angeles - Metro Bike Share 2021; Minneapolis - Nice Ride 2021; Pittsburgh - Health Ride 2021; Portland - Bike Town 2021) with temporal and spatial information of origin and destinations by stations. Figure 1 shows selected nine cities and bike-sharing operators. Figure 2 shows bike-sharing stations in nine cities.



[Figure 1] Study areas and Bike-share operators



[Figure 2] Bike-share stations

Most datasets provide date, starting time, starting station ID, ending time, ending station ID, and station latitude and longitude. We calculated travel durations and removed the trips less than 1 minute and missing stations for cleaning the data. We differentiated

trips with the same origin and destination (OD) from those with different OD using the origin and destination IDs. In this study, we define the same OD trip as a “round-trip bike share trip.”

1. Data and Variable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VID-19 lockdown on bike share trips, we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se round-trip bike share trips. We utilize bike-sharing trip data for the periods before (May through August 2019) and after (May through August 2020) the lockdown to capture the impact of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on round-trip bike share trips. This is because not on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is period, but also there were missing months in several cities.

Table 1 shows the definition and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of our sample. A bike-sharing station is the unit of analysis in this study. This gives us a sample size of 4,854 bike-sharing stations in nine cities. In this study, a touring bike share trip i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touring trips over the total number of bike share trips at each station during the period (from May through August). Based on our data, average touring bike share trips are about 13 percent of the total bike share trips.

Built environment mainly includes density, diversity, design, distance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destination accessibility (often referred to as the 5Ds; Ewing and Cervero 2001; Ewing

and Cervero 2010; Cheng et al. 2019). As shown in Table 1, we include land use mix (diversity), housing density (density), street connectivity (design), transit station, and access to amenities such as grocery stores, recreation facilities, restaurants, and green space. To define the neighborhood boundary, we utilize the concept of a 15-minutes city. Several studies argue that a 15-minutes city is an ideal neighborhood where most human needs and desires are located within a distance of 15 minutes (Weng et al. 2019; Duany and Steuteville 2021). The radius of a 15-minutes neighborhood is defined as three quarters of a mile by walking. Therefore, this study measures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 variables within a $\frac{3}{4}$ mile Euclidean buffer around a bike-sharing station, which may influence touring bike share trips.

[Table 1] Defini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Mean/Percentage
Share of touring trips	Total number of touring bike trips over total number of bike trips	13.0%
Land use mix	Land use mix variable is measured with an entropy measure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0.4263 (0.1704)
Housing density	Total number of housing units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7733.5 (5461.8)
Street connectivity	Total number of intersection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2960.3 (1882.6)
Green(open) space	Proportion of green(open) space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0.1048 (0.1158)
Transit station	Total number of transit stations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80.2 (43.9)
Retail stores	Total number of retail stores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175.8 (273.8)

Variable	Definition	Mean/Percentage
Recreational facilities	Total number of recreation facilities within ¾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20.6 (24.8)
Restaurants	Total number of restaurants within ¾ mile radius around bike station	134.3 (170.7)
Year 2020	Dummy variable (1 if 2020 year, 0 if 2019 year)	50.0%
Number of observations	Total number of bike-share stations in nine cities	4,854

Note: For continuous variables, we report the mean values. Standard deviation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For the land-use mix variable, we use the land use data from each city’s zoning data. Since the original data include different numbers of categories of land use, we reclassify land use types into nine broader categories, e.g., Residential, Commercial, Institu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Mixed Use, Open Space, Agriculture, and Miscellaneous. Land use mix variable is measured with an entropy measure given by:

$$LUM = - \sum_{j=1}^J \frac{P_j \cdot \ln(P_j)}{\ln(J)}$$

where P_j is the proportion of the neighborhood covered by land use j ; and J is the number of land-use categories of interest (Mavoa et al. 2018). A land use mix score of 1 indicates the highest mix possible and is considered “most walkable” (Mavoa et al. 2018).

We use OpenStreetMap (OSM) road segments data to measure road intersections in ArcGIS. The number of intersections where two or more roads meet is calculated within ¾ mile buffer around each bike-share station as the street connectivity variable. We calculate

the number of transit stations within $\frac{3}{4}$ mile buffer around each bike-station using General Transit Feed Specification (GTFS) from nine cities. The data for access to amenities such as grocery stores, recreation facilities and restaurants are retrieved from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database as points.

2. Model Specification: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The geographical patterns of bike-sharing trips seen in nine cities are not captured by the (fixed-effects) regression model, which assumes that the same intercept and slopes characterize all nine cities in this analysis. One way to model different trip patterns in different cities and reduce spatially correlated errors is to allow each of the nine cities to have its random intercept (Goldstein 1986; Goulias 2002).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multilevel modelling, which allows parameters to vary at several levels in hierarchical data structures (e.g., bike share stations nested in cities). By using multilevel models,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relative impacts of the various levels in a hierarchy (Ellder 2014; Park and Akar 2019).

We use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as our dependent variable. This is because it is better to estimate the vari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as compared to using a variable in the form of subtracting the 2019 round-trip bike share trips from the 2020 trips. The multilevel model used in this study has two residuals, one for bike share stations and one for cities

(both assumed to follow normal distributions). The model is often referred to as a random intercept model, as the intercept of city regression lines varies randomly across cities (Goulias 2002). A two-level regression model with dependent variable with one explanatory variable can be written as:

$$Y_{ij} = \beta_{0ij} + \beta_{1ij}X_{ij} + \epsilon_{ij}$$

Y_{ij} is the dependent variable reported by a bike share station i within a city j (with $i = 1, 2, \dots$, number of bike share stations in city j , $j = 1, 2, \dots$, number of cities in our sample). The variable X is a bike share station variables associated with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s. The error term ϵ_{ij} is the usual regression error term. The coefficient β_{0ij} has a mean γ_0 and the variation around this mean among cities is described by the random variable u_{0j} with $E(u_{0j}) = 0$ and $\text{var}(u_{0j}) = \alpha_{u_0}^2$ written as:

$$\beta_{0ij} = \gamma_0 + u_{0j}$$

The coefficient β_{1ij} can also be assumed as random, which has a mean γ_1 and the variation among cities is depicted by a random variable u_{1j} with $E(u_{1j}) = 0$ and $\text{var}(u_{1j}) = \alpha_{u_1}^2$ written as:

$$\beta_{1ij} = \gamma_1 + u_{1j}$$

We estimate a two-level mixed-effect regression model with random effects applied to intercepts and coefficients at the bike share station level.

IV. Results and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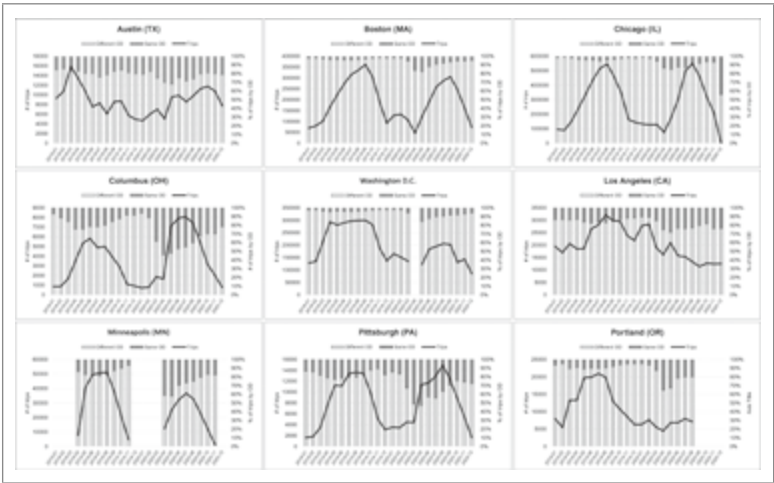
1. Descriptive Statistics

Figure 3 shows the monthly number of bike-sharing trips (January 2019 through December 2020) and the percentage of their trips by origin-destination (OD). Since we use different data sources depending on the cities, there are missing months in Washington D.C. (April 2020), in Portland (September through December 2020), and the missing season in Minneapolis (December through March).

As can be seen in Figure 3, we observe the seasonal trends of bike-share trips in most cities, which means increases in summer and decreases in winter. This is consistent with many studies on bike-sharing that weather condi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bike-sharing trips (Noland et al, 2016; Chibwe et al, 2021; Hu et al 2021; Hua et al, 2021; Radzimski and Dzięcielski 2021; Shang et al, 2021).

By late February, COVID-19 became increasingly apparent in parts of the U.S. and, soon after, throughout the state. Governors have issued lockdown orders, i.e., stay-at-home orders, across all but eight states from mid-March to mid-April 2020 (Bergantino et al, 2021; Hu et al, 2021; Jia et al, 2022). We observe that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on bike-sharing trips is shown in Figure 3. There were decreases in bike share trips in most cities during this period a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the number of bike-sharing trips from May to August significantly changes between 2019 and 2020. On the other hand, we also find increased

bike share trip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Columbus, Ohio.



[Figure 3] The monthly total number of bike-sharing trips and percentage of its trips by Origin-Destination

We differentiated trips with the same origin and destination (OD) from those with different OD using the origin and destination IDs. We observe the common pattern in percentage changes of bike share trips by origin-destination. As shown in Figure 2, there were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i.e., same origin-destination trips in all cities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We focus on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We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able 2 presents the proportions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from May through August. In all nine cities, round-trip bike share trips after the COVID-19 lockdown increased as compared to those before.

In particular,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share of the round-trip bike share trips in Columbus (38.5%) and Pittsburgh (32.6%)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In study areas, the average proportion of round-trips was 9.1 percen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but it increased by 16.9 percent after.

For instance, Washington D.C. (34%), Boston (32 %) and Chicago (28%) are classified as the highest transit share cities. Columbus (78%) and Austin (75%) are car-dependent, while Portland (5%) is bike-friendly.

[Table 2] Proportions of round-trips before and during the lockdown

City	Category	Proportions of round-trips before	Proportions of round-trips after	Difference (after - before)
Austin, TX	car-dominant city	19.3	24.5	5.2
Boston, MA	high transit share city	6.6	13.9	7.3
Chicago, IL	high transit share city	5.6	12.4	6.8
Columbus, OH	car-dominant city	19.7	38.5	18.8
Los Angeles, CA	car-dominant city	14.1	20.7	6.6
Minneapolis, MN	bike-friendly city	14.0	20.8	6.8
Pittsburgh, PA	car-dominant city	16.8	32.6	15.8
Portland, OR	bike-friendly city	7.2	15.7	8.5
Washington D.C.	high transit share city	6.1	13.7	7.6
Total		9.1	16.9	7.8

2.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Result

We built a two-level model because the data set contains information about bike-share stations nested within the cities, and

Table 3 presents the model results.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indicates how much of the total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is accounted for by cities. The model results demonstrate that 31.4 percent of the variability in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was accounted for by the bike-share stations' cities, indic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explain different variations in round-trip bike-sharing trips.

[Table 3] Model results

Variable	β	Std. Err.	z
Land use mix	0.225	0.381	2.59***
Ln (Housing density)	0.293	0.071	4.13***
Ln (Street connectivity)	0.217	0.104	2.08**
Green(open) space	0.012	0.004	3.05***
Transit station	0.011	0.002	6.61***
Retail stores	-0.000	0.000	-2.45**
Recreational facilities	0.000	0.000	2.40**
Restaurants	-0.000	0.000	-3.19***
Year 2020	0.303	0.075	4.05***
Constant	-2.896	0.899	-3.22
City (random intercept)	1.507	0.823	
Wald Chi2	159.93***		
Log Likelihood	-2221.2394		
Observations (bike-share station)	4,854		
Number of observations (city)	9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0.314		

Note: *p<0.10, **p<0.05, ***p<0.01.

The model explain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 share trips. All variables reveal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round-trip bike share trips. For instance, bike share trips made at high land use mix, housing density and street connectivity neighborhoods are more likely to be round-trip bike share trips. Our mode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which have shown that trips made in areas with high density and a road network are more likely to be substitutive trips (El-Assi et al, 2017; Bergantino et al, 2021; Chibwe et al, 2021).

Many empirical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ike share trips and public transit, but the findings are inconclusive. It may either complement, substitute or be independent of public transit (Campbell and Brakewood 2017; Ma et al, 2019). In this study, we also include total number of transit stations within $\frac{3}{4}$ mile radius around each bike-sharing station to examine the effect on round-trip bike share trips. The result shows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numbers of transit stations and round-trip bike share trips. For instance, increases in transit stations near the bike-sharing stations are more likely to lead to round-trip bike share trips. It may imply a substitute or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it and bike-share trips.

We also include several variables indicating access to amenities such as grocery stores, recreation facilities and restaurants. The results show that trips made in areas with many retail stores and restaurants are less likely to be round-trip bike share trips, which is consistent with several studies on bike-sharing in commercial areas to improve a first-mile/last-mile (FMLM) (Fishman et al,

2014; El-Assi et al. 2017; Kwon and Akar 2023). On the other hand, trips made in areas with high proportion green (open) space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round-trip bike share trips. This means round-trip bike share trips may have entertainment attributes such as leisure or exercise instead of commuting.

Since we use pooled data (2019 and 2020), we include a year dummy to account for time effect. We assume that this dummy variable also captures the effect of the COVID-19 lockdowns on bike share trips. Our empirical model result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ound-trip bike share trips. For example,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sharing trips increased 35.4 perc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V. Conclusions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ke-sharing trips in nine cities in the U.S. such as Washington D.C., Austin (TX), Boston (MA), Chicago (IL), Columbus (OH), Los Angeles (CA), Minneapolis (MN), Pittsburgh (PA), Portland (OR). Using Bike Share trip data in nine cities from its operators' official website, we examined the patterns of bike share trips between 2019 and 2020 by asses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number of trips and round-trip bike share trips. We then employ a multilevel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on

the pooled data to examine the effects of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s on round-trip bike share trips.

The descriptive analyses show that bike share trips decreased in most citi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s a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the number of bike-sharing trips from May to August significantly changes between 2019 and 2020.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COVID-19, bike-sharing trips increased only in Columbus, Ohio. This means that the COVID-19 outbreak generally has the effect of reducing bike-sharing trips, but they do not in all cities. Although these results do not consider the cities' weather condition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y may indicate that bike-sharing in Columbus was used as a resilient transportation mode during the COVID-19. In addition, we observe that round-trip bike share trips, i.e., same origin-destination trip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ncreased in all cities. In particular,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share of the round-trip bike share trips in Columbus (38.5%) and Pittsburgh (32.6%)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round-trip bike share trips, we utilize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 attributes that include land use mix, housing density, street connectivity, transit station, and access to amenities such as such as grocery stores, recreation facilities, restaurants, and green space. Key findings from our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ike share trips made at high land use mix, housing density and street connectivity neighborhoods are more likely to be round-trip bike share trips.

Second, trips made in areas with high proportion green (open) space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round-trip bike share trips. This means round-trip bike share trips may have entertainment attributes such as leisure or exercise instead of commuting. Lastly, the proportion of round-trip bike-sharing trips increased 35.4 perc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outbreak of this COVID-19 pandemic had led to a sudden change in individuals' daily travel (Bustamante et al. 2022; Jiao et al. 2022). This brings the need for a rethinking of public transport systems,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se changes may affect individuals' public transit use in the long ter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planners and policymakers understand that public bike-sharing can be useful as a means of entertainment such as leisure or exercise as well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limitation, we rely on trip-level data from its operators' official website, which does not include users' details such as socio-demographic and attitudinal inform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etc. ma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bike share trips. Therefore, future research could use trip data inclu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achieve better understanding of factors influencing bike share trips. Nonetheles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atterns of bike share trips in the U.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lockdowns and social distancing.

참 고 문 헌

- Akar, Gulsah., Clifton, Kelly J. 2009. "Influence of individual perceptions and bicycle infrastructure on decision to bike,"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140(1): 165-172
- Bergantino, Angela Stefania., Intini, Mario., Tangari, Luca. 2021. "Influencing factors for potential bike-sharing users: An empirical analys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86: 101028
- Büchel, Beda., Marra, Alessio Daniele., Corman, Francesco. 2022. "COVID-19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cycling: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Transport policy* 116: 144-156
- Bullock, Craig., Brereton, Finbarr., Bailey, Sive. 2017.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public bike-share to the sustainability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cities,"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28: 76-87
- Bustamante, Xavier., Federo, Ryan., Fernández-i-Marín, Xavier. 2022. "Riding the wave: Predicting the use of the bike-sharing system in Barcelona before and during COVID-19,"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83: 103929
- Campbell, Kayleigh B., Brakewood, Candace. 2017. "Sharing riders: How bikesharing impacts bus ridership in New York Ci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00: 264-282
- Caulfield, Brian., O'Mahony, Margaret., Brazil, William., Weldon, Peter. 2017. "Examining usage patterns of a bike-sharing scheme in a medium sized ci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00: 152-161
- Chibwe, Joseph., Heydari, Shahram., Imani, Ahmadreza Faghih., Scurtu, Aneta. 2021.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trend in the demand for the London bike-sharing system: From London Olympics to Covid-19 pandemic,"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69: 102871.
- Chen, Wendong., Chen, Xuewu., Chen, Jingxu., Cheng, Long. 2022. "What factors influence ridership of station-based bike sharing and free-floating bike sharing at rail transit s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16,4: 357-373
- Cheng, Long., Vos, Jonas De., Shi, Kunbo., Yang, Min., Chen, Xuewu., Witlox, Frank. 2019. "Do residential location effects on travel behavior differ between the elderly and younger adult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73: 367-380
- Duran-Rodas, David., Chaniotakis, Emmanouil., Antoniou, Constantinos. 2019. "Built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bike sharing ridership: data-driven approach for multiple cit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73,12: 55-68
- El-Assi, Wafic., Mahmoud, Mohamed Salah., Habib, Khandker Nurul. 2017. "Effects of built environment and weather on bike sharing demand: a station level analysis of commercial bike sharing in Toronto." *Transportation* 44: 589-613
- Ellder, Erik. 2014. "Commuting choices and residential built environments in Sweden, 1990-2010: a multilevel analysis." *Urban Geography* 35,5: 715-734
- Ewing, Reid., Cervero, Robert. 2001. "Travel and the built environment: a synthesi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780,1: 87-114
- Ewing, Reid., Cervero, Robert. 2010. "Travel and the built environ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6,3: 265-294.
- Fishman, Elliot., Washington, Simon., Haworth, Narelle., Mazzei, Armando. 2014. "Barriers to bikesharing: an analysis from Melbourne and Brisbane."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41: 325-337
- Gebhart, Kyle., Noland, Robert B. 2014. "The impact of weather conditions on bikeshare trips in Washington, DC." *Transportation* 41: 1205-1225
- Goldstein, Harvey. 1986. "Multilevel mixed linear model analysis using iterative generalized least squares." *Biometrika* 73,1: 43-56
- Goulias, Konstantinos G. 2002. "Multilevel analysis of daily time use and time allocation to activity types accounting for complex covariance structures using correlated random effects." *Transportation* 29: 31-48
- Hu, Songhua., Xiong, Chenfeng., Liu, Zhangin., Zhang, Lei. 2021. "Examining spatiotemporal changing patterns of bike-sharing

- usage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91: 102997
- Hua, Mingzhuang., Chen, Xuewu., Cheng, Long., Chen, Jingxu. 2021. "Should bike-sharing continue operat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mpirical findings from Nanjing, China."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23: 101264
- Jiao, Junfeng., Lee, Hye Kyung., Choi, Seung Jun. 2022. "Impacts of COVID-19 on bike-sharing usages in Seoul, South Korea." *Cities* 130: 103849
- Kim, Minjun., Cho, Gi-Hyoug. 2021. "Analysis on bike-share ridership for origin-destination pairs: Effects of public transit route characteristics and land-use pattern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93: 103047
- Kwon, Kihyun., Akar, Gulsah. 2023. "What determines modal substitution between bike-sharing and public transit? Evidence from Columbus, Ohi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17.10: 1087-1096
- Ma, Xinwei., Yuan, Yufei., Oort, Niels Van., Hoogendoorn, Serge. 2020. "Bike-sharing systems' impact on modal shift: A case study in Delft, the Netherland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59: 120846
- Manout, Ouassim., Bouzouina, Louafi., Kourtiti, Karima., Nijkamp, Peter. 2023. "On the bumpy road to recovery: resilience of public transport ridership during COVID-19 in 15 European cities." *Letters in Spatial and Resource Sciences* 16.1: 14
- Martin, Elliot W., Shaheen, Susan A. 2014. "Evaluating public transit modal shift dynamics in response to bikesharing: a tale of two US citi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41: 315-324.
- Nikiforiadis, Andreas., Ayfantopoulou, Georgia., Stamelou, Afroditi. 2020. "Assessing the impact of COVID-19 on bike-sharing usage: The case of Thessaloniki, Greece." *Sustainability* 12.19: 8215
- Noland, Robert B., Smart, Michael J., Guo, Ziyue. 2016. "Bikeshare trip generation in New York ci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94: 164-181

- Park, Yujin., Akar, Gulsah. 2019. "Why do bicyclists take detours? A multilevel regression model using smartphone GPS dat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74): 191-200
- Radzimski, Adam., Dzięcielski, Michał. 202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ke-sharing and public transport in Poznań, Poland,"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45: 189-202
- Sass, Karina Simone., Maciel, Raquel Ferreira., Dentinho, Tomaz Ponce. 2023.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employment, and population of the Azores islands," *Letters in Spatial and Resource Sciences* 16,1: 42
- Shaer, Amin., Rezaei, Meysam., Rahimi, Behnam Moghani., Shaer, Fatemeh. 2021. "Examining th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built environment and active travel,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 Shiraz city, Iran," *Cities* 115: 103255
- Shang, Wen-Long., Chen, Jinyu., Bi, Huibo., Sui, Yi., Chen, Yanyan., Yu, Haitao. 2021. "Impacts of COVID-19 pandemic on user behaviors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bike sharing: A big-data analysis," *Applied Energy* 285: 116429
- Sun, Feiyang., Chen, Peng., Jiao, Junfeng. 2018. "Promoting public bike-sharing: A lesson from the unsuccessful Pronto system,"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63: 533-547
- Teixeira, João Filipe., Silva, Cecília., Sá, Frederico Moura e. 2022. "The role of bike sharing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 analysis of the mobility patterns and perceptions of Lisbon's GIRA use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59: 17-34
- Vo, Tung., Barbour, Natalia., Palaio, Lori., Maness, Michael. 2023.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keshare usage by rider membership status across selected US citi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77,4: 547-561
- Wang, Kailai., Akar, Gulsah. 2019. "Gender gap generators for bike share ridership: Evidence from Citi Bike system in New York C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76: 1-9

Weng, Min., Ding, Ning., Li, Jing., Jin, Xianfeng., Xiao, He., He, Zhiming., Su, Shiliang. 2019. "The 15-minute walkable neighborhoods: Measurement, social inequalities and implications for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in urban China,"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13: 259-273

"Defining the 15-minute city." CNU, February 8, 2021. <https://www.cnu.org/publicsquare/2021/02/08/defining-15-minute-city>(accessed March 31, 2024)

BikeTown. 2021. "Data" <https://www.biketownpdx.com/system-data>

Blue Bike Share. 2021. "Data" <https://www.bluebikes.com/system-data>

Capital Bikeshare. 2021. "Data" <https://www.capitalbikeshare.com/system-data>

CoGo. 2021. "Data" <https://www.cogobikeshare.com/system-data>

Divvy. 2021. "Data" <https://www.divvybikes.com/system-data>

Healthy Ride. 2021. "Data" <https://healthyridepgh.com/data/>

Metro Bike. 2021. "Data" <https://data.austintexas.gov/Transportation-and-Mobility/Austin-MetroBike-Trips/tyfh-5r8s>

Metro Bike Share. 2021. "Data" <https://bikeshare.metro.net/about/data/>

Nice Ride. 2021. "Data" <https://www.niceridemn.com/system-data>

국 문 초 록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공유 자전거:

미국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왕복 공유 자전거 여행

권기현(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 9개 도시의 공유 자전거 여행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코로나19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내 9개 도시에서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통행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통계분석결과 코로나19 시기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공유 자전거 여행(round-trip bike share trips)이 증가한 패턴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혼합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은 일반적으로 공유 자전거 여행을 감소시켰지만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진 않았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유 자전거 통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9개 도시 모두에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공유 자전거 통행이 증가하였다. 셋째, 오픈 스페이스나 녹지 근처 또는 레크레이션 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공유 자전거 통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통행의 특성을 보였다. 이는 공유 자전거가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여가나 운동 등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공유 자전거, 왕복 통행, 근린 환경, 코로나19, 다중혼합효과모형

Abstract

Bike-Sharing as Entertainment:

Increased round-trip bike share tr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

Kwon, Ki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patterns of bike-sharing trips in nine U.S. cities between 2019 and 2020 and estimate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We used Bike Share trip data from the official websites of its operators in nine cities. We first examined the patterns of bike-share trips between 2019 and 2020 by assessing descriptive statistics. We then employed a multilevel mixed-effect regression model on the pooled data to examine the effects of neighborhood-built environments on round-trip bike-sharing trip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VID-19 outbreak generally led to reduced bike-sharing trips, but not in all cities. For instance, we observed increased bike-sharing trip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Columbus, Ohio. Second, we observed increased round-trip bike-sharing trips (i.e., trips that began and ended at the same bike-share station) in all nine cities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ird, bike-sharing trips in areas with high proportions of green (open) space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round-trip bike-sharing trips. This means that round-trip bike-sharing trips may have entertainment attributes such as leisure or exercise instead of commuting. This study reveals that public bike-sharing can

be useful for entertainment, leisure, exercise, and transport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주제어: bike-sharing, round-trip bike-sharing trip, built environment,
COVID-19, multilevel mixed-effect regression model

서평

|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2016. 북스톤
민규량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2016, 북스톤

민규량*

민
규
량

인구학자가 바라본 미래 문제는 어떤 것일까? 한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명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영태 교수이다. 조영태 교수가 한국의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출간한 책은 총 세 권이다. 『정해진 미래』는 그중 가장 처음 출간한 책이다. 『인구 미래 공존』과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라는 두 권의 후속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된 책인 『정해진 미래』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인구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서로써 가장 충실한 책이기 때문이다. 인구학적으로 미래는 정해진 사회적 방향이 있고, 이것에 따른 변화를 일정 부분 조망할 수 있다는 기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사고의 틀을 배우고, 다소 암울해 보이는 미래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방향성도 모색해 볼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는 프레임은 무엇일까? 경기 동향이나 문화 담론의 변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책은 인구라는 변수를 통한 예측이 무엇보다 정확하다고 말한다. 가임기 여성, 즉 15~49세 여성 집단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태어날 아이의 수는 물론 사망할 집단의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E-mail: grm1002@ii.re.kr)

수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도 동시에 사망률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인구구조는 향후 20년 후에 역삼각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코호트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은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인구정책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과잉 공급인 시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으로 인구가 줄더라도 일자리 경쟁이 절대 쉬워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적 논의를 하는 4장에서는 이민과 해외투자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마지막 5장은 향후 변화하는 인구문제가 연착륙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는 진작에 예견된 일이었다. 1980년대 이후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태어난 아동의 수가 급감했고 그로 인해 2010년 이후 가임여성 코호트 크기가 작아졌다. 게다가 생애 미혼율 즉, 만 49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또 다른 숙제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4인 가족을 기준 삼아 운영되던 각종 사회제도 및 기업전략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개인이 투자전략을 짜는 것까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임을 이 책은 이야기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1~2인 가구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가구 층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또한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결국 대입 경쟁률은 낮아질 일밖에 없다. 초·중·고등학생의 인구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만 20세 이상의 남성 인구 감소에 따라 군에 징집할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든다. 모든 것이 바뀌는 사회에 근본적인 대책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1~2장을 통해 다각도에서 이야기한다.

인구감소가 청년 실업 또는 기성세대의 경제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3장은 고용 규모와 시장 규모의 감소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주지시킨다. 고용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유지된다면 실업률은 급감하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고용 규모도 감소한다면 실업률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기에 고령화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시장의 규모는 줄어드는데 50대가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이한 구조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부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의 인구피라미드는 60대 이상이 더 많은 T자형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은 적어지고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늘어난 사회보장기금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 의존할 것이고 고령 세대에 대한 지출은 인

구 코호트 크기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책은 이를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기존에는 가족이 담당했던 부모 부양의 책임이 사회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세금, 국민연금 같은 제도를 통해 젊은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 세대 간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점차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퇴 시점을 없애면 청년층에게 열려야 할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치적 이유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노동시장이 늙어가니 정치는 보수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화되고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시장은 더욱 박하다. 니트와 프리트 족 외의 대안이 필요한 시대이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당분간은 더 치열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이들이 쓸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고령화된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출산 세대는 규모도 작은 데다 그나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비를 많이 못한다. 이처럼 1인당 소비 총량이 줄어든다면 전체 소비규모 또한 축소되고,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4장에서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이며 인구 총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인구보다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 책에서는 생산인구가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구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더 많으면 “인구 오너스”가 생긴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앞으로의 10년간은 시장이 커지겠지만 그 이후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 빈자리를 이후 세대가 메워줘야 하는데, 인구수도 적고 혼인율도 낮아 동일한 소비패턴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건설사를 살펴보면 향후 30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비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생산인구의 변화도 문제다. 생산인구가 100만 명이던 베이비부머 세대 때와 생산인구가 50만 명인 후 세대의 코호트에서는 우위 산업도 달라지게 되는 데, 이러한 산업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경우,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자 시장규모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인구 규모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구 규모를 늘리고자 이주를 받는 것도 녹록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혼인 이주 여성은 이미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일하러 오는 조선족이 인력수도 급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학생들이 안착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이 입국 결심을 하게 할만한 유인 요소가 우리에게 많지 않다. 즉, 우리는 이민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문제를 풀어갈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정부와 민간, 개인의 지혜와 결단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밟아왔던 인구쇼크를 뒤따르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우리는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5장은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산업을 견인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문제, 해외 인재 유치는 요원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젊은 두뇌들은 유출되는 문제, 숙련공 수급이 어려운 문제, 국내 부동산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예상, 그로 인해 취업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등의 문제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입시 측면에서 가정이 소득과 시간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 졌다거나 생애주기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의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나 고용시장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줄어들었으니, 개인이 뜻대로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기업 측면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변화를 겪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인구변화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 암울해 보이기만 한다. 특히 저자는 우리의 미래가 일본 정도만 되어도 다행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에 이미 고령자 비중(만 65세 이상)이 26%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그런 일본을 보며 우리나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이 인구변화를 겪을 당시와 우리의 상황은 이웃국가 측면에서 다르다. 일본은 고령화를 겪을 당시 주변 이웃 국가들이 젊었기 때문에 수출입이 활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도 작고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 쉽지 않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인구구조도 고령화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의 상품들도 낙관하기 쉽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의 인구정책은 한때는 성공 사례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계획을 멈추는 시기가 너무 늦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등이 활발해지는 시기 등에 맞춰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도입되었어야 하는 시기가 늦어져 이제는 출생률을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저출생 정책은 애초에 복지 측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늦었고 이제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 측면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코호트의 크기를 감안할 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 한명 한명을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즉, 아이들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투자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질적 투자는 가족 단위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부가 이전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자는 개혁적인 수준의 인식개선과 전향적인 직접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작업은 민간에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소 비관적인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한국의 미래가 우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는다.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구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 그에 따라 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크게 세 개의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는 기업의 노하우와 민첩함을 이용하여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인구정책 영역과 사업 분야에 정부

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의 크기를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운사이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무리 출생률이 높아져도 인구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인구의 크기에 따라 이미 태어날 수 있는 출생아의 수가 정해져있어서, 출생률이 1.5~2로 늘어난다고 해도 인구의 다운사이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정해진 미래, 즉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제도와 문화, 인식 등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상수가 되는 10년 후에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두 번째에서 말한 다운사이징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구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마냥 저출생 시대의 암울함을 이야기하는 다른 책과 차별점을 가진다. 인구문제를 단편적 시선이 아닌, 장기적 시각의 코호트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면 저출생 시대가 예견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해 본다.

『도시연구』 회보

- | 『도시연구』 발간연혁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도시연구』발간연혁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07. 10. 15.	제1호	• 기획논단: 인천 경제 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방향』외 3편) • 지역연구: 「버스-도시철도 간 물리적 환승 환경 평가 연구」외 2편	『인천연구』제호 발행
2008. 10. 15.	제2호	• 기획논단: 인천의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과 산업기능 확보방안』외 2편) • 지역연구: 「소비자의 아파트 구매결정요인과 마케팅 전략」외 1편	
2009. 10. 15.	제3호	• 기획논단: 국가경쟁력과 도시브랜드(『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외 3편) • 지역연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외 3편	
2010. 10. 15.	제4호	• 기획논단: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외 3편) • 지역연구: 「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외 2편	
2011. 10. 15.	제5호	• 기획논단: 인천광역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전략(『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외 3편) • 지역연구: 「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외 1편	
2012. 9. 30.	제6호	• 기획논단: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외 2편) •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증」1편	
2013. 9. 30.	제7호	• 기획논단: 해양도시와 해양문화(『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외 2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14. 9. 30.	제8호	• 기획논단: I. 원도심 재생 II. 해양 항만 인프라 확충(『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사례 및 시사점』 외 3편) • 일반논문: 「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 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외 2편	• 『DI 도시연구』 제호변경
2015. 9. 30.	제9호	• 기획논단: 지역자산의 가치와 미래(『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외 4편	
2016. 9. 30.	제10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1 - 섬과 해양의 가치화 방안(『인천 섬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화 방안과 적용』 외 1편) • 일반논문: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외 6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8월 2일) • ISSN 변경
2017. 6. 30.	제11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2 - 문화, 인물, 예술(『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외 6편	
2017. 12.30.	제12호	• 기획논단: 생활문화 활성화(『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외 6편	
2018. 6.30.	제13호	• 기획논단: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청년 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외 6편	
2018.12. 30.	제14호	• 기획논단: 기후변화와 도시(『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외 4편) • 일반논문: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외 3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19. 6. 30.	제15호	- 기획논단: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사회 혁신과 마을』 외 2편) - 일반논문: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 5편	
2019.12. 30.	제16호	- 기획논단: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외 3편) - 일반논문: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외 1편	
2020.6.30.	제17호	- 기획논단: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외 2편) - 일반논문: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 스케일적 연구」 외 5편	
2020.12.30.	제18호	- 기획논단: 여성과 도시(『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외 1편) - 일반논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외 6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11월 2일)
2021.6.30.	제19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외 2편) - 일반논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 4편)	『도시연구』 제호변경
2021.12.30.	제20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 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 외 7편	
2022.6.30.	제21호	- 기획논단: 이주민의 도시(『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외 1편) - 일반논문: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외 6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22.12.30.	제22호	• 기획논단: 초고령사회와 도시(『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외 6편	
2023.6.30.	제23호	• 기획논단: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일산 신도시 도시설계 적용 특성 연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외 6편	
2023.12.30.	제24호	• 기획논단: 도시와 대중교통(『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외 1편) • 일반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외 7편	
2024.6.30	제25호	• 기획논단: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 효능감에 대한 통찰』 외 3편) • 일반논문: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외 5편	

『도시연구』편집위원회 활동

2024. 1. 1. ~ 2024. 6. 30.

회차	일시	안건 및 결정사항
제1차	2024.1.10.(수)	• 「제26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공모: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발표자 선정 심의
제2차	2024.2.22.(금) 10:00~12:00	• 2024년 편집위원회 재구성 - 학술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존 편집위원 위임 - 전공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학 분야 신규 편집위원 위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 결과보고 - 판정결과: 「KCI 등재 유지」(2029년 재인증 평가 예정) • 상반기 도시연구 학술행사 개최 - 주제: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 - 일시: 2024년 4월 3일(수), 오전/오후 개최(온라인 실시간 Live) • 2024년 하반기호(통권 제26호) 기획논단 주제선정 • 2024년 상반기호(통권 제25호) 서평도서 및 필진 추천
제3차	2024.4.19.(금)~ 4.26.(금)	• 논문심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건
제4차	2024.6.13.(목)~ 6.17.(월)	• 통권 제25호 기획논단/일반논문 게재편수 및 게재 논문 확정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2024. 1. 1. ~ 2024. 6. 30.

회차	행사내용
제26회 도시연구세미나	[제26회 도시연구세미나]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0:00~16:30 [온라인 화상회의/생중계] - 주제 : “교육 대전환시대의 도시” - 인사말씀 : 이왕기(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1부] 대학원생·신진 연구자 세션 세션사회: 정혜은(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1 : “지역, 계층 간 사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 변화 분석” • 발표 : 현지우(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통합과정) • 토론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주제발표 2 : “인천 교사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 발표 : 김태훈(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전문위원) • 토론 : 김자영(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연구팀장)
	■ 주제발표 3 : “대학입시와 관련한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과 서열화 담론” • 발표 : 김지희(서울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전공상담교수) • 토론 : 홍주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2부] 전문가·중견 연구자 세션 세션사회: 민혁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4 :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의 정책적 수용성과 발전방안 모색” • 발표 : 신용덕(인천TP 전략정책팀 수석연구원) • 토론 : 서봉만(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회차	행사내용
제26회 도시연구세미나	■ 주제발표 5 : “등교 특성 등 학교 주변의 환경 특성에 따른 학업 성취도 영향 연구” • 발표 : 정진도(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조교수) • 토론 : 김유정(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주제발표 6 : “타지역 대학진학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 발표 : 양은모(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토론 : 정수환(KDI 노동시장연구팀 부연구위원)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도시연구』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도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도시연구』라 칭한다.
2. 『도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 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 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상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

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Ⅲ.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도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한글·영문),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번호(E-메일 주소 포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의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Ab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5.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6. 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7.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로 한정한다.
8.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국문 초록은 600자(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10. 모든 원고는 본지가 제공하는 원고작성용 한글 양식 파일(신국판 152×225)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IV. 논문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저자표기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국문저자명의 오른쪽 위에 *를 입력하고, 각주에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저자의 현재 소속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인 저자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E-mail: paper@ii.re.kr)

(2)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3)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표와 그림에 있는 글자와 숫자는 선명해야 하며,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본문의 인용문헌과 각주,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인용문헌

(1) 본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이름, 출판년도, 인용한 쪽을 적어 표시한다. 국문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표기하며, 중국과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저자명의 표기 방법에 준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며, 혼란을 주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4)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5)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단독연구 : 손정목(2007)에 따르면 …, Smith(1992, 94)는 …, 이들의 연구(김용창 1997; 송도영 2009, 96)는 …, …라고 보고 있다(윤호영 2001; 조한혜정 2011).
- ② 2인연구: 서현진·민병일(2001)에 의하면 …, Abrams and Jajodia(1992)는 …, …라고 주장하고 있다(Gilbert and Gubar 1978, 1-25; Murphy 1988, 39-52).
- ③ 3인 이상 연구 : 김만중 외(2001)는 …, Avram et al.(2009)는 …, 라고 지적인 바 있다(Farmwinkle et al. 1985, 233).
- ④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동아일보 2017/2/15). …(월간경향 2009/2, 233)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신문기사, 인터넷 웹 검색자료를 기재한다.
- (2)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하고, 국문 및 동양문헌의 서명에는 겹낫표(『』), 서양문헌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국문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홑낫표(「」)를 표기한다.
-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4)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5)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6) 인터넷 검색 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 주소와 검색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웹에 공개되어있는 전자책은 서명 옆에 “[eBook]”을 표기한다.
- (7)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 단행본 및 보고서, 논문

- 김석철. 2011.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서울: 돌베개.
- 홍익표·진시원. 2015.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서울: 오름.
- 조영무·최용환·이준호. 2017.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 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 인천광역시. 2016.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옥련·허철수. 2011. 「청소년기 부모의 자녀교육과 갈등 척도 모형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07-2028.

② 영문 단행본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③ 영문 논문

-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 Partz, M., Mentro, J. P., Lauter, P., Scarcelli, T. A., Alexandrowicz, M. P., Banshi, P. P., ...Sauls, C.

E. 2008. "A qualitative study of modern Native American dance." *Journal of Dance Methodology* 12(3): 12-21.

④ 번역서

베버, 막스(Weber, Max).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⑤ 신문기사, 주간지, 월간지 등

이은상. "여성의 사표 신사임당." 동아일보. 1993.7.17: 5면.

안병만.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시련." 월간중앙. 1991(8): 11-18.

⑥ 인터넷 웹 검색자료

"내항 재개발 지지부진 '상상플랫폼' 우선추진." 경인일보. 2016.10.3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30010009866>(검색일: 2017년 7월 20일)

오동근. 1996. "한국 도시정책의 미래." <http://www.idi.re.kr/researchRPT/list.do?tab=7>(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 <http://www.oclc.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검색일: 2003년 2월 10일)

김영범·신동호. 2001. 『북한 문예론』[eBook]. 서울: 톨스토이.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검색일: 2001년 11월 8일)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accessed February 28, 2010)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2010.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11):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5. 초록 작성법

-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성, 이름)-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6. 사사표기 방법

- 1) 사사(謝辭) 표기 및 연구비 출처는 논문 첫 페이지 제목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투고접수일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은 논문 첫 장 각주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해도 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1979년 3월 창설되었다. EMS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사용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필요 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뉴욕, 치앙마이, 타간로크(Tagantrog, 러시아 남서부의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도시)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게재 논문 및 순서 결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음의 주제 분류와 순서를 따르며, 같은 주제분류 내에서는 심사 결과 등급 순을 따라 게재순서를 정한다.

(1) 도시계획, 도시환경

- (2) 문화관광
 - (3) 행·재정, 교육, 사회복지
 - (4) 지역경제
 - (5) 교통물류
 - (6) 동북아, 국제
- 2)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게재편수는 연간발간계획에 의거하며, 기획주제에 부합하는 일반논문을 기획논문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발간계획의 게재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논문 게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논문은 저자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내 연구진이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 원고료의 50%를 지급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5. 저작권
- 1)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6.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연구원에서 정한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시연구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해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II.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도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또한 『도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도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III.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1. 편집위원장은 인천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IV.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도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도시연구』 발행의 기획,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천, 심사 결과의 추진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학술간사는 기획논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공모전, 학술행사 등의 주제를 기획하고, 해당 분야 필진 추천 및 섭외를 담당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한 심사결과의 통보, 『도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도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V.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과 위원, 학술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위원을 추천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3. 위원장의 부재가 생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원장의 허락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다.

VI.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해외 거주 편집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VII. 회의비 지급

1. 편집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외부 위원(인천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1년	8월	4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I. 심사대상

1. 『도시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도시리포트 및 서평과 같은 비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II. 심사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본을 재심사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A, B, C, D)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7. 재심사의 경우, 동일한 심사 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심사판정이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III.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IV.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 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연구의 검토
 -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연구윤리 준수의 적절성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

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V.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VI. 논문심사 판정 기준

1. 논문심사의 판정은 1차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판정하며,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게재 불가’의 2가지로 판정한다.

■ 1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3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2) 수정 후 게재(평점 평균 3.0점)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B로 평가한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평점 평균 2.0점 이상 2.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명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B,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4) 게재 불가(평점 평균 1.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C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C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1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8	B	B	C	8	2.7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게재 불가	
17	C	C	D	5	1.7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 2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0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2) 게재불가(평점평균 2.0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2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2	A	A	D	9	3.0		
3	A	D	D	6	2.0	게재불가	
4	D	D	D	3	1.0		

Ⅷ. 소요기간

-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이내로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 보완: 1차 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수정결과표와 함께 기존 심사자 3인에게 확인 요청을 보내 원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 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다시 제출한 논문이 수정 보완 요구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2차 이후에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의견서 작성이 지체될 경우, 투고자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배경

제1조(제정 배경)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도시연구』를 발간한다. 『도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도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을 준용한 것으로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

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로부터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구원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II.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3조(사회적 역할과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5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 환경 연구)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간 대상 연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심의 통과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최초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10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11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3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III. 윤리위원회

제16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과 권한)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

투고논문이나 간행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를 받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해당 연구자(이하 '해당 연구자'라 한다)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한다.
 - 1) 외부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위원회 소집 전에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 심사위원을 재위촉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논문과 제보내용,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 제기서류, 해당 연구자의 이의 제기서류를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1회에 한해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1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

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20조(제재조치)

인천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IV. 저자 윤리규정

제2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재투고)

『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 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6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

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VI.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31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2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이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3년 9월 16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4월 4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7월 20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3월 2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2년 2월 17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른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국내 편집위원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김선훈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조교수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정해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편집간사

김혜영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통권 제25호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발행 2024년 6월 30일

발행인 박호군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28

홈페이지 www.ii.re.kr

편집·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ISSN 2765-7205
